



특집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두레생협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의미

지역사회에서, 생활인이, 만들어가는 소박한 복지

나눔과 협동이 건강을 만든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아이쿱생협

일본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좌담회 :

지역 활동가들이 보는 협동조합의 나눔 활동

이슈 종편 방송을 어찌 할꼬?

사람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반값 등록금'과 교육복지 실현!

한글서체
한글서체

생협평론 2011 겨울 (5호)

펴낸이	이정주
펴낸곳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편집위원	김아영 이선옥 이성선 정설경
편집위원장	염찬희
편집디자인	이경원 (스튜디오 보싸)
펴낸날	2011년 12월20일
주 소	서울시 구로구 항동 1-1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2호
전 화	02) 2060-1373/4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협평론 2011 겨울 (5호)

길잡이

협동조합님, 지역사회 중심이 되어 주세요	염찬희 (편집위원장)	4
------------------------	-------------	---

특집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김찬호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7
두레생협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의미	권순실 (생협전국연합회 전 회장)	20
지역사회에서, 생활인이, 만들어가는 소박한 복지 -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협동복지사업	박제선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기획부)	33
나눔과 협동이 건강을 만든다 - 의료생협	조병민 (대전민들레의료생협 전무이사)	39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	정규호 (모심과 살림연구소 연구실장)	50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아이쿱생협	김대훈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장)	62
일본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번역: 김연숙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78
協同組合と地域社会への貢献	北川太一 (福井県立大学経済学部 教授)	89
좌담회 지역 활동가들이 보는 협동조합의 나눔 활동	김이창, 이진홍, 이혜정, 정경섭, 김아영	99

이슈

종편 방송을 어찌 할꼬?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114
사람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반값 등록금'과 교육복지 실현!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123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35
르뽀		
강은 가르지 않고 막지 않는다	서분숙 (르뽀작가)	136
돌발논문		
지속 가능한 사회는 행복한 노동에서	하중강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장)	144
서평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차형석 (시사인 기자)	154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김영미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159

협동조합님,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주세요

염찬희 (편집위원장)

“지역의 발전 없이 회사의 발전도 없다.” 모 대기업이 벌여온 나눔캠페인의 바탕에 있는 경영철학이란다. 기업이 자신과 고객이 속해있는 지역 사회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돌려주는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라고 한다. 지역 사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기업들보다는 이런 활동을 하는 기업이 분명히 훌륭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자기 회사의 물건과 서비스를 사 줄 소비력을 갖게 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 의심하곤 한다. 나는, 속이 배배 꼬여있나 보다.

솔직히 나는 지역에 별 관심이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지역주의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지를 보아온 탓에 반지역주의로 무장을 하게 되었고 그 어떤 지역에서건 내게 특수한 지역성을 씌우려할 때 거부해왔다. 돌아보면, 나는 지역주의와 지역에서의 현실 삶을 구분하지 못했고, 그런 나의 생각의 천박 때문에 나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나와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듯하다.

이제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자본 축적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기업이 아닌 내 가족, 내 이웃과 함께 탈 없이 살고자 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져와야 한다. 건강한 생각의 보통 사람들이 삶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조직한 협동조합이야말로 구성원들의 현실 삶의 근거지인 지역사회를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지역사회가 떠나야 할, 버려야 할 곳이 아니라 나와 내 이웃과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협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보자는 의도로 이번호 특집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을 기획했다.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들을 지역 활동가들은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좌담회, 일본의 협동조합들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알게 해주는 키타가와 교수의 논문, 그리고 여성민주회생협, 의료생협, 두레, 한살림, 아이쿱 등 한국의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언제부터 얼마나 고민하고, 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실천 전략들을 각자 어떻게 다듬어 왔는지를 다룬 글들을 포함한 총 8개의 글이 이번 호를 이전보다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지역사회의 범위는 무한정 확대될 수도 있고 무한정 축소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다른 지역사회와 나의 것을 경계 짓고 나의 것만을 고집하는 우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소심해서 굳이 사족으로 붙이게 된다. 



특집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 두레생협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의미
- 지역사회에서, 생활인이, 만들어가는 소박한 복지
- 나눔과 협동이 건강을 만든다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아이쿱생협
- 일본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좌담회 :

- 지역 활동가들이 보는 협동조합의 나눔 활동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김찬호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1. 노인들의 식사가 부실해진 까닭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선진국에서도 끼니를 잇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나 식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중소 도시에 사는 노인들 가운데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장보기의 어려움 때문이다. 집 근처에 슈퍼마켓들이 있었을 때는 5분이면 다녀올 수 있었는데, 그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서 이제는 30분 정도 걸어야 다 와야 한다. 신체가 허약해진 독거노인들에게 그것은 무리다. 그래서 식사가 점점 부실해지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음식 사막’ (food desert)이라고 한다. 그리고 생필품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이들을 가리켜 ‘장보기 난민’이라고 부른다. 이미 1980 년대에 영국에서 경험했던 일이다. 그 배경도 일본과 거의 비슷하다. 동네의 슈퍼마켓들이 폐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형 매장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대자본의 힘으로 많은 물량을 취급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업소들을 작은 가게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다. 그런데 그런 매장이 들어서는 곳은 기존의 시가지가 아니라 외곽의 값싸고 넓은 땅이다. 어차피 승용차를 타고 와서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구 도심지에 사는 노인들은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로 치달는 한국은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나마 보존되어

있던 마을을 완전히 해체하고 고층 아파트를 세워 익명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는 재개발을 마구잡이로 행해왔다. 옆집에 사는 이웃끼리 서로 알지 못하고 구멍가게나 슈퍼마켓이 사라져 버린다. 노인들은 집 바깥에 나와 느긋하게 쉬거나 동네를 배회하기 어렵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고립과 소외는 깊어지고, 운동 부족으로 육신은 더욱 쉽게 노쇠해지며, 말벗과 역할의 부재로 치매 같은 질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굶주림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쳐 온 산업화의 한 가지 결과가 ‘음식 사막’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이러니다.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가 부실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음식만이 아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GNP라는 숫자에 현혹되어 그 지표에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우리의 일상은 서서히 무너져간다.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시대에 우리의 기나긴 노후 생활을 안전하고 넉넉하게 떠받쳐 줄 생활공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외형의 성장으로만 내달려온 속도를 잠시 늦추고 찬찬히 따져볼 일이다.

음식 사막의 문제에 봉착한 영국의 어느 도시에서는 고민 끝에 절묘한 해법을 내놓았다. 상점들이 문을 닫은 썰렁한 동네를 재개발하여 인근 대학의 부속 기숙사를 세운 것이다. 갑자기 몇 천 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를 오가게 되니 자연스럽게 상권이 살아났다. 다시금 작은 가게들이 들어서 노인들이 장보기가 쉬워졌다. 그리고 은퇴자 마을처럼 분위기가 침체되었던 지역에 활기가 돌아 노인들의 생활도 밝아졌다. 일본에서도 ‘마을’을 회복하는 방향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 알고 어려운 일들을 서로 도와 가면서 풀 수 있도록 공동체성을 되살리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경제 위기는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난 2~3백년 동안 굴러온 산업문명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새로운 단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징후로 읽어야 한다. 대안은 어디에 있는가? 지속가능한 삶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지역과 거기에 깃드는 생활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되살려내는 것이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다.

그러한 진단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본주의의 전개는 지금 어느 국면에 와 있고, 왜 지역이 다시금 거론되는가? 그리고 생활협동조합은 그러한 흐름에서 어떤 과제를 떠안을 것이며, 그것을 풀어나가는 실행 파일은 무엇인가?

2. 생산의 과잉으로 인한 빈곤과 생애 리스크

“따블!”, “따따블!” 한 때 도시의 늦은 밤에 택시를 잡으려는 승객들이 기사들에게 외치던 말이다. 택시가 많이 부족한 탓에 승객들은 지정된 요금의 두 배, 세 배를 불렀다. 그것도 모자라 합승도 마다할 수 없었다. 당시 택시 기사들은 참으로 느긋했다. 언제 어디서든 손님들을 쉽게 태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택시뿐만이 아니다. 경제 전반에 걸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수출 위주의 산업체제에서 내수 시장을 겨냥한 생산은 크게 확장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고도 압축 성장의 결과 사람들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공급이 딸리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소비사회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일부 물건이나 서비스 영역에서 품귀 현상이 빚어졌고, ‘따따블’은 그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런 호시절은 오래 가지 못했다. IMF 구제 금융 사태를 거치면서 경기가 추락하였고, 수많은 실직자들이 자영업 부문에 뛰어들어 과당 경쟁이 벌어졌다. 그 결과 내수 시장에서 구매력 감퇴로 인해 수요는 위축되는 반면, 잉여 노동력의 쇄도로 인해 공급은 빠르게 확대된 것이다. 게다가 각종 기술 혁신과 자동화를 통해 제조업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중국 등 저개발 국가들이 저임금을 경쟁력으로 산업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수많은 물품들이 싼 가격에 공급되기 시작했다. 그러한 생산의 과잉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역설적으로 경제를 점점 빈곤화로 내몬다.

그러나 생산의 과잉은 화폐로 매개되는 시장 경제에 국한된 현상일 뿐이다. 화폐로 환산되기 어려운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비시장 경제에서는 정반

대로 점점 품귀 현상이 벌어진다. 즉, 예전에는 돈이 없어도 주고받을 수 있었던 도움들을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어나 김장을 할 때 친척들끼리 일손을 거든다거나, 독거노인이 몸져누워 있을 때 이웃이 식사를 챙겨드리는 등의 호혜적 경제가 점점 위축된다. 그만큼 사람들이 시간과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노동 시장에 뛰어들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돈이 되지 않는 일에 에너지가 투입되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시장 경제에 뛰어들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공급의 과당 경쟁이 일어나는 한편, 비시장 영역의 관계망은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 생활은 점점 고비용 구조로 변해간다. 예전에는 돈을 매개로 하지 않고 품앗이나 증여의 형태로 이뤄지던 일들이 이제는 돈 없이는 해결되지 않게 된 것이다. 시장의 과잉과 비시장의 결핍이 악순환을 이루는 가운데 생활은 점점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열심히 일을 해도 삶이 윤택해지지 않는다. 설령 돈을 좀 번다해도 생활은 알뜰하고 가냘프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다는 위기의식이 만연한다.

그러한 위기는 생애 경로의 관점에서 더욱 첨예하게 드러난다. 산업화가 닳을 올리고 고도성장을 한창 구가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여러 모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다. 경제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진입은 간단하게 이뤄졌다. 학력이 낮으면 낮은 대로 들어갈 일자리가 널려 있었다. 그래서 십대에서 이십대에 걸쳐 직장을 잡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기 시작했다. 임금은 높지 않을지언정 정규직으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었고, 직장을 그만 둔 뒤에 자영업 전환도 어렵지 않았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8년 금융 위기 이후 고용시장의 변화는 매우 급격하게 이뤄졌다. 청년들의 고학력화와 함께 노동시장 진입이 점점 늦어지고, 그나마 비정규직이 급증한다. 정규직으로 들어가도 퇴직 연령은 점점 빨라진다. 그리고 수명

은 꾸준히 늘어났다. 생활의 노동 시장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는데 그에 비례해서 고용의 기간은 짧아지고 점점 불안정해진다. 그리고 그곳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거기에서 탈락했을 때 생활을 떠받쳐주는 사회적 안전망도 부실해진다.

결과적으로 생애 전반에 걸쳐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다. 엄청난 교육비와 치열한 노력을 투입해 높은 학력과 각종 자격증을 취득해도 취업이 어렵고, 천신만고 끝에 취직을 해도 언제 자리가 없어질지 모른다. 다행히 어느 정도의 퇴직금을 받아 직장에서 물러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만 절반 이상이 실패로 끝난다. 예전 같으면 무일푼의 노후라도 의탁할 자녀와 가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 여의치 않다. 충분한 노후 자금으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식 등 금융 투자를 해보지만, 엄청난 손실만 보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기 십상이다.

3. 노동집약적 일거리들이 되살아날 수 있는 영역들

근대 산업화는 생산 중심으로 사회를 재편하면서 제반 자원을 시장 경제에 동원해온 과정이었다.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전례 없는 물질의 풍요를 얻으면서 생활은 놀랍게 개선되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생산의 논리가 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고, 사회의 제반 역량을 생산 쪽으로 과도하게 투입한 결과 생활 자체가 위기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으로 과잉 공급과 일자리의 부족, 다른 한편으로는 삶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근원적 토대의 균열이 진행된 것이다.

기존의 경제 패턴은 지금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 GNP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은 수요의 포화와 공급의 과잉이 만성화되면서 수정이 필요하다. 이제 삶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전환해가야 한다. 그 핵심은 생활의 복원과 창조에 있다. 시장 경제 중심으로 치우치면서 공백 상태가 된 생활 세계에서 필요한 일거리들을 찾아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다

행히 그 일거리들은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성격의 것들이다. 그래서 이른바 ‘노동의 종말’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지금, 대안적인 일자리로 잠재력을 갖는다.

생활 세계는 가정과 지역이라는 공간을 근거로 성립한다. 그리고 그 영역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킨다. 밥을 지어 먹고 잠을 자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아플 때 돌봐주는 일들이 거기에서 수행된다. 그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생활 세계의 의미는 그러한 생물학적 차원 이상으로 나아간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마음의 힘을 크게 필요로 하고, 그것은 상당 부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충족된다.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가족과 이웃은 소소한 기쁨을 나누면서 정서적인 에너지를 담보하는 절대적 거점이었다.

살림과 돌봄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 화단 가꾸기 등은 기계가 대신해주기 어렵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복지, 육아, 교육, 문화, 생태 등에 관련된 활동은 사람이 직접 관여하는 수공업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 집약적인 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바로 여기에 대안적인 경제의 돌파구가 있다. 대량생산 체제에서 부품으로 전락하고 자동화 시스템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밀려난 인간의 가치가 재생되면서 삶에 꼭 필요한 가치를 생산해내는 가능성이 보인다.

물론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지금 이 영역조차 자본이 진입하여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그리고 관련 직종에 맨몸으로 뛰어들어 생계를 잇는 이들도 많은데, 가사보조원이나 간병인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그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 자신이 생산하는 서비스를 자신이 구매하지는 못한다. 파출부가 파출부를 부르지 못하고, 간병인이 아플 때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복지 분야에서 공공의 재원도 투입되어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복지사들 역시 그들 자체가 복지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만큼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서비스의 생산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비자 내지 수혜자들이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 지금 복지의 현실이다. 앞으로 복지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테지만, 그 이상으로 그 분야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다. 다른 한편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이 계속 늘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종사자들의 임금이나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는 복지 이외에도 문화나 교육 그리고 생태 등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4. 저성장기, 협동으로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시대

돌봄, 문화, 생태, 교육 등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일거리들은 시장과 공공 부분만으로는 노동과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인 노동이고, 제도적인 규격 속에서는 그 본질이 변질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한 일들은 비화폐적이고 비관료적인 동기에서 영위될 때 충분한 가치가 생성되고 발현된다. 시장과 행정의 틀 속에서도 그러한 동기가 어느 정도는 살아 움직일 수 있다. 종사자들이 자신의 일을 통해 타인에게 이로움을 끼치고 기쁨을 나눈다면 말이다. 그러나 그런 동기의 원천은 아무래도 비시장, 비국가의 자발적인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 지역사회의 관계망 그리고 시민사회의 보편적인 비전이 그것을 매개한다.

특히 지역사회가 중요하다. 마을이 복원되어야 한다. 왜 그런가. 경제가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가족과 기업이 두 축이 되어 저마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고, 국가가 그것을 아우르면서 성취동기를 부추기고 사회의 기본적인 통합과 질서를 담보했다. 파이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사적인 이윤 추구에 충실해도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부(富)가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사회적으로 약간 뒤쳐지는 사람들에게도 상대적인 시차가 있을 뿐 대체로 웰빙의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절대 빈곤을 극복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우선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각

개전투해도 부작용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처럼 급격하게 도시화가 이뤄진 사회에서는 산업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전통적인 가족이나 마을의 호혜 영역이 상당부분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경쟁의 부정적인 결과들을 어느 정도 완충하고 흡수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고도성장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저성장 단계로 급커브를 돌게 된 이후의 상황은 확연하게 다르다. 이제는 개인 내지 가족 그리고 기업을 중심으로 한 맹목적인 이윤 추구가 플러스보다 마이너스를 더 많이 초래하게 된다. 시장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만으로는 사회의 제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니, 대기업의 골목 상권 장악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시장의 논리가 그나마 보존되어 온 사회의 기반을 꺾어버리기까지 한다. 기존의 시장이 포화상태가 된 상태에서 새롭게 틈새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이 결국 생활에 밀착된 지역경제 영역을 잠식하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가 팽창하는 단계와 수축하는 단계의 차이는 극명하다. 후자의 상황에 접어든 지금, 가족과 기업에서 비롯되고 그 차원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제반 문제들이 다양한 형태로 부각되고 있다. IMF 이후 여러 지역에서 시도되어온 마을 만들기는 바로 그러한 과제들을 풀어내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생협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인간에게 생활은 본질적으로 협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산업자본주의가 팽창하면서 그 상당 부분이 시장적 거래로 대체되었다. 이제 협동을 도모하면서 생활을 재건하거나 창조해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생활상의 과제를 다룬 협동조합 운동은 먹을거리, 육아 및 교육, 의료, 신용대출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 운동들은 점점 커지는 시장의 지배력에 맞서 독립적인 사회 경제적 영역을 수립하여 생활 세계의 자율성을 유지해왔다. 앞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협동조합이 새롭게 도전해볼만한 생활의 영역은 매우 넓다. 그 가운데 복지와 문화와 생태, 가사 경영 등에 관련된 일거리들을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영역들은 서로 긴밀하게 맞물리면서,

일거리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5. 가사 경영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상

가사 경영을 협동적인 방식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지금 우리의 가정은 상반된 변화를 겪고 있다. 한편으로는 가사의 내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분담할 가족 구성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선 소비의 품목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갈수록 전문화된다. 휴대폰에 적응될 만하니 스마트폰이니 아이패드니 하는 신기술이 등장해 기기를 새로 장만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지만 어떤 기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신용카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은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와 혜택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현혹한다. 연로하신 부모를 위한 여행 상품을 알아보려 하는데 광고만 보아서는 도대체 분별이 되지 않는다. 정수기를 들여놓아야 할 것 같은데, 뉴스를 보니 거기에서 오히려 물이 더 오염된다는 보도를 듣고 망설인다.

이처럼 생활을 영위하면서 정보를 제대로 습득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가족을 이뤄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줄어든다. 현재 한국에서 일인(一人) 가구가 25%에 육박하고 있고, 매우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네 집 가운데 한 집이 혼자서 살고 있고, 이인(二人) 가구의 비율과 증가 속도도 그와 비슷하다. 반면 4인 가구와 5인 가구는 급감하고 있다.(3인 가구는 거의 변화가 없다) 세대 구성원의 수가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가족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바깥에서 행하는 일이나 공부가 점점 늘어나면서 집에서는 최소한으로만 머무는 것이다. 구성원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상황에서, 점점 복잡해지는 가사는 버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원리는 간단하다. 혼자 사는 가정에 비해 열 명이 사는 가정이 가사의 양이 열 배가 많은 것이 결코 아니다. 기껏 두 세배 정도일 것이고, 그나마도 구성원들이 분담을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집은 오히려 가벼울 수도 있다. 그리고 저마다의 강점을 발휘하기 때문에 한층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가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가족의 거주 여건은 반대로 가고 있다. 그 결과 부실한 정보에 입각하여 내린 결정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런 저런 물건이나 시설이 고장이 났을 때 손볼 사람이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애물단지로 방치되어 있다가 결국 아깝게 폐기되기 일쑤다.

이러한 문제를 각 가정을 넘어 지역의 차원에서 협동 체계를 구축해서 해결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가정 재무 컨설팅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보험 설계사에게 노후의 준비를 의뢰하는 것은 함정이 많다. 아무래도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숨기므로 필요나 능력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기 쉽다. 하지만 생협의 재무 컨설턴트가 있다면 각 가정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최적화된 금융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 각 영역 별로 카운슬링이 가능할 것이다. 그 한 가지로, 통신 기기를 구입하거나 이용 요금제를 선택할 때 전문가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예를 들어 인터넷 통신망과 유선 전화와 유선방송 등을 패키지로 묶어서 싸게 책정된 요금체계를 각 통신사마다 내놓는데, 어떤 것이 최상의 상품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각 가정 구성원들의 생활 패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각 집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가 있을 수 있다. 생협이 그러한 기능을 확보하여 조합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가사의 많은 항목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전제품과 가내시설 종합 수리 센터 같은 것을 두어 자잘하게 고장 나는 것을 신속하게 고쳐줄 수도 있다. 자전거, 의자, 우산, 세면대, 컴퓨터, 선풍기, 전등, 환풍기, 문고리 등 기존의 AS 센터에 의뢰하기 어려운 물건이나 시설들이 집안에는 많이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족 구성원들이 많았을 때에는 한 두 사

람이라도 손재주가 있으면 척척 고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인력도 없고 점점 바빠지는 삶 속에서 그 하나하나를 연구하면서 관리할 여력도 없다. 그런데 믿을만한 전문가가 있어서 요청하면 언제든 방문 출장 수리를 해준다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화초 전문가는 어떨까. 집집마다 화분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가꾸지 못해 고사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바쁘거나 게으른 탓에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식물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거나 잘못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가사의 수많은 아이템 가운데 화초는 뒷 순위로 밀려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만일 생협에 화초 전문가가 있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가입된 가정을 방문하여 화분을 보살피고 분갈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준다면 집 안에 죽은 나무가 방치되지 않을 것이다.

6. 삶의 유기성과 지속성을 담는 지역사회

이런 상상을 해보자. 청소년들은 지역에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준비한다. 별다른 배움의 동기도 없이 대학으로 묻지마 진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 외의 활동을 통해서 뜻밖의 진로를 발견하기도 한다. 통신 기기에 능숙한 어떤 소녀는 조합원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자문을 해주거나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출동하여 해결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어릴 때부터 꽃과 나무를 좋아하다가 전문대학에서 원예를 전공한 어떤 청년은 생협에 취직하여 식물 컨설팅을 한다. 금융권에서 일하다가 명예 퇴직한 아저씨는 기업의 교묘한 판매 수법을 숙지한 입장에서 가게 재무 설계사로 변신하여 지역에서 활동한다.

관건은 그러한 일거리가 일자리로 성립할 수 있느냐다. 이를 위해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성장기에는 얼마나 많이 버느냐 보다 얼마나 낭비를 줄이느냐가 경제적 풍요의 열쇠가 된다. 우리의 가정을 잘 들여다보면 힘들게 벌어서 구입한 상품과 서비스가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많

다. 일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의 피로를 달래느라 쇼핑하면서 사들인 물건들, 홈쇼핑으로 충동 구매한 서비스 상품들이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들이는 데 전력을 쏟는 동안, 여기저기에서 생겨나는 손실을 알아채지 못한다.

그러한 누수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막아내는 것은 그 자체로 부가가치의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각 개별 가구 차원에서 하기는 너무 품이 많이 든다. 하지만 적절한 규모에서 수요를 모아내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지금 우리의 경제를 보면 한편으로 너무 광역화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개별화되어 있다. 생산은 글로벌한 시스템 속에서 조직화되는데, 소비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각각 이뤄진다. 이제 생산과 소비를 지역 가까이에 끌어들이면서 그 거리를 좁히고, 규모의 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실질적인 부(富)를 창출하고 향유해야 한다.

이제 생산성의 정의가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최소의 자본과 노동과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 산물을 뽑아내는 노동 생산성이 효율을 측정하는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똑같은 재화를 얼마나 충분하게 사용하면서 그 가치를 누리느냐는 자원 활용성이 중요해진다. 그것을 인식한다면 집안의 물건을 수리하고 화초를 돌봐주는 노동,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진단하고 조언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사람들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투자에 가까운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역의 내부 순환 경제를 성립하고 유지시킴으로써 젊은 세대나 퇴직자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화는 공동체를 해체하여 개별적인 가구들로 분리시키고 그 안에서 다시 각 소비자들로 분리시킴으로써 시장을 확대했다. 그러나 그러한 단절이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지고 있다. 이제는 다시금 사회를 수립함으로써 가치를 생성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생산의 논리에

식민화되어온 생활 세계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거기에 존재의 뿌리를 내리면서 삶의 유기성과 지속성을 회복해야 한다. 협동과 신뢰의 그물망 속에서 생활의 토대를 쌓고, 소통하고 창조하는 가운데 ‘사는 맛’을 몸과 마음으로 만끽할 수 있는 세상을 지역사회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두레생협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의미

권순실 (생협전국연합회 전 회장)

마음이 세계를 구한다

“진정한 인도는 몇 안 되는 도시에서가 아니라 70만개의 마을에서 발견될 수 있다. 마을이 붕괴한다면 인도도 붕괴할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

2008년의 국제적 금융위기는 거품이 빠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20:80도 아닌 1:99의 사회로 치닫게 한 국제금융자본과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물결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소수의 탐욕과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운동(시위)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물음에는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돈벌이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파괴할수록,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범지구적으로 거칠게 다가올수록, 역설적이게도 삶의 근거지 내지 운동의 근거지로서 ‘지역 또는 마을공동체(communitv)’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¹은 분명하다.

왜 지역 또는 마을공동체가 대안의 근거지가 되어야 하는가?

기존의 국가주의 패러다임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면서 ‘서로를 지탱해주는 사회’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상황은 오히려 무한경쟁, 시장만능주의의 신자유주의체제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는 가속 폐달을 힘껏 밟고 있는 모습이다. 내부적으로도 국민의 바람

¹ 강수돌, 『살림의 경제학』, 2009.

을 실현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기회와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다. 정치의 근간이라고 하는 정당에 기초한 대의제 민주주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받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생활 정치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지역을 만드는 것,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간의 근원적 관계를 회복하고 보살핌의 망이 촘촘히 엮여있는 지역공동체를 건설해가는 것이 ‘서로를 지탱해주는 사회’를 실현해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한다.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협동조합의 제 7원칙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승인한 정책에 따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한다”라고 되어 있다. 1995년 ICA 100주년 기념 대회 및 총회(맨체스터)에서 채택된 ‘협동조합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성명’을 통해 새롭게 원칙으로 삽입된 조항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조에 의한 상호부조조직이라는 전통적 해석에서 확장하여,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공헌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새로운 원칙을 채택하게 된 배경이다.²

또한 초창기의 협동조합이 경제적 약자라는 조건에 놓인 조합원이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확보에 일차적 목적을 두었다면, 21세기의 협동조합은 현재의 사회시스템이 개발과 성장제일주의로 치달을 때 지구는 파멸에 다다르며, 인간사회 역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사회의 구현을 과제로 두고 있다는 점³을 고려하여 이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7개 원칙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생협

² 쿠리모토 아키라 지음, 주영덕·김형미 옮김, 『21세기의 새로운 협동조합원칙』, 생협전국연합회, 2009. 이재욱 전 생협전국연합회 사무총장은 일본의 생협법 개정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했던 한국 생협들의 실무책임자들이 일본생협연합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같이 나눠보기로 함으로써 이 책의 출판이 이루어졌다고 서문에서 말하고 있다.

³ 김기섭,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조직』, 2007.

은 조합원들이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속시키도록 함께 살고 함께 즐기는 삶을 실현하게 한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생명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생협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⁴

아래에서는 두레생협연합회 소속 생협들의 지역사회에 기여한 몇몇 사례⁵들을 살펴보고 생협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 지역사회와 관계하는 방식은 어떠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생협과 지역사회 관계 맺기 사례⁶

1. 푸른생협

1-1. 인천에 있는 푸른생협은 1993년 창립한 후 두레(생활재 공동구입반)를 주요 활동 단위로 하여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폐식용유 수거운동, 재활용비누 만들기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50여 개의 두레(보통 4명~8명)들은 관심 가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활동을 하곤 했는데, 두레원을 중심으로 자치부녀회를 구성하여 분리수거 봉사, 마을 가꾸기, 아나바다 장터 등을 열기도 하고 두레에 지원되던 이용고의 1~2%에 상당하는 기금을 모아 동네 학교의 결식아동을 돕기도 하는 등 활동방식은 다양한 편이었다. 생산지에서 가져온 고추 등을 생협 조합원들이 미처 소화하지 못할 때는 동네 마당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팔기도 하는 등 생산자와의 관계나 조합원들 간의 관계,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끈끈하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IMF 이후 두레의 주력이던 조합원(주부)들이 취업하게 되면서 두레의 수는 급격하게 감

⁴ 하승우, 『한국 지방자치의 현황과 주민자치운동의 필요성』, 생협전국연합회 2009년 월례포럼 “주민자치와 생협”, 2009.

⁵ 시간 관계상 많은 생협들의 사례를 이 지면에 실지는 못하였다.

⁶ 이 글에 담겨 있는 사례의 대부분은 소개된 생협의 이사장, 상무이사, 실무자 등과의 인터뷰, 총회자료집, 생협전국연합회 발간 자료 등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자료에 오류가 있다면 전적으로 필자의 잘못임을 밝혀둔다.

소하게 되었고 개별구입 형태가 일반화됨에 따라 생협이 마을과 만나는 방식도 변화하게 되었다. 생협의 활동가들이 지역사회의 시민단체나 거버넌스 조직, 지역공부방, 자활 등과 연대하면서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친환경급식추진운동, 식생활교육운동, 녹색구매운동, 지역화폐운동,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설립 운동 등 지역의 다양한 의제로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하거나, 인천 소재 생협들 간의 협의회나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등을 구성하여 협동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학습과 논의, 공동 사업의 기획 등을 도모하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 생협생활재를 공급받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공부방에게는 이용고의 3~7%에 해당하는 쌀을 지원하고 있다.(180여 개소, 매월 250~300만원, 2010년), 어린이, 학부모, 교사대상으로 한 안전한 먹을거리 교육을 병행

- 자체 운영하는 푸른떡방의 떡을 연수 푸드뱅크에 정기적으로 기증

- 한부모가정과 여성의 자립을 돕는 인천지역여성 프로그램 지원기금

- 생활재 중 피톤치드 이용 수익금의 50%를 지원(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노동자회, 2010~2011년 상반기 250만원) 여성민우회를 후원해오던 피톤치드 생산자가 생활재를 공급하게 되면서 민우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원하게 됨

- 어렵게 일하는 지역공부방 실무자를 돕기 위해 매달 10만원씩 3~4곳에 지원하고 생산지 견학, 문화 프로그램비 등 지원(2003년부터~)

- 총회 결산 때 이익잉여금의 1/3을 사회연대기금으로 적립(2004~2010년, 2,300여 만원). 이 기금은 지역사회와 같이 실현할 사업계획의 수립에 따라 쓰일 예정

1-2. 콩세알 도서관

2007년에 푸른생협의 남동지부 조합원 공간으로 만들어졌던 그루터기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마을에 필요한 문화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좋겠다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콩세알도서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2004년부터 조합원활동가들이 회의비 등을 모아 책을 사들였고 개관한 이후에는 푸른생협에서 연간 2,500~3,0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였다. 아이들을 마을에서 같이 키운다는 가치관을 가진 우수한 자원 활동가들의 참여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마을과 좀 더 밀착된 도서관으로 자리잡기 위해 푸른생협에서 독립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넓혀가고 있다. 푸른생협은 콩세알도서관을 통해 지역과 만난다는 관점에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며 푸른생협의 조합원들도 개별적으로 후원에 참여하고 있다.(2011년 2,000만원, 개별 후원은 별도)

1-3. 인천평화의료생협과 조합원상호혜택협약 체결 및 치과 개설시 500만원 출자

1-4. 복지공동체 푸른마을 창립 시 1,000만원 출자 및 복지사업 연대(지역아동센터 설립, 도서관 설립 추진 중)

1-5. 강화 매화마을 보전운동 참여 및 매화마을쌀을 생활재로 공급. 습지보존을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과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을 전개(강화쌀, 콩세알두부, 고구마, 묵 등으로 품목 확대)

2. 바른생협

1985년 5월 설립된 바른생협은 구판장 중심이 아닌 조합원에게 다가가는 배송방법(공급)을 최초로 도입하여 유기농 생산자와 계약생산으로 직거래를

시작하였고 조합원의 참여와 출자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최초의 생협이라고 기록할 만하다.⁷ 바른 생협은 최근 몇 년 사이 소모임이 활성화 되면서 다양한 지역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임원을 비롯한 활동가들과 실무자들의 헌신과 참여로 조합원들의 자원을 자발적으로 모아내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여성생산자와 관계 맺기도 눈에 띈다.

2-1. 보살피는 이웃의 부재를 자성하게 한 사건을 계기로 생협 등 지역의 제 단체들이 협력하여 지역아이들의 공간 설립과 지원 사업을 전개(모락산 아이들, 칠보산 방과후 학교 등)

- 7개 매장별로 아나바다 수익금, 떡판매 기금 등을 모아 방과후 학교에 필요한 물품지원(매월 25~30만원)

2-2. 바로미 도서관 설립

조합원들이 기증한 책과 상설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한 기금으로 책 구입 등 도서관 운영

2-3. 복지기금의 조성

- 바른생협 이용고의 0.1%를 복지기금으로 적립하고 매장에서 봄, 가을 진행하는 아나바다 장터의 수익금,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1,000원 이상의 CMS 후원기금 등으로 조성하여 마음을 나누는 밥집 운영, 어린이집, 방과 후 학교 지원, 시니어 지원 예정

- 안양시 박달동의 10가구를 대상으로 1주일에 1회 생협 생활재로 만든 반찬 등을 직접 만들어 지원할 소모임 결성(조합원, 활동가, 직원 포함), 김장 나눔 진행.

⁷ 이재욱, 『어소시에이션-한국 생협운동의 역사와 흐름, 그리고 그 쟁점』, 2011.

2-4. 생산지와 연대

생산지 견학 갈 때 자기가 최근 읽은 괜찮은 책 한권 기증하기, 책, 작업복, 어르신을 위한 유모차 보내기, 생산지 일손 돕기 활동의 정기적 운영

2-5. 상주 땅모임 여성생산자와 1박2일 프로그램

해마다 여성생산자를 초대하여 즐겁게 수다 떨고 노는 프로그램 운영. 아크릴수세미 뜨기, 천연비누, 화장품 만들기, 영화보기, 쇼핑 등 여성생산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교류하는데 반응이 좋아 내년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예정. (연 150만원, 내년부터는 2005년부터 1%씩 적립한 생산자기금을 활용하여 확대 예정)

3. 일공동체와 지역사회⁸

지역사회에 대한 생협의 기여를 말할 때 일공동체는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생활클럽생협이 일공동체(워커즈 콜렉티브)를 도입할 때, 협동조합적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호혜와 연대의 그물망을 만들어가자는 목표를 갖고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600여 개가 넘는 일공동체와 그를 뒷받침하는 연합지원조직들은 일본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사회적 위상을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한국의 생협 조합원 여성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 생협과 교류를 통해 일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보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일하고 싶다는 여성들의 욕구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한 생협의 고민이 맞물려 일공동체는 몇몇 활동가의 자발적인 출발로, 혹은 생협의 기획과 지원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요즘 들어서는 마을 공동체운동에서도 살맛나는 지역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일공동체의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

⁸ 권순실, 일하는 사람이 꿈꾸는 일터-일공동체와 지역사회, '성남 살림의 경제 한마당', 2011.

공동체 분야로는 생협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 일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보육, 먹을거리 교육, 바느질, 재활용, 비누 등으로 분야를 넓히고 있다. 최근에는 돌봄 일공동체, 공급 일공동체(생협 위탁), 카페를 거점으로 한 다목적 일공동체도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협의 역사가 짧고 일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어서 만들어 가는 데 시행착오가 많은 편이다. 생협 조합원의 자주관리 경험이 두터운 일본과 달리⁹ 조합원 활동의 경험이 짧고 생협의 경영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공동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공동체 공급과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YMCA생협들을 중심으로 일공동체가 꾸준히 만들어지고, 두레지원센터나 한살림의 워커즈 콜렉티브 지원부서 등 지원조직이 있는 곳에서 일공동체가 새로 만들어지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일공동체와 관련한 법규가 없는 국내에서 일공동체는 유한회사, 주식회사, 혹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형식을 취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정체성과 형식간의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생협이 설립과정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거나(광명Y올챙이 어린이집, 어깨동무, 선물), 생협의 조합원들에 대한 생활재로 공급이 되고(마포두레생협 한담두레, 비누두레), 생협의 출자나 원자재 할인, 위탁, 인건비 지원, 서비스의 소비 등 지원이 있는 경우(엄마밥상, 되살림두레, 따뜻하고 소박한 밥상, 마을, 어깨동무, 두루두루, 선물)에는 일공동체가 자립하기까지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⁹ 일본에서도 개별 공급 위주의 신생 생협보다는 공동구입 활동의 경험이 많은 생활클럽생협연합회나 그린코프 생협연합회의 워커즈 콜렉티브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한국의 일공동체 현황 (2010년 12월 현재)¹⁰

No	분야	일공동체 (설립연도)	지원생협	특성 및 비고
1	바느질	고운매(2003)	한살림	2010.7 중단
2		목화송이 (2005.12)	한살림	
3		한땀두레 (2007.12)	마포두레생협	
4		되살림두레	마포두레생협	
5	먹을거리	따뜻하고 소박한 밥상(2008)	안양YMCA 등대생협	
6		행복한 밥상(2009)	한살림	2010.8 중단
7		착한 밥상 맛갈손 (2009년)	한살림	
8		유기농 반찬가게 (2007.3)	울목생협	중단
9		마을밥상 (2004.10)	남부여성민우회	중단
		착한 카페 '마을'	일공동체로 출발	사회적기업형
10	교육문화	엄마밥상 (2008)	광명YMCA등대생협	
11		하얀토끼	동북여성민우회	중단
12	보육	올챙이 어린이집 (2005.4)	광명YMCA등대생협	
13	노인돌봄	돌봄두레 어깨동무 (2009)	마포두레생협	
14	비누	습누리 (2006)	팔당생협	
15		비누두레 (2008)	마포두레생협	
16	공급	두루두루 (2010.7)	부천 YMCA	
17	기타	생명살림 올리(2009)(콩버거,과자)	청주YWCA	사회적기업형
18		오방놀이터(바느질, 문화체험)		사회적기업형
19		원주 교육문화워커즈 멋살림	원주협동조합네트워크	중단
20		지역화폐 과천품앗이(교육)	과천품앗이	재능나눔에 가까움
21		선물 (카페와 재활용,위탁판매)	고양파주두레생협	

¹⁰ 생협전국연합회 일공동체위원회, 2011. 한국의 일공동체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모두 포함된 표를 인용하였다

3-1. 올챙이 어린이집

광명 YMCA 회원들은 2003년부터 일본의 워커즈 콜렉티브에 대한 자료를 공부하고, 일공동체의 사회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공부를 한다. 2004년에는 일공동체의 정관만들기, 준비팀의 목적문 만들기, 일공동체 목적문과 수칙 만들기, 모의사업을 정해 사업계획서 만들기과 모의사업 진행, 광명시 지역에 대한 이해와 시장성 검토, 생산 공동체 견학, 노인요양센터 자원봉사 및 설립에 관한 법적기준을 조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였다. 2005년에는 1차 사업을 실행하기로 합의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 조합원들이 잘 할 수 있는 일로 가닥을 잡으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육아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놀이방과 방과후 교실을 열기로 결정한다. 2005년 2월, 1차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업 실행팀을 모집하였고, 실행팀이 구성된 후 2개월의 사업 준비기간을 갖고 4월9일 일공동체 ‘챙이와 팽이’(올챙이 어린이집과 달팽이 방과후 교실)를 설립하였다. 이 놀이방은 천기저귀 사용, 자연물 이용한 놀이감, 유기농 먹을거리 이용, 텃밭 가꾸기, 바깥놀이, 산책과 마을 구경하기 등의 생명 육아를 지향한다.

초기에는 유치원 교사 출신의 어머니가 교육 프로그램을 주도하며 이끌었고 2008년, 2009년에 걸쳐 두 명씩 번갈아가며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¹¹ 올챙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중간에 사회적 일자리 기금을 지원받아 일부만 가져가고 나머지를 적립하여 일공동체를 지원하는 용도로 쓰기로 하였는데, 한편으로 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면서 어렵더라도 이후에는 기금을 받지 않고 자립해가기로 한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얻기 위한 교육비도 수익에서 50%를 지원하는 등 일공동체의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¹² 이러다 보니 다른 동에서도 올챙이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¹¹ 변희중, ‘광명 YMCA 생협의 일공동체 ‘챙이와 팽이’, 2008, ‘생협전국연합회 일공동체지원센터 간담회 자료’, 2008. 12. 2. 이후 인터뷰를 통해 이후 자료를 수정 보완하였다.

¹² 생협전국연합회 일공동체위원회, 2011, 46~48쪽.

일공동체의 출자금은 4명 구성원 기준 2,800만원이고 차입금은 8,200만원이며 총매출액은 월평균 약 400만원(원아 수: 13명)으로, 임금수준은 80~110만원(근무시간에 따라 다름, 시급 5,000원 기준)이다. 일공동체의 정신을 살려 교사와 겸임하여 지기, 회계, 원장, 시설관리로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며, 모든 업무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익금의 10%를 적립하여 일공동체 2호점을 준비하고 있다.

3-2. 엄마밥상

2008년 조합원 9명이 학교급식이 ‘급식’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패스트푸드나 유전자조작식품의 문제 등 안전한 먹을거리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여 만들게 되었다. 초기에는 30만원씩 출자하고 해마다 30만원씩 증자하고 있다. 대상과 주제를 명확히 하여 감동과 정서적 체험을 살리는 교육방식을 지향한다. 절기음식 만들기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찾아다니며 인형극을 공연하는 일 등을 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아쉬운 현실에서 엄마밥상은 운영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 올해 빵사업을 새로 시작했다. 생협이 생산자와 협약을 맺고 지역에 신선한 빵을 직접 만들어 공급하는 활동이다. ‘빵꾸러미’ 사업은 등대생협이 공동체 안에서 진행해왔던 채소꾸러미 사업처럼 생협의 조합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생활재로 다가가려고 한다.

광명Y등대생협은 아이를 키우며 같이 공부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성장한 조합원들이 지역에 의미 있는 다양한 일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9월에 문을 연 ‘커뮤니티 센터’는 생활재의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역할 뿐 아니라, 마을의 카페라는 확장된 기능, 나아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거점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호혜적 관계망을 만드는 다양한 실험이 진행될 것이다. 10년 가까이 범씨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이 지역에 돌아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되고 외부 자본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일공동체가 협동경제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희망도 그 안에 담겨있다.

3-3. 일공동체의 발전 전망

-일공동체는 생협의 조합원을 소비자라는 정체성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생활재 또는 서비스의 생산자로 사회적 역할을 넓히는 통로가 되고 있다.

-여성들은 살림노동과 생협에서 하는 자원 활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역살림에 꼭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생협은 그 구성원의 공통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는 ‘전통적 역할’을 확장하여 지역을 무대로 지역살림운동을 펼쳐나가는 주요한 소재로 일공동체운동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본과 노동에 대한 자율적 통제와 민주주의적 운영방식이라는 일공동체의 특성은 굳이 생협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수많은 협동조직이 취할만한 매력적인 노동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공동체의 지향과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법적 요건, 이를테면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이 이루어지면 일공동체가 활성화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포섭되기보다는 일공동체가 가진 ‘고용하고 고용되지 않는 노동’의 성격,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출자를 통한 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 등의 강점을 살려나가고 발현시켜야 한다. 이러한 시민노동적 성격을 가진 일공동체는 이익을 무한대로 늘리고 싶어하는 전 지구적인 상품경제 시스템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대안적 사회경제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3-4. 일공동체와 공동체화페 운동

생활로부터의 노동, 생존 지향의 노동-커뮤니티 워크¹³를 사업화하는 방식

¹³ 요코다 카쓰미(2004:132)는 노동가치를 직접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장소나 협동조합의 활동영역은 기본적으로 근린사회=공동체인데, 커뮤니티 워크란 거기서 이루어지는 노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교환·소비에까지 직접 관여하며, 호혜적인 관계의 순환과 그러한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본다. 커뮤니티 워크는 그런 점에서 최근 각지에서 실시되기 시작한 지역통화, 에코머니 등의 기초 구조가 되는 노동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일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노동과 노동의 결과물에 대해 기존의 화폐방식과는 다른 노동 평가 방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시장과 끊임없이 경쟁하거나 시장에 동화되는 한계에 부딪힐 것¹⁴이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만의 새로운 가치에 대응하는 지불 결제시스템을(지역통화=공동체 화폐)갖추는 것은 일공동체의 활성화를 매개하고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이뤄나가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런 점에서 지역화폐운동을 조심스럽게 전개하고 있는 두레생협의 '선물' 사업은 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호혜의 관계망을 만드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생협이 지역사회와 관계 맺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기업의 사회공헌과 그리 다르지 않은 나눔의 성격을 띤 경우가 존재하고¹⁵ 연대의 원칙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곳도 흔하진 않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지역 안에 뿌리를 내리고 같이 살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밑그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분명한 현상이다. 광명 YMCA생협의 사례처럼 차근차근 그물망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갖게 된다. 바른생협의 1000원의 행복-복지기금, 마포두레생협의 돌봄기금 등 지역사회에 대한 조합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아마 무수한 시도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 가장 생협다운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관계 맺는 모델이 나올 것이다. 그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생협的主인인 조합원들을 지역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일상적인 참여의 민주주의와 훈련의 장을 제공하는 것, 스스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생협의 원대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리란 믿음을 갖는 것, 바로 이 점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¹⁴ 김기섭, 두레공부모임, 2007.

¹⁵ 그래도 생협 내부에서는 어려운 합의과정을 거쳐 나온 결정일 수 있으며 베풀 수 있는 생협의 경영 상태를 부러워하는 생협도 있을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인이, 만들어가는 소박한 복지 -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협동복지사업

박제선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기획부)

지역사회, 장소에 기반한 커뮤니티(Community)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지역사회(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지역사회와 관계를 가지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간다. 지역사회는 삶의 터전이며, 인간의 욕구를 실현시키는 기본적인 장(場)으로 기능한다.

산업화의 진전으로 동네나 마을이라는 전통적 지역의 개념이 약화되었고, 더불어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공간을 거점으로 하며, 직업과 생활이 일치하는 전통적인 커뮤니티(지역 공동체)의 의미는 점차 퇴색하였다.

그러나 생활협동조합에게 지역공동체¹라는 의미는 남다르다. 지역(사회)은 생활협동조합의 존재 이유인 조합원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을 넘어 조합원 가족과 이웃의 삶을 일구고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기본 단위로 볼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이 꼼꼼하고 섬세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는다. 어떤 이들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도 하지

¹ 물론,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지리적 공간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지리적 구성을 넘어서는 인종, 성적 지향, 직업, 장애, 종교, 사회계층 등과 같은 특정한 정체성이나 이해관계에 기초해 형성된다고 바라보는 입장이다(강철희, 정무성, 『지역사회복지실천론』 2010, 26~27쪽). 원고에서는 생활협동조합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사회를 '장소에 기반한 커뮤니티(local community)'로 이해하려고 한다.

만, 대부분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늦게나마 최근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우리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편에서는 ‘공짜급식’, ‘포퓰리즘’ 등 원색적 단어를 동원하며 불편한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 또한 매우 더딘 편이다. 물론 실버타운 입주 등은 기업에 위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은 높은 비용을 요구해 이용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생애 전반에 걸쳐 맞닥뜨리는 개인의 개성과 생활 상태에 따른 다양한 요구까지 섬세하게 충족시켜 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생활인의 불편함을 생활인이 해결해가자

협동복지사업은 ‘혼자서는 어렵지만, 한 명 한 명이 모여 아이디어를 모으고, 해결 방법을 찾는 협동을 통해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생활 속 불편함은 고령화 사회와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상을 반영해 △육아와 보육 △고령사회 대응 △맞벌이 부부 지원 △여성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복지 증진 사업 등 5가지 영역으로 정했다. 협동복지사업의 주제만 정했을 뿐, 사업 아이템은 시민 공모를 통해 모아내기로 했다.

어떤 일이든 돈이 필요한 법, 자본 마련은 조합원의 손을 빌리기로 했다. 누군가에게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모은 시민자본으로 지원하자는 고민이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2010년 9월부터 협동복지기금 모금을 시작했다. 2010년 10월까지 협동복지기금 모금에는 조합원과 생산자를 포함해 모두 342명이 참여해 1,415만 480원을 모금했다.

지역사회에서 소통하는 협동복지사업

지난 2011년 8월29일부터 9월22일까지 협동복지사업을 여성민우회생협 외

부까지 범위를 넓혀 ‘2011년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협동복지기금’ 배분 공모 신청을 받았다. 협동복지사업을 여성민우회생협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외부로 확대해야 한다는 고민이었다. 이미 지역사회에서 협동복지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벌어지거나, 실험 중이라는 점도 놓칠 수 없었다. 지역사회에서 소통하는 대안적 복지를 실현하자는 협동복지사업의 취지를 더욱 잘 살리고, 사업 공모를 통해 협동복지사업의 모델을 발굴하자는 의도였다. 2011년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보며, 조합원들도 협동복지사업의 상을 더욱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협동복지기금 사업 공모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기준을 세웠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밀착해 활동하는 사업을 선정하자는 것이었다. 지역사회에서 이름 없이 묵묵하게 수행하는 활동과 사업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고민이었다. 그래서 사업신청 대상을 ‘개인들로 이루어진 모임, 커뮤니티, 단체(미등록 단체)’로 정했다.

두 번째는 기금 배분의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나 활동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프로젝트 기획에 익숙하지 못해 서류 작성 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열정과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하려 했다. 기금 배분사업은 사업계획서가 잘 만들어진 단체를 선발하는 경향이 있어, 사업신청 서류를 간소화해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재정 상황이 어려운 단체나 모임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 금액의 20%를 실무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세 번째는 신청한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업 추진 역량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참신성과 타당성 △사업의 지속가능성(연속성)이라는 4가지 심사 영역 중에서 ‘사업의 효과성’과 ‘사업의 참신성과 타당성’에 가장 점수를 높게 배정했다.

마지막은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소속 단위생협과 파트너십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협동복지사업의 사업 지역을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에 가입해 있는 5개 회원 생협의 사업권역과 일치시키려고 서울과 경기도, 경남 진주로 한정했다.

2011년 협동복지사업으로 6개 사업 선정

2011년 협동복지사업은 첫 공모사업임에도 모두 28개 사업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업 선정은 기금 배분과 지역 풀뿌리 운동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동복지기금 배분위원회’에서 10월10일 사업 심사회의를 통해 선정했다. 사업 신청을 접수한 28개 사업 중에서 모두 6개 사업을 ‘2011년 협동복지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의 특징은 육아와 교육, 시니어지원, 지역사회 복지 증진 등의 영역이 두루 선정되었다. 더불어 사업 지역이 ‘도봉구 방학동’, ‘동작구 상도동’과 같이 동네에 밀착되어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선정된 2011년 협동복지사업은 아래와 같다. 올해 사업에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을 신청한 28개 사업 모두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는 따뜻한 마음과,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였음은 물론이다.

1. 우리동네 녹색 아카데미 <착한 에너지 지킴이>

- 사업 내용: 주민 주도형 마을도서관을 통해 형성된 인적자원을 에너지, 안전 먹을거리, 재난대비 훈련 전문 강사로 양성해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
- 사업 권역: 서울 동작구 상도 3, 4동
- 지원 금액: 200만원

2. 할머니 찾집

- 사업 내용: 할머니의 구수한 입담과 손수 끓이는 차가 있는 지역 커뮤니티 찾집
- 사업 권역: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 지원 금액: 200만원

3. 엄마와 아이가 다 행복한 육아놀이터 <다행>

- 사업 내용: 마을 안 육아 커뮤니티 형성,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육아 실현, 보육교사, 조리사 채용 등 여성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사업 권역: 서울 도봉구 방학동
- 지원 금액: 200만원

4. 청년협동조합 건설을 위한 청년호혜기금 모금 홍보

- 사업 내용: 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청년들의 상호부조사업을 통해 서로 협동하고 연대하며 자립해나가기 위한 협동조합(가칭 청년연대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청년호혜기금 모금사업과 청년협동조합 발기인 모집 홍보 사업
- 사업 권역: 전국
- 지원 금액: 200만원

5. 청소년 요리 강습

- 사업 내용: 어린이·청소년 대상 요리 강좌를 통해 집에서도 직접 요리를 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요리 강좌
- 사업 권역: 서울시 양천, 강서, 구로구
- 지원 금액: 97만원

6. 십시일반 행복밥차

- 사업 내용: 생협 생활재와 조합원들의 협동(손맛, 입맛, 발품 등)을 통해 지역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함
- 사업 권역: 서울시 동작구, 관악구 중 1곳
- 지원 금액: 103만원

협동복지사업,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

협동복지사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협동복지사업을 통해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면서, 일자리를 구하면서 들었던 평범한 사람의 ‘생각’이 협동복지사업을 통해 ‘복지 아이템’이 되고, 우리 사회의 ‘대안’으로 자리 잡아 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인 한 명 한 명이 마련한 대안이 쌓이면, 우리 사회의 표준이 되고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나눔과 협동이 건강을 만든다 - 의료생협

조병민 (대전민들레의료생협 전무이사)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신영복

1. 세밑의 나눔, 불편한 행복

어느덧 연말이다. 이제 거리에는 낮익은 연례행사로 구세군의 빨간 자선냄비가 등장할 것이고, 방송사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으는 자막이 TV 한쪽 구석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여러 단체들마다 세밑 후원과 나눔 행사가 준비될 것이다. 이른바 나눔의 계절이다. 단체별 후원행사에 으레 얼굴을 비추고 공평하게 후원을 한다. 그럼 이제 공평히 나누었으니 연말정산을 대비한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만 잘 챙기면 나눔은 족한 것인가? 이정도면 행복한가?

최근 들어 부쩍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관심을 받고 있다. 경영진과 주주들의 이윤추구가 주요 목적이었던 기업들도 기금을 만들고 재단을 만들어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영업이익을 가져다 준 시장에 대한 인사치레부터 진심어린 사회 환원까지 각양각색이니 속사정을 모두 알 수는 없겠지

만, 과거 노동착취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던 자본기업이 이제는 제3세계의 저임금을 활용하면서 국내 노동자들의 노동배제를 통해 이윤을 확대하고 있는 꼴이다. 정부에서 일자리 나누기 시책을 내놓고 지원금을 준다 해도 실효성이 없다.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구조조정과 해고를 통해 속아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고성장이 아무리 지속돼도 결국 일자리는 나뉘지지 않는다. 성장이 해결책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20:80이었던 사회마저 10:90의 사회로 옮겨가는 느낌이다. 노력해도 이룰 것이 마땅치 않은 현실의 참담함은 젊은이들이 즐겨 부르는 힙합의 단골 랩이 되었고, 10으로 가기 위해 90의 울타리에서 무한 경쟁하고 서로 배제하는 일이 자연스레 반복된다.

그런데도 여전히 성장에 대한 화려한 수사는 끊이지 않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한-미FTA가 그렇다. 이제 한국과 미국 양국 간의 무역 품목에 따라 손익이 나뉘고, 어떤 면에서는 경제성장이 일어나고, 어떤 사회계층과 산업은 해체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FTA가 마치 새로운 세계를 향한 필수 코스인 듯, 복잡하고 그럴듯한 수식과 도표를 통해 경제 성장과 발전이라는 만능적인 수사로 마무리 짓지만, 도무지 이게 우리 사회의 행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특정 계층과 사회가 해체되는 것을 감수할 만큼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인가? 이웃의 해체 속에서도 우리는 의연하게 행복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서류상으로는 국가 간의 공정한 거래인 듯 보이지만 계층 간의 불공정 거래이다. 한-미FTA를 통해 더욱 많은 자동차와 핸드폰을 수출해서 GDP가 올라간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리는 만무하다.

2008년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기존에 사용해오던 GDP가 경제적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와 아마르티아 센 교수 등을 주축으로 ‘경제성과와 사회진보 측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하도록 하였다. 1년이 넘는 연구 끝에 <스티글리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몇 가지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경제

적 ‘생산’이 아닌 인간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GDP와 같이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경제의 통계만이 아니라 ‘생활’과 ‘비시장’ 영역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웃과의 선의가 담긴 거래, 스스로 아이를 돌보는 것과 같은 생활영역도 거래계약을 통한 경제적 가치와 마찬가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평균지수에서 평등지수를 고려하도록 보완을 요구한다. 평균소득은 오르지만 계층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면 저소득 계층은 오히려 박탈감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저소득 계층의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도 포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행복은 물질적 생활수준의 일차원적 지표가 아니므로 새로운 대안 지표는 보건, 교육, 정치 환경, 사회적 관계, 환경 그리고 사회경제적 안정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GDP와 같은 경제적 지표는 물론 중요하다. 우리 몸에서 마치 피와 물이 인체에 필수적인 것과 같다. 그러나 피와 물이 인체에 필수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는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삶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더 집중한다. 이는 경제구성체로서 인간에서, 나눔과 협동이 전제된 관계구성체로서 인간의 발견이다.

2. 의료생협이 바라보는 건강과 의료

1) 관계로서의 건강

우리는 누구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누구도 질병의 아픔을 모른 채 살지 못하고,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질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리의 질병은 유전, 환경, 병원, 사회현상, 경제적 위협, 스트레스, 신체기관 장애, 생활습관 등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사람 사이의 건강한 관계란 갈등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합리적 성찰과 상호 존중을 통해 갈등이 관리되는 것이듯, 우리사회의 건강도 무질병의 상태가 아니라 질병을 잘 다루며 살아가는 상태이다. 질병은 삶과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한 측면이기에 아픔이 오면 무엇 때문에 이 아픔이 오는지 성찰하고 삶의 관계를 살피며 개선해나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에게 죽음이야말로 삶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깨달음이 파란만장한 삶의 굴곡을 향해할 원동력이 되었듯, 우리에게도 질병과 아픔은 우리 삶의 관계를 진실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므로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포함한 삶의 관계까지를 포괄한다. 좋은 약과 건강보조제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웃과의 관계, 지역의 이슈, 사회적 현상까지 포함하는 셈이다.

2)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의료의 공공성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따르면, 건강이란 “단지 병이나 허약함이 없을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행복한 상태”(Health i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를 말한다. 건강에 대한 정의는 육체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확장되어 왔고 이에 따라 사회적 관계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보고서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정치, 경제적 불평등과 소외가 건강 불평등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감소를 지지하는 정치적 분위기와 정치권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정 생협법에서 선거 관여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것은 안타까운 대목이다. 왜냐하면 보편적 복지와 건강보장성을 강화하는 의료 정책을 통해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당과 인물을 지지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는 의료생협의 당연한 목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와중에 의료를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의

료시장 경쟁력과 경제성을 내세워 선진 의료 기술을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의료사업 영리화(민영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과 의료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어있다. 마치 한 마을의 공동 우물과 같은 것이어서 공동으로 관리되고 사회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전염병이나 식중독은 물론 감기와 같은 질환도 원인과 그 질병으로 인한 영향이 한 개인의 문제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의료란 그 자체로 공공성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의 문제는 치안이나 환경, 교육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는 공공재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무상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보다는 상품화되었고, 의료보험 자체가 민영화되어 민간 의료보험회사에 개별 가입하지 않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미국에 비해서는 공공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은 이러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의료사업의 비영리제’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움직임과 한-미FTA의 비준으로 위기 상황에 닥쳐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최근에 임명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통합국민건강보험을 반대하고 수백 개로 쪼개지는 이전 의료보험체제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재정상태가 열악한 농촌지역은 오히려 보험료가 비싸지고, 재정상태가 양호한 직장이나, 강남 같은 지역은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 결국 경제 불평등이 더 심해지게 되는데, 이는 앞서 WHO의 우려처럼 경제적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의료가 이처럼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율은 전체의 약 10%로, 유럽의 주요나라가 80~100%인 것은 물론, 민간의료 중심인 미국의 30%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는 의료인 개인이나 몇몇 의료인으로 구성된 의료법인이 우리나라의 의료 기관을 90%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흔히 우리 주변의 의료 기관에 대한 평가는 늘 의사에 대한 평가와 동일하게 된다. 병원의 주인이 정해져 있기에 혹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역할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의사 개인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다수 개인 의료 기관은 다른 기관들과 시장 원리에 따라 경쟁하고 살아남아야 하므로 항생제나 주사제 처방률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편이다. 또한 서로 경쟁하는 구조이다 보니 외국처럼 지역의 의료 자원을 공동으로 쓰기보다는 개별로 의료 기기를 설치해야 되기에 과잉 진료의 위험도 높다는 지적을 받는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책임이 농민에게만 있지 않듯이 건강과 의료에 대한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것만은 아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려는 소비자가 없다면 이를 생산하는 농민도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의료 역시 마찬가지다. 의료생협은 의료인과 지역주민의 협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생활협동조합의 운영원칙에 따라 조합원이 의료기관이나 생활시설을 만들기 위해 출자하고 운영하며 이용하는 방식이다. 즉 사회적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 이용하는 생협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생협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 비교

생협의료기관	항생제 처방률(%)
인천평화의료생협 평화의원	19.9
안산의료생협 새안산의원	7.4
안성의료생협 안산농민의원	5.9
안성의료생협 우리생협의원	20.5
원주의료생협 밝음의원	13.2
대전민들레의료생협 민들레의원	9.8
※ 전국 의원급 평균	53.2

(자료 제공: 추혜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

3) 생협의료기관

의료의 문제를 지역주민 당사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협동의 방식으로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의료생협의 철학은 창립 정관의 전문에 잘 나타나 있다.

민들레의료생협은 치료중심의 거대한 병원을 만드는 것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의료에서의 민주주의와 주민참여를 보장해주는 환자권리장전을 준수한다. 개인의 건강은 사회건강의 실현과 맞물려 있음을 직시하고, 자기성찰과 보살핌, 협동의 가치를 존중한다. 이로써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에 중점을 둔다.

이에, 민들레의료생협은 의료인과 지역주민의 신뢰와 협력 관계 회복으로부터 우리의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단순히 또 하나의 의료기관을 더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가 건강권실현의 주인임을 자각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동으로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 갈 것이다.

-대전민들레의료생협 정관 전문(前文)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전전해야 했던 것에서, 스스로 주인으로 참여하는 공동소유 의료기관을 통해 환자와 의사 간에 의료정보의 불평등 관계를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로 재정립된다. 이렇게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를 통해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하여 정치와 경제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며, 경쟁 관계가 협동의 관계로 바뀔 수 있고, 개인의 몫으로 떠넘기던 것을 공공의 몫으로 자리매김하며 건강과 의료에서 소외되어 있던 주민이 건강의 주체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에 의료생협의 조합원이란 ‘나눔과 협동의 관계를 통해 건강의 주체로 성장해나가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생협의료기관은 비록 규모는 동네의원에 해당하는 1차 의료기관이지만 조합원 주치의와 같은 예방활동에 노력을 기울인다. 주치의 사업은 관계를 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환자가 어떠한 환경과 상태에 놓여있는지 계속 관찰하면서 적절한 의료를 제공해주는 관계 중심의 진료방법이다. 물론 의료 서비스 생산자조합원라고 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의 부족과 경영 압박으로 기대 수준에 모두 부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 주치의는 체형주치의, 구강주치의와 같은 개념으로 다른 진료과목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생협 한의원들의 친환경 유기농 인증 한약재 사용이나, 안산 생협치과의 임플란트비용 추후 정산 환불 같은 사례는 협동운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신뢰의 관계를 성실하게 구축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모두 개인에 의한 경영구조가 아니라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의한 민주적인 협동경영을 그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4) 의료생협의 나눔 사업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 의료생협들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진료 지원을 주요한 자기 과제로 인식하였다. 대전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있는 지역에 생협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협동조합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해 해마다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주요 의료비 지원대상은 성매매피해여성 지원단체, 노숙인 보호단체, 공익적 시민사회단체, 노동자단체, 외국인노동자, 저소득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자녀 등이다. 2010년 한 해에 취약계층 진료비로 약 1,42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조합 전체 당기순이익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진료비 지원 외에도 보건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을 만나는 일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의 노인정을 연간 28회 방문하여 381명의 건강 체크와 94명의 유소견자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거리 건강체크도 수시로 진행하여 혈압, 혈당 및 체지방측정과 고혈압 당뇨 교육을 제공하고 시민사회 복지단체 등과 연대하여 벼룩시장 지원, 건강체크, 건강상담, 검진지원 등의 나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그 자체로 우애로운 일인 것은 틀림없으나 최근 들어 지역사회에 무엇을 기여하고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새롭게 되고 있다.

첫째는 의료 환경 자체의 변화이다. 예전에는 의료의 소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였다면, 이제는 소비과잉과 의료과잉의 시대에 어떤 의료와 건강을 안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역할이 된 것이다. 이제 영양실조보다는 비만이 건강의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대다수 의료소외 계층은 이미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시스템 등의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고 있다.

둘째는 진료비 지원사업의 딜레마이다. 취약계층에게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조합원보다 두, 세배 많은 지원혜택을 제공하더라도 치아 진료와 같은 결정적인 고가 진료는 어차피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재작년 노숙인 보호단체의 대표인 어느 목사님이 찾아와 폐지를 수집하며 생활하는 노숙인의 치아진료를 의뢰한 적이 있다. 400여 만원의 진료비 중 50%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모아둔 돈이 100만원 밖에 없다고 하였다. 목사님은 조금 더 모아올 테니 몇 달만 기다리라고 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동안 모아놓은 100만원마저 다른 노숙인이 훔쳐 달아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생협에서 일방적으로 과도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진료비 지원을 하게 되면 자체 생존의 문제와 연결된다. 별도의 의료구호기금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는 시혜를 베푸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의 문제는 단순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나누어 주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가 공동의 과제를 설정하고 공동의 사업이나 기금을 만들어 그 책임을 나누는 것이 협동조합의 나눔과 연대의 가치에 부합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6원칙인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 2011년 11월12일 토요일, 대전지역 생협연대에서는 아이쿱한밭생협, 아이쿱대전생협, 한살림생협과 민들레의료생협이 함께 버스 7대를 빌려 공동 등반대회를 다녀왔다.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각자 소속된 생협을 굳이 나누지 않고, 지역별로 배분된 버스를 타고 함께 어울려 같은 목적지를 다녀온 것만으로도 충분한 나눔과 연대가 시작되었다. 막걸리는 한살림이 준비하고 안주는 아이쿱대전생협에서 준비했다. 공동체놀이는 아이쿱한밭생협이 진행하였다. 올 한해 정기적으로 대표자회의와 실무책임자회의를 통해 연대의 입장을 확인하고,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 공동홍보를 통해 책임을 서로 나누고 협동한 성과이다.

내년이면 민들레의료생협과 아이쿱한밭생협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면서 자연드림매장과 의원, 한의원, 치과 등 생협의료기관과 조합원 활동공간이 어우러지는 ‘생협센터’가 만들어질 것이다. 더욱 반가운 일은 비록 같은 공간을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대전지역의 생협들이 모두 단체로 출자하고 아이쿱이나 한살림의 조합원들이 생협의료기관을 공동 이용하는 이른바 ‘협동개원’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생협의 먹을거리와 의료생협의 건강강좌를 한데 묶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적인 건강검진을 병행하는 건강실천단 프로그램을 통해 생협의 현미채식과 통밀이 정말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생협들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작은 공연장과 활동 공간을 만들고 조합원과 시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은 즐거운 상상이다. 생협이 가진 사회적 매력을 발산할 기회이다. 어쩌면 이것이 생협이 지역사회에 나눔을 제공하는 방식일 것이다.

3. 나눔의 물리학-협동과 연대

나눔다는 것은 쪼개서 줄 수도 있지만 역할을 나눈다는 것이기도 하다. 관계와 지탱을 위한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자. 말은 거창하지만 별로 어렵지 않다. A4용지로 여러 기둥을 만들고 어느 기둥이 더 큰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지 실험해보는 것이다. 먼저 삼각기둥을 만들고, 차례로 사각, 오각, 육각기둥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기둥을 만들어보자. 이 기둥들에 차례로 뭔가 무거운 것을 올리다보면 어느 기둥이 더 많이 지탱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도 서로 대립하다보면 각을 세우게 된다. 삼각기둥의 각은 사각기둥보다 더 날카롭다. 사각, 오각, 육각기둥으로 갈수록 대립은 완만해지고 더 많은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된다. 각으로 세워진 기둥의 면들은 서로 만나는 순간 조금씩 다른 각도(입장)를 가지고 만나지만 원기둥은 각이 따로 없이 서로가 최대로 동일한 입장을 지닌다. 이 동일함이 무게를 분산해서 감당하게 하는 나눔의 원리이다. 그래, 우리에게 나눔이란 떼어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협동해서 둥그렇게 모이는 것이다. 둥그렇게 모여 각을 무디게 하고, 같은 입장으로 관계를 쌓아가는 협동과 연대의 확산이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

정규호 (모심과 살림연구소 연구실장)

1.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가 가진 시대적 의미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유럽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실물경제와 재정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긴축 및 구조 조정 조치는 물가상승과 실업에 대한 공포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1% 특권층에 대한 99%의 분노의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세기 근대화 과정을 이끌어왔던 ‘고도성장’, ‘지속성장’, ‘동반성장’의 신화는 이미 무너졌다. 특히 양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데, 고용 양극화가 소득, 교육, 의식주, 건강의 양극화로 확대되고 있어 사람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화된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낸 가격 신호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조정, 조율된다는 믿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렇다고 우리의 운명을 국가의 ‘투박한 손’에 맡길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의 자본주의 경제는 생산과 소비, 자본과 노동을 분리시키고, 사람들을 파편화, 무력화시켜 왔는데, 이에 반해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은 점점 더 거대화, 복잡화 되어 개인 차원의 문제 해결 수준을 한참 넘어서 버렸다. 요즘 들어 사회적 경제, 공동체 경제, 협동 경제, 살림의 경제 등 다양한 이름의 대안 경제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의 퇴조와 시장의 실패가 극명하게 드러난 지금, 삶의 주체들이 직접 나서서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함께 행동하고 더불어 책임지는 협동운동을 통한 새 길 찾기에 대한 관심과 고민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협동운동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양한 사람들의 뜻과 힘을 자발적으로 모

오고, 상호 신뢰와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필요 자원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고, 생활과 밀접한 공공재를 지속가능하게 생산해내는 데 중요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균열과 혼돈이 가중되면서 지속가능한 삶과 사회를 책임지는 대안적 경제운동으로서 협동운동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¹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협동조합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역할이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1995년 ICA 창립 100주년 기념 대회를 맞아 개정된 협동조합 원칙에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작년에 개정된 우리나라의 생협법에도 생협의 주요 역할로 명기되어 있다. 이처럼 협동조합의 주요 역할로 강조되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일정한 지리적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조합원의 이익 실현은 물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협동조합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오늘날 이 원칙은 윤리적 규범의 차원을 넘어서 생존을 위한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정점에 달한 지금, 국가의 보호막이 약화된 상태에서, 지역사회가 시장경제의 치열한 생존경쟁에 무기력하게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동운동의 역할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제활동 주체들의 사회적 기여 방법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 주거나, 영리활동으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공적 활동에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이 가진 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는 다른 차원이 분명히 있다. 즉, 조합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본 역할을 넘어서 상호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조직화된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의 의미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¹ 협동운동이 가진 이런 장점은 위험사회에 대한 대안으로도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11일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 원전 사고로 지역사회 전체가 초토화된 일본에서 재난 복구와 지역사회의 재건에 보인 일본 생협들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재난 지역에 생협이 있다’는 말처럼 현재 일본에서는 약 300개의 생협들이 지자체와 협력을 맺고 기초생활물자 공급과 지역 재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그 하나가 국가와 시장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에서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국가와 시장의 논리가 작동하는 곳에서 협동조합이 가진 가치와 내용으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나가는 ‘대안적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는 조직 차원의 활동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운동과 경영, 활동과 사업을 구분해 놓고, 경제활동을 통해 확보된 수익의 사회적 환원을 위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역할을 너무 제한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의 주류 경제가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과 배제가 아닌 협동과 공생의 원리로 작동하는 대안적 경제영역들을 많이 만들어서 경제적 생태계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일이야말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 기여 역할은 협동조합 스스로 정체성과 운동성을 분명히 하는 길이기도 하다. 사실 사회 속에 존재하는 협동조합은 안팎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협동조합들이 경계해야 할 지점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경쟁 과정에서 규모화와 효율화에 치우쳐 자칫 경제적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가진 특성과 잠재력이 희석될 가능성, 조합원 자발성에 기반하기보다 상품화와 제도화를 통한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운동적 활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 그리고 조합원 중심의 상호부조 틀 속에 갇혀 협동조합이 폐쇄적 이익집단으로 비춰질 가능성 등이 그러하다.

2. 지역이 당면한 현실과 ‘지역살림운동’의 등장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은 일터와 삶터가 분리된 사람들이 표류하는 삶을 살아가는 곳이자, 이웃 간 관계의 단절로 더 이상 정을 붙일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지역 생태계와 삶터 전체는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자립과 자치의 토대는 무너져 지속가능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운명은 국가의 지원과 시장의 투자에 맡겨져 버렸다.

이런 현실에서 한살림은 일찍부터 ‘살림’의 눈으로 지역이 당면한 현실과 의미들을 새롭게 바라보고자 했다. 한살림은 지역을 생산과 소비, 여가 활동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살림의 기본 단위이자 생명살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현장으로 바라보았다. 지역을 살리는 길이 사회를 살리고 문명을 살리는 길임을 확신하고 한살림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25년 전, 한살림은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기치로 생활협동운동 방식을 통해 유기농산물 직거래에 기반한 도농 상생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생명의 먹을거리를 책임 생산하는 농촌 생산자와, 이들의 수고와 가치를 이해하고 책임 소비에 노력하는 도시 소비자들이 협동의 원리로 ‘한집 살림’ 하듯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펼쳐나간 것이다.

특히 도시 소비자들은 초기에 공동체 공급을 통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비슷한 뜻과 생각을 가진 주부들이 서로 만나 생활을 나누고 동네 이웃과 말을 걸기 시작했다. 이후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분과 활동’과 ‘지역 활동’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졌고, 지역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단위와 거점에 대한 고민의 과정 속에서 ‘동네살림모임’을 시작했다.²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공간과 생활문화를 만들기 위한 고민과 노력들은 지부 활동을 통해 구체화 되어 나갔으며, 활동 내용도 먹을거리는 물론 교육, 환경, 자치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되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을 포함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보다 폭넓고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매장의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처럼 한살림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조합원과 함께 펼쳐 온 활동 경험들은 2000년대 들어 ‘지역살림운동’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한살림운동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적 역할의 확장에 대한 고민들이

² “한살림운동은 단순히 물품 나눔 활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나눔 활동입니다.” 1993년 3월 소식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동네살림모임을 제안한 내용이다.

중요하게 작용했다. 유기농산물과 직거래, 생협이 영역들이 상당부분 보편화, 제도화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들, 그리고 조직 규모의 확대와 사업과 활동의 체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합원과 밀착된 소통과 기초 조직을 통한 참여 활성화에 대한 고민들이 지역살림운동으로 연결되었다.

한살림이 지역살림운동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펼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위기 확대에 따른 협동적 실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토피 문제부터 먹을거리 문제, 사회 양극화와 실업, 출산과 육아, 환경, 교육, 자치의 문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이 아니라 협동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둘째, 갈수록 다양해지고 변화하는 조합원들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담아낼 필요가 있다. 근래에 들어 한살림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규모도 상당히 커졌고 이들의 성향도 매우 다양해졌다. 특히 한살림을 통해 생활에 기본이 되는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한살림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도 더욱 다양해지고 폭넓어졌다. 한살림이 먹을거리의 안전성만 이야기 하는 것은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게 되었고, 다양한 생활의 필요와 사회적 과제들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요구와 기대들도 높아지고 있다.

셋째, 한살림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와 시장의 실패에 이어 시민사회(운동)의 실패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스스로의 자립 기반과 폭넓은 대중조직을 갖추고 있는 한살림을 포함한 생활협동운동 조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생활 현장 속에 뿌리를 내려온 한살림이 조직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을 지역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펼쳐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넷째, 조합원의 성장과 조직적 실천 역량도 크게 높아졌다. 조합원들은 한살림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실현에 대한 욕구를 발전시키고 소통하고 관계하

고 기획하고 창조하는 역량들을 키워왔다. 또한 다양한 참여 활동과 교육 과정을 통해 성장한 조합원들 외에 사회활동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늘어나 조직 차원의 실천 역량도 높아졌다. 특히 협동조합의 원리로 경제 조직과 활동 조직을 함께 운영해오면서 축적된 조직의 경험들은 지역살림운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3. 지역살림운동에 담긴 의미들

협동조합 운동의 본래 정신은 경쟁과 배제의 원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협동의 원리로 가치를 조직하고 관계를 조직하고 생활을 조직하는 데 있다.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 역시 생산과 소비 영역의 조직화와 생산과 소비 관계의 조직화를 통한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 밀착해서 생활을 조직해 나가기 위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즉, 농촌 지역의 생산자들은 생명살림의 농법을 토대로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도시 지역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과 삶의 터전을 이웃과 함께 살 맛 나는 곳으로 되살려내고자 하는 실천 의지가 지역살림운동에 담겨 있다.

사실 국가 권력의 통치 대상이자 시장 경제의 이윤 추구 대상이 되어버린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협동운동 영역의 궁극적인 역할이자 목표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영역들은 다양하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역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생산기술과 생산기반을 토대로 지역 자립적인 순환경제 체제를 만들어 지역 자산의 역외(域外) 유출을 최소화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높여나가는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우애와 협동의 원리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균형있는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자원과 정보, 권력이 지역에서 공평하게 공유되고 순환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지역 생태계와 생물 자원들의 지속가능성을 보호하고 물질과 에너지의 지역 순환 체계를 확보하

는 것이다.

이점에서 지역살림운동은 ‘경쟁을 통한 홀로 살아남기’가 아니라 ‘협력을 통해 함께 살아가기’를 위해 지역사회를 살림의 그물망으로 촘촘하게 짜나가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살림운동은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살림운동’이자, ‘지역을 살리는 지역생명운동’이며, ‘살림의 주체들이 지역에서 펼쳐가는 운동’이자, ‘살림의 영역을 사회적으로 확장시켜나가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살림운동은 생명의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나누는 활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지역과 밀착해서 활동의 소재를 다양화 하고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것으로, 한살림운동의 창조적인 진화로서의미를 가지고 있다.

조합원들의 물품 이용은 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을 지탱하는 기본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삶의 문제는 먹을거리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한살림 또한 ‘생명의 가치에 입각한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살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분명한 운동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살림은 직거래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은 조합원들과 함께 생산지 방문과 단오행사, 가을걷이 체험 행사 등을 통해 농업과 환경의 중요성과 생산자의 현실을 이해하고, 책임 소비가 가진 공적인 의미를 살려서 생활양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뿐만 아니라 마을모임, 소모임 등 조합원이 참여하는 기초 조직 활동을 통해 이웃을 만나 서로의 공통된 관심사를 발견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

이 점에서 지역살림운동이라는 말 속에는 한살림에 기반하되 한살림의 울타리를 넘어, 먹을거리에 기반하되 먹을거리를 넘어, 조합원 활동에 기반하되 이웃과 지역사회와 폭넓게 만나가는 과정과 노력들이 중요하게 담겨 있다. 그리고 그 방식과 경로는 조합원 기초조직 활동을 확장하거나, 워커즈 등 새로운 영역을 만들거나, 지역사회의 관련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의 실천 영역을 개발하는 등 매우 다양하다.

4. 지역살림운동의 다양한 모습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은 처음부터 종합적인 설계를 하고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진행하기 보다는, 지역별로 조합원과 함께 실천해 온 다양한 활동들을 발굴하고, 체계화, 의미화 하는 과정을 통해 방향을 잡고 단계별로 실천 전략들을 수립해 가는 상향식 과정(bottom-up process)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지역살림운동의 지향과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펼쳐고 있는 활동의 수준과 내용들은 다양하고 차이들도 적지 않다. 한마디로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은 현재 진행형으로, 진화의 과정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한살림 각 지역 조직별로 스스로 펼쳐 온 활동들을 지역살림의 눈으로 살펴보고 새로운 실천 영역들을 발굴하고 만들어 왔다. 다양한 실천 내용들 중에서 지난 2009년(수도권 대상)과 2010년(전국 대상) 두 해 동안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조사한 ‘지역살림 활동사례’들도 그 예라 할 수 있다.³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 사례들(2009~2010)

구분	내용	
2010년	- 마을만들기 활동, 더불어함께 짜나가는 살림의 그물망	
	● 부산지역 당감, 개금 마을모임과 마을문화 만들기 ● 마을모임에서 키운 아름다운 나눔 ● 꽃별어린이집을 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 어린이날 행사로 맺어진 지역사회네트워크와 마을 만들기	한살림부산 한살림강릉 한살림부산 한살림서울 북부지부
	- 장터 활동, 경쟁과 이윤을 넘어서 펼치는 호혜 시장	
	● 대야미 마을 생태장터 ● 마음을 나누는 나눔장터 ● 강동 벼룩시장	한살림경기남부 군포지부 한살림강릉 한살림서울 동부지부

³ 조사된 사례들은 지역에서 대표적인 활동으로 추천된 것들이다. 따라서 실제 지역 현장에서는 사례 조사에서 소개되지 않은 지역살림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이 한살림운동의 밑거름이 되어 펼쳐지고 있다.

	- 도농공동체 활동, 교육과 교류를 통해 만들어가는 도농공동체	
	● 한살림 어린이 농사학교 ● 구량천공동체 직거래 체험단 사례 ●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텃밭모임 활동	한살림여주이천광주 한살림대전 한살림청주
	- 지역자치 활동, 제도의 장벽을 넘어 확장해 가는 지역살림	
	● 원주 식생활교육위원회 활동 ● 창원시 위탁사업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례 ● 지역단체들과 연대한 학교급식운동 ● 강동 주민자치네트워크를 통한 매니페스토 활동	한살림원주 한살림경남 한살림경기남부 안양지역 한살림서울 동부지부
2009년	- 한살림, 지역과 만나다	
	● 녹색장터 활동 ● 우리동네 초록장터 ● 일원수서 어린이 벼룩시장 ● 해오름 공동체의 마을만들기 ● 기후변화 대응 활동 캔들라이트 ● 숲살림 활동	한살림경기남부 군포지부 한살림경기남부 수원지역 한살림서울 남부지부 한살림고양파주 한살림경기남부 과천시부 한살림서울 북부지부
	- 함께 만들고 나누는 지역살림	
	● 맑은하늘 방과후 교육공동체 ● 학교급식 활동 ● 장애인 관련 연대활동 ● 지역사회와 결합한 지역아동센터 ● 지역복지 활동	한살림경기남부 군포지부 한살림서울 동부지부 한살림서울 동부지부 한살림서울 남서지부 한살림서울 북부지부

조사된 사례 내용들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활동의 내용과 범위, 방식 면에서 더욱 다양해지고 풍부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의 경우 '장터'와 '마을공동체', '사회실천 활동'(복지, 급식, 환경, 교육 등) 등이 소개되었다면, 2010년에는 '도농공동체', '지역자치'와 같은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었다. 또한 활동 방식에서도 마을모임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활동 영역을 마을과 지역사회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모습들이나,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을 기획·추동하고 지역 한살림이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모습, 생

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힘을 모아 도농공동체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모습, 지역사회 단체들은 물론 행정을 지역살림의 주요 파트너로 참여시켜 조례 같은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들 중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역할로 복지활동과 관련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조합원과 이웃들이 함께 하는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을 모으고 지역복지 활동으로 연결시키거나 또는 직접 기금을 모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한살림이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펼치고 있는 활동 중 하나가 ‘장터’로, 조합원, 지역주민, 어린이 등이 참여하여 물품을 나누면서 협동의 경제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마련된 수익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일을 지역별로 지속해 오고 있다. 한살림강릉의 경우 ‘나눔장터’를 통해 2009년에는 154만원의 수익금을 모아 아름다운가게 건립을 지원했고, 2010년에는 250만원을 모아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연탄 선물과 청소년 야간 급식을 지원했다. 한살림서울 남부지부는 ‘어린이 벼룩시장’을 통해 160만원의 수익금을 모아 저소득층 어린이 공부방 2곳과 대모산 생태보존회에 기부했다. 경기남부 수원지부는 ‘초록장터’를 통해 모은 수익금을 금곡동 청소년 교육문화나눔터와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물품 후원으로 사용했는가 하면, 서울 동부지부는 ‘강동 벼룩시장’을 열면서 매해 수익금 200여만 원을 지역복지단체와 청소년 공부방 지원, 북한어린이돕기 등에 지원해 오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 북부지부의 경우 복지분과 모임을 만들어 월 3회씩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락배달 활동과 월 1회 홀몸노인 생신상 차리기, 지역 초등학교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간식 지원 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또한 지역 한살림 별로 텃밭이나 생산지와 교류 활동을 통해 생산된 재료로 김장을 해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나눠주는 활동들도 하고 있다. 또한 한살림서울의 경우 안전한 먹을거리를 가난한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 바람에 경기도 광명과 서울의 용산 두 곳에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만들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5. 남은 과제들

소개된 몇 가지 사례에서 보듯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 보다 집중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한살림으로서는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를 분명히 하는 노력’과 ‘조합원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필요와 요구를 잘 읽고 실현시키는 노력’, ‘한살림이 지향하는 가치를 지역 속으로 확산시키는 과정’과 ‘지역사회가 당면한 생활의 과제와 개인의 관심사들을 한살림 활동으로 수렴해오는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동시에 펼쳐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동안 한살림이 지향해 온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의 가치에 ‘지역살림’을 조직적 비전과 활동으로 구체적으로 연결시켜내야 한다. 여기에는 중간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도 포함된다. 안팎의 변화와 흐름들을 진단하고 조합원, 조직,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자원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지역살림 운동지원센터와 대안적인 활동 영역들을 인큐베이팅 해 주는 지역살림기금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지역살림운동의 영역들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반 생협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한살림 역시 아이들(자녀)의 성장 사이클과 지역에서 조합원의 활동 사이클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조합원의 활동 주기를 고려한 세대 간 공동 기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혼이나 독신, 자녀가 없는 세대 등 가족 구성의 특성과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연령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역살림운동의 영역을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한다.

한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한살림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에서 살림의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나갈 수 있는 협력의 파트너들이 필요하다. 특히 자족성이 높은 큰 단체들일수록 연대 활동에는 상대적으로 소극

적인게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체와 자원들을 발굴하고, 협력 당사자들을 파트너로 조직하고 연대하는 노력은 지역 살림운동에서 매우 중요하다. 동종(同種)과 이종(異種) 협동조합들 간의 협동을 통한 협동조합 지역사회 만들기, 사회적 기업, 자활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협력을 통한 살림의 경제 블록 만들기, 나아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NGO, NPO 단체, 나아가 지방의회와 행정 영역들과 협력을 통해 공익(公益)과 공익(共益)을 조화시켜 나가는 노력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한살림이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연대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우선 한살림이 직접 필요한 것을 조직하고 만들어내서 함께 하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기존 한살림의 조직 활동을 확장하는 것과, 새로운 영역들을 분화시켜서 자립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필요한 것을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미 필요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 파트너들이 기존의 역할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활동에 대한 직접 참여와 모금이나 회비, 홍보나 교육 등을 통한 참여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요즘 들어 이념의 차이를 떠나 ‘복지’가 중요한 정치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복지 경쟁’의 시대다. 극심한 양극화와 취약한 복지 안전망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의식이 만들어 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면서 ‘자본주의 4.0’ 시대를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이른바 유럽 선진 국가들과는 다른 발전 경로를 통한 우리나라의 현실과 특성에 맞는 진단과 처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대안 사회와 발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미약한 상태에서 이행 전략에 대한 시나리오도 부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살림을 포함한 협동조합 영역의 지역사회 기여의 의미는 분명 새롭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아이쿱생협

김대훈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장)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1995년 창설 100주년을 기념해 열린 영국 맨체스터 총회에서 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ICA 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은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 그리고 협동조합이 준수해야 할 일곱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곱 가지의 원칙 중 제 7원칙은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동의한 정책을 가지고 그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생협은 협동조합의 제 7원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2010년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도 독립된 하나의 조항으로 반영했다.¹ 한국에서 만난 일본의 생협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원칙이 개정된 한국의 생협법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일본의 생협법에는 아직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기여해야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한다.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당위적으로 법에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의 생협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공감과 합의를 이루고 법 조항으로까지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원칙으로, 법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왜 기여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그리 쉽게 해명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생협 운동이 비교적 구매력이 높은 중산층 소비자들이 기반이다 보니, 지역의 문제에 참여하는 것에는 다소 소극적이라던가, 폐쇄적인 조직으로 보는 시선도 없지 않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생협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생협들이 본연의 사업을 통해서, 또는 조합원 참여의 조직을 통해서 지역의 건강

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8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 등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지역이 처한 현실과 조건을 살펴보면서 아이쿱생협이 지역의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 펼쳤던 그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생협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할 때 고민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을 언급하려고 한다.

1. 한국사회, 지역사회, 지역의 현실

한국 사회에서 지역은 어떤 의미일까? 사전적으로는 지역은 일정한 범위의 지리적인 구역을 의미한다. 또 기후, 지리, 문화적 특징에 의해 다른 곳과 구별되는 어떤 구역을 의미하거나 행정적으로 구분된 지리적 영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지역의 의미는 수도권, 특히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언급할 때 많이 사용된다. 즉 서울(수도권)은 서울(수도권), 지역은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한동안 시민단체 활동가 모임에서 서울 외의 지역을 지방이라 부르지 말고, 서울도 서울지역이라고 표현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 서울은 서울로, 나머지는 지역으로 또는 지방으로 통칭해서 표현하는 것이 서울 중심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실제로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일자리의 50.4%가 수도권에 있고 전체 법인세의 57.4%는 서울에서 거두어지고 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인구의 65.8%는 수도권에 살고 있다. 2009년 기준 인구 1인당 소득은 전남이 1,060만원인데 반해 서울은 1,547만원으로 1.5배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49%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100대 기업 본사의 91%는 수도권에 몰려있다. 문제는 이런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5년 59.3%였던 예금, 대출 등의 금융의 수도권 집중도는 2010년에 70.1%까지 올라갔다.²

² “자본주의 4.0 <서울-지방 격차 줄이자>”, 『조선일보』, 2011년 8월12일자 참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는 대학은 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을 맞기도 어려운 곳이 많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KTX를 타고 부산의 병원을 마다하고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 백화점도 서울의 백화점을 굳이 찾아오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도, 돈도, 일자리도, 교육도, 문화도, 정치도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날이 갈수록 쇠락해 가는 것이 문제라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서울에 30평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 이상을 꼬박 모아야 한다. 평균 지출수준을 고려하면 56년 6개월 동안 저축해야 겨우 집 한 채 장만할 수 있을 정도다. 지난 30여 년간 집이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대상화 되면서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투기 이익을 좇아 떠돌아다니는 한편, 오랫동안 한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건설 사업에 떠밀려 정든 곳을 떠나고 이웃과 결별해야 했다. 새로운 이웃들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과거 동네, 마을,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받던 비공식적 사회 안전망은 해체되었다.

과열된 교육열도 심각하다.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 인맥 만들어주기를 시작하고, 일부 유치원들은 기존의 학부모에게 추천서를 받아야 입학을 허가해준다고도 한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불나방처럼 서울로, 강남으로 모여든다. 전 생애에 걸쳐 생존을 위해 끝없이 경쟁해야만 하는 지금 우리 사회의 심각성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높은 자살률로 잘 드러나고 있다.

“협동조합은 세상을, 우리가 사는 지역을 구할 수 없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세상을, 우리가 사는 지역을 구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우리 사회, 지역의 문제를 살펴보니 암울하기만 하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행복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한 걸까 답답하기도 하다. 더구나 아직 규모나 역량이 작은 한국의 생협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더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덴마크 코펜하겐을 방문했을 때 디자인 센터 건물 외벽에 걸린 현수막에 이런 문구가 걸려있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작은 용기가 되지 않을까? “디자인이 온 세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디자인이 세상을 구하는 것을 도울 수는 있다.”

2. 협동조합의 DNA

스웨덴의 콤파니언 스톡홀름(COOMPANION STOCKHOLM)이라는 단체는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곳이다. 이 단체 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그간 한 일 중 하나가 지역이 쇠락하여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기존에 있던 가게들이 영업이 어려워 문을 닫게 되는데, 이를 그대로 두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주민들 스스로 생협을 만들어 새로 점포를 만들거나 문을 닫을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하도록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런 지역은 여타의 사회서비스 제공도 원활하지 않아 보육시설, 아동과 노인의 보호센터, 약국도 없는 경우가 많아 협동조합이 생활용품의 판매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자연스럽게 담당하게 된다고 한다.

또 베트남의 사이공 생협(SAIGON COOP)은 정기적으로 트럭에 물건을 싣고 가게가 없는 인근의 농촌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다.³ 비슷한 사례가 일본에도 있는데 2009년 후쿠이 현민 생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매장이 없는 지역의 조합원과 주민들을 위해 이동판매차(하트) 운영을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 차량 3대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10년에는 8대가 투입되고 2,300여 명이 이용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⁴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경제적인 이윤 추구 가능

3 2010년 사이공생협 연차보고서.

4 国際協同組合年に向けて、『地域再生における協同組合の役割』、『生活協同組合研究』, 2011. 6, No 1. 425,公益財団法人 生協総合研究所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일러자료번역모임 장윤정(송리생협),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번역자료 참조).

성만 따지자면 할 수 없는 일을, 시장자본을 대신해서 협동조합들이 지역의 회생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생협을 비롯한 협동조합이 탐욕적인 이윤의 추구가 아니라 필요의 충족을 위해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약자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CA의 폴린 그린 회장은 조합원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운동에는 이런 정신과 가치가 마치 DNA와도 같이 내장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3. 아이쿱생협의 지역사회 기여 사례

1) 다양화되는 조합의 지역사회 기여활동

아이쿱생협은 2009년 정기총회에서 ‘윤리적 소비’를 아이쿱생협의 정체성으로 규정했다. 그 결과 이전보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회원생협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나눔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조합원의 일상적인 기부, 나눔 활동의 틀을 만드는 등 회원생협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전에 했던 생협의 나눔, 기부활동은 비정기적이고, 아이쿱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 단발성이었다면, 2009년 이후부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협의 사회기여와 사회참여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기여활동의 영역도 기부와 나눔 활동 위주에서 사회적, 정치적 기여활동의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고, 교육과 문화적 영역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음의 표 참조)

아이쿱 지역생협들의 지역사회 기여활동 현황⁵ (2010년 4월 현재)

지역	구분	경제적 기여	사회적 기여						문화적 기여						정치적 기여					
			매장개설	소외계층 나눔·지원 ¹			지역연대 ²			생태·문화활동						사회/지역정책 개입				
				푸드뱅크	1%나눔	공부방 등 지원	조합비면제	지역생협네트워크	시민단체연대	지역신문광고게재	문화행사 (공연놀이영화)	벼룩시장·장터	하천생태탐사	친환경마을조성	환경행사	지역현안참여	급식관련활동	어린이안전조례	의회방청·모니터	윤리적소비·공정무역캠페인
서울	강서	○	○	○	○	○	-	-	-	○	○	-	-	○	-	○	○	-	○	
	양천	○	○	○	○	○	○	○	○	○	-	-	-	○	사학비리고발	○	-	○	○	
	구로	○	○	○	○	○	-	○	○	○	○	-	-	-	자사고반대	○	-	○	○	
수도권 서부	고양	○	○	-	○	-	○	-	-	○	○	-	-	○	-	○	-	-	○	
	덕양	○	○	-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	-	○	
	부천	○	○	-	-	-	-	○	-	○	-	-	-	○	운하반대	○	-	-	○	

⁵ 염찬희, “생협이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4회포럼 자료집, 2010, 19쪽.

	부천시민	○	○	-	○	-	-	○	○	○	○	-	-	○	S S M저지	○	-	○	○
	강화	-	-	-	-	-	-	-	○	-	-	-	-	-	조력발전반대	-	-	-	○
전북지방	남원	-	-	-	-	-	-	-	○	-	○	-	-	-	지리산케이블반대	-	-	-	○
	청주 Y	-	○	-	○	-	-	○	-	○	○	-	-	-	S S M저지	○	-	-	○
	한밭	○	○	-	○	-	○	○	-	○	○	-	-	○	금강유역환경운동	○	-	-	○
	천안	-	-	-	○	○	-	○	-	○	-	-	-	-	경전철토론회	○	-	-	○
	순천	○	○	○	○	○	-	-	-	○	-	-	-	-	-	-	-	-	○
전남	한예림도	-	-	○	-	-	-	○	○	○	○	-	○	○	-	○	-	-	○
	빛고을	○	-	○	○	○	-	-	-	○	-	-	-	-	-	○	-	-	○
	빛시민	○	-	○	○	○	-	-	-	○	-	-	-	-	-	-	-	-	○

	빛자연	○	○	○	○	-	-	-	-	○	-	-	-	-	-	○	-	-	○
	여수 Y	○	○	-	○	○	-	○	-	○	-	-	-	○	-	○	-	-	○
경남	진주	○	○	○	○	○	-	○	-	○	○	-	-	○	검찰비리 대응	○	-	-	○
	김해	○	○	○	○	○	-	○	○	○	○	-	-	-	유적지 케이블 반대	-	-	-	○
	부산푸른	○	○	○	○	-	○	○	-	○	○	-	-	-	-	○	-	-	○
	대구행복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1 나눔위원회 운영: 양천, 덕양햇살, 한울남도, 진주, 대구행복, 순천

2 지역센터 건립: 인천, 순천, 남원, 한밭

2) 생협 본연의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위의 표에서 경제적 영역의 활동으로 분류된 매장사업은 대체로 생협의 활동가들도 사업 활동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 같다. 즉, 협동조합이 하는 매장사업이나 공급 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이고 지역사회 기여활동은 기부와 나눔, 사회적 연대 등의 활동을 통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지만 기부나 나눔 활동 등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에 앞서 협동조

합은 협동조합 본연의 사업 그 자체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아이쿱생협의 회원조합들은 2010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91개의 매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들 91개 매장에는 약 600여 명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고 매장의 직원은 대부분 여성으로, 육아 등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새롭게 일을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육아, 자녀 교육을 병행하면서 일하길 원하는 지역사회의 여성과 주민에게 처지와 조건에 맞게 시간을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매장사업은, 그 자체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쿱생협의 회원조합이 운영하는 매장들은 법정 최저임금에 비해 30% 정도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 아이쿱생협의 매장 직원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고, 매장 경영의 개선을 통해 직원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여러 이유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힘든 취약계층을 매장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도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이 경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의 사회적 기업의 기준에도 부합하게 된다.)

매장사업을 통한 사회적 기여는 고용의 확대 뿐 아니라 친환경 농업의 확산과 윤리적 생산-소비의 선순환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밀 소비를 예로 들자면 한 매장에서 한 달에 약 1톤의 우리 밀을 제빵용 원료로 사용하므로 전국 100개의 매장에서 사용하는 우리밀의 양만 1,200톤에 이른다. 2011년 우리 밀 생산량이 약 4만 톤으로 추산되는데 연간 1,200톤을 한 조직에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과거 5년 사이에 아이쿱생협은 조합원 규모와 사업규모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다. 이는 각 조합이 조합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조합원의 출자와 차입을 통해 추진한 매장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루어진 성과인데, 그 결과는 고용 규모와 친환경 식품 취급량의 증가로 이어졌다. 고용의 규모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매장사업을 통해 600여 명의 고용이 늘어났고 동시에 조합의 사무국에도 약 200여 명의 직원이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다. 연합조직과 사업조직의 고용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6년 170여 명 규모에서 2011년

에는 1,200명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되고 있는 사회 전반의 상황에서 아이쿱생협의 이와 같은 고용창출의 성과는 그 자체로 커다란 사회적 기여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변화를 위한 아이쿱생협 조합과 조합원의 활동

위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 생협의 지역사회 기여활동은 사회 전반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영역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생협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적인 참여가 있었고, 2010년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에도 생협의 조합원들이 큰 역할을 했다. 2010년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의제가 쟁점이 되어 치러진 사상 첫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전국적인 연대조직을 결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선거 국면에서는 정당과 후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추진된 서명운동의 결과, 전국적으로 35만명 가량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 중 10%에 달하는 3만 5천명의 서명을 전국의 70여 개 아이쿱생협의 회원조합에서 조직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서명에서 한 조직에서 10%의 서명을 해냈다는 것은 조합과 활동가들이 그만큼 친환경 무상급식의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조합이 가진 역량을 집중했다는 의미이다. 거의 전 회원조합들이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사회의 여론을 만들고 후보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회의 변화를 위한 활동은 전국적인 의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조합이 기반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 복지, 경제적인 문제 등을 다루고 참여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의제에 결합하는 생협의 활동은 여타의 시민단체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 시민단체는 대체로 직업 활동가와 대표자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반면, 생협은 일상적인 대면활동이 이루어지는 매장과, 마을모임 같은 조합원 조직을 기반으로 활동이 전개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생협의 대표자나 임원들이 아무리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자신의 요구를 사회화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같이 세련되게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생협은 일상적인 대면접촉을 하는 매장을 통해, 또 마을모임을 통해 우리 지역과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의 방향을 공유하면서 여럿이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풀뿌리 대중조직으로서 생협의 역량과 면모가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운동과 2010년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에서 잘 발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웃과 연대하고 나누는 나눔 활동

아이쿱생협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중 가장 많은 조합원이 참여하는 일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이들과 연대하는 나눔 활동이다. 매장에서는 빵이나 식품을 푸드뱅크에 지원하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억원에 달한다. 조합에서는 조합비의 1%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지역의 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나눔 활동은 2003년에 기부금액 3백만원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연간 3천만원이 조합원이 직접 참여한 모금으로 구성되어 여러 곳에 사용되었다. 2007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1년 동안 1,005명의 조합원은 북한의 어린이 급식지원을 위한 모금에 참여했고 지원된 금액은 6천만원에 이른다.

최근 2009년에는 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긴급구호를 위해 3,068명의 조합원이 2,600여 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기도 했는데, 2009년 한 해 동안 조합원의 모금으로 조성된 기금만 7천만원에 달한다. 2010년에는 아이쿱생협의 공정무역 파트너인 필리핀 사탕수수 농민들의 낙후된 공장을 개선하기 위해 7,617명의 조합원, 생산자, 직원이 참여하여 1억6천5백만원의 마스코바도 공장 건립기금을 조성했는가 하면, 아이티 지진피해를 지원하기위한 ICA공동모금에도 3,184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4천만원

이 넘는 기금을 모아 ICA에 전달하기도 했다.

나눔 활동을 위한 조합원 모금은 부정기적인 것으로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 조합원과 활동가들이 제안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모금 캠페인이 시작되면 다수의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단일 모금 캠페인에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7천여 명에 이르기까지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나눔 운동의 성과를 통해 협동조합이 강조하고 있는 연대의 가치,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가치에 대해 아이쿱생협 조합원들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회가 만들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아이쿱씨앗재단의 설립

아이쿱생협은 2009년부터 공익재단의 설립을 준비해왔는데 그 결과 2010년 12월에 재단법인인 ‘아이쿱씨앗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은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아이쿱생협의 지원활동을 확대, 체계화하고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다. 아이쿱씨앗재단은 1차적으로 아이쿱생협의 조합원을 기반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형태의 나눔 운동의 추진에서 재단은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조합원 참여를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재단의 기본적인 기조는 날로 심화되는 신자유주의 폐해와 사회 양극화의 상황 속에서 건강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재단의 사업(모금과 배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재단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논의와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단의 사업방향, 목표, 과제가 구체화되면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획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6) 물류 인프라와 생협센터 등 생협 인프라를 통한 사회적 기여

또 하나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생협의 인프라를 통한 사회적 기여의 가능성이다. 생협은 물품을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해 물류센터, 배송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평소에 이런 인프라는 조합원의 물품이용을 위해 가동되겠지만 때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자 생협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생협의 사례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데 1995년 한신대지진 당시 생필품의 공급을 위한 지역의 인프라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생협들이 지역의 피해주민을 위해 식수와 식품을 운송하고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생협은 대형 재난에 대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재해 시 물자제공협정'을 체결했는데 2010년에 광역지자체 46곳, 기초지자체 310곳에 이른다고 한다. 또 일본생협연합회는 연합회에 납품하는 가공업체 72곳과 '지진 등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상품의 우선공급에 관한 협정서'를 맺어 긴급지원 생활물자(음료수, 컵라면, 통조림, 휴대용 난방용품, 휴지, 기저귀, 생리대 등 231개 품목)를 연합회 쪽에 우선 납품하여 재해지역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도 한다. 1995년 한신대지진을 계기로 만들어진 생협과 지자체의 재해 대비체계는 2011년 3월11일에 발생한 도호쿠 대지진 당시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한다.⁶

이 같은 경험이 아이쿱생협에도 있다. 2010년 국회는 2011년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던 급식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유는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사업이 지자체의 사업이어서 중앙정부는 더 이상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들은 당장 발들에 불이 떨어졌다. 방학 기간 동안 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아이들의 급식마저도 제대로 못하게 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아름다운재단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긴급 모금캠페인을 시작했고 약 4억원의 기금을 모금했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모금은 되었으나 문제는 지역아동센터

⁶ “정부보다 발 빠른 지원 ‘재해 있는 곳에 생협있네’”, 『한겨레』, 2011년 4월 27일자 참조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475058.html)

터에 방학동안 급식용 물품을 지원, 공급하는 일이었다. 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지원이 필요한 센터에 현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직접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해주는 방식을 바꿨고, 그 결과 아이쿱생협과 협력하여 방학 중 급식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에 있는 160여개의 지역아동센터와 5,0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2개월 동안 식재료를 문제없이 공급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이쿱생협의 전국 물류체계가 뒷받침이 되어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낙후 지역의 어린이들이 입을 책을 모아 보내는 일을 하는 언론사, 단체 등에서 지원 요청도 간혹 있다. 생협이 보유한 자산, 인프라는 오로지 조합원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고 생협 구성원들이 생각했다면, 일본 생협의 지진 피해지원활동이나 아이쿱생협의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활동 같은 일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협의 자산, 인프라가 단지 조합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중요한 공적 자산, 사회적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주목이 필요하다.

아이쿱생협이 남원, 순천, 대전, 인천 등에서 실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협센터도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생협센터는 앞으로 프로그램 기획역량과 운영역량을 보다 체계화한다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의 공간, 문화적 활동의 공간, 생활정치참여의 공간으로서 지역 사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생협의 과제

1) 지역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의 조직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활동은 그 원칙에 표현된 바와 같이 구성원의 동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조직의 지도자나 대표자가 가진 개인적인 지향에 의해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인식, 동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

로 할 때 협동조합이 지역에 기여하는 활동이 현실성을 가지고 결집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조합원들이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아이쿱생협의 조합들은 매달 1,000여 개의 마을모임을 운영하면서 6,000여 명의 조합원이 직접 대면 접촉하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모임과 같은 구조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조합원의 의사와 의지를 결집해가려는 노력과 과정이 모든 일의 기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생협을 통해서 단순히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협동하는 사회, 공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의 이념과 가치를 배우고 자신의 삶의 체계를 작은 부분부터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조합원이 많아지도록 하고, 이들이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2) 사업적 도전

협동조합은 문제의 제기만으로는 본연의 역할과 임무가 완성되지 않는다. 조합원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업적 도전을 실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 방식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문제, 지역의 필요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조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접 사업적 도전을 하려는 용기와 시도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반찬가게, 바느질 공방, 캐이터링 서비스,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설립운영, 성미산 마을의 마을기반 사업체 설립처럼, 워커즈 콜렉티브 또는 소규모 협동조합의 형태로 사업적 도전을 시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같은 노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가능한 일을 꼽아보자면 지역의 여러 생협들이 서로 협력해서 공동의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미 안산, 수원 등 몇몇 지역에서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지역사회와 다양한 구성원, 역량의 네트워크

지역사회에 대한 생협의 기여는 기부활동이나 나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제적 영역, 사회문화적 영역, 정치적 영역으로 그 활동의 영역과 폭이 넓어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생협이 근거하고 있는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협동과 연대의 가치가 실현되는 곳으로 변화, 발전시켜 가려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생협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금도 지역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일은 일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 단기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일이 대부분이다. 또 활동방식의 차이 때문에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 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의 문제 등을 함께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에 각자의 구성원들이 가진 역량을 모아낸다면 더욱 활기찬 지역을 만들어 가는 큰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본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키타가와 타이치 (후쿠이현립대학 경제학부 교수)

1. 협동조합과 지역사회문제

협동조합과 지역사회를 둘러싼 문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그 중 획기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A.F.레이들로 박사의 문제 제기이다. 잘 알려져 있듯 지금부터 30년 이상 전에 보고된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레이들로 보고)에서는 일본의 종합농협에 주목하면서 협동조합이 실천해야 할 4가지 우선분야 중 하나로 ‘협동조합 지역사회 건설’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ICA 1995년 원칙’(협동조합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ICA 성명)에서는 제 7원칙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Concern for Community)가 새롭게 포함되어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관계 구축의 중요성이 재차 인식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일본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 또는 JA)에서는 1997년에 JA 강령이 책정되었다. 이 강령에서 농협은 ‘농업과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조직’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해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농업, 먹을거리(食), 녹색(綠)’(제1기둥)과 관련된 사업과 함께 ‘환경, 문화, 복지’(제2기둥)와 관련된 사업을 통해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건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산림조합 그룹에서도 ICA 1995년 원칙을 바탕으로 JF강령과 JForest산림조합 강령을 각각 만들었다.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협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발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협동조합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로 전환한다면, 이는 ICA 1995년 원칙 중 제 7원칙(또는 각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강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가와 동일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

과 협동조합 이념에서 어떤 부분과 연결되는지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지금 ‘지역사회의 공헌’이 중요한 이유: 두 가지 배경

이 글에 주어진 열쇠말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다. 최근 일본에서 지역재생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이 원고의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최근 정부(省庁)의 문서나 협동조합 방침, 연수회 등 다양한 곳에서 지역재생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 두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는 이른바 ‘시장원리주의’의 만연으로 지역의 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이러한 흐름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헤이세이(平成-현재의 일본연호) 행정대합병’의 추진이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역에서’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의 자립(자율)¹을 촉진하는 정책이 기초가 되어, 지자체를 강화할 목적으로 행정 합병이 강력하게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이는 주민과 행정(지방자치의 사무소)의 거리감을 일으키고 직원의 업무 합리화만 강조한 나머지 현장 정보가 보이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가 전해지지 않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커뮤니티의 약화, 고령화, 저출산 시대 속에서 세대간의 연계 약화, 생활을 둘러싼 안전에 대한 위협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 농촌과 산촌에서는 농림지를 비롯한 지역자원이 황폐화 되고 있고, 한편으로 도시의 역 앞 상점들은 문을 닫고 시내 중심지는 인구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는 최근 작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건이 불리한 농산촌 지역을 중심으로 오히려 위기감

¹ ‘자립’은 어떠한 원조와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리를 잡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경제적인 개념에 쓰이는 반면, ‘자율’은 자신이 자신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부의 제어로부터 탈피하고 자신이 세운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며 주로 행동적 개념을 말한다.(広辭苑 발췌) 이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지역 만들기에서 중시되는 것은 ‘자율’이다.

을 지렛대로 삼아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역설립형 법인’(취락형 농업법인)² 등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담당자라 할 만한 주체의 형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근저에는 지역정책의 기조 변화에 따른 행정합병에 대한 위기감, 자연재해를 계기로 생겨난 자원봉사와 지역공헌에 대한 의욕 고조, 다시금 자신의 삶과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되돌아보려는 의식의 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일본의 농업정책은 논농업(水田農業)의 후계자로 취락영농을 육성해 왔는데 반드시 논농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규모 원예작물 도입이나 농산물 가공 및 판매사업 추진, 연령별 부회(部會) 설치나 지역자치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옛날 쇼와(昭和)시대의 마을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농협이 합병되기 전의 지점(점포)을 운영하는 경우나, 취락 간 연계를 통해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레이들로 보고는 주로 도시의 종합농협을 염두에 두면서 협동조합 지역사회 건설을 전망하였는데, 최근의 이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작은 지역을 배경으로 한 종합농협적인 구조 만들기의 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일본에서는 지역재생을 둘러싼 논의로 지역의 ‘자조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책’으로 지역재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에 기대려 하거나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지역 자립’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각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금 필요한 것은 행정이 지역의 ‘자립’에 일정 부분 책임을 가지고 자율적인 지역 만들기, 즉,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은 전제하면서 지역 주민이 조금이라도 주체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바람직한 모습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조건 정비와 실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해야 할 과제는

² 농산촌지역의 새로운 움직임에 관해서는 오다기리 토쿠미(小田切徳美) 편저, 『JA総研研究叢書4 農山村再生の実践』, 農文協, 2011, 키타가와(北川) 편저, 『農業・むら・くらしの再生をめざす集落型農業法人』, 全国農業会議所, 2008 등을 참조.

작은 지역 차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협동(協同)과 협동(協動)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구조 만들기라 할 수 있다.

3. 지역재생, 세 가지 관점

지역재생이라는 말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그 명확한 정의는 없는 듯하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논자에 따라 비중을 두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농촌에 대형프로젝트 유치와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는 ‘지역개발’과는 다른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³ 현장의 실태에 입각한 실증적 선행 연구들에서 배우면서 여기서는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사람의 관점이다. 지역사회의 인구 감소에 가능한 제동을 걸고 정착 인구를 증가시킬 것, 더 나아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재구축하고 지역 외부와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과제이다.

둘째는 자연환경·지역자원 관점이다. 지역 공간을 구성하는 풍부한 자연환경을 적절히 보존하고 나아가 농림지와 전통적인 음식문화 등 유형·무형의 지역자원을 적절히 관리하는 동시에 활성화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과제이다.

셋째는 경제적 관점이다. 농림업을 포함한 지역산업의 진흥과 이에 따른 종사자의 소득향상, 나아가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작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지역 속에서 경제를 순환시켜 나가는 것이 과제이다.⁴

지역재생이란 이렇게 지역에서 사람과 사회, 환경과 자원, 경제가 균형 잡힌 종합적인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한 실천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조합원 제도를 기반으로 조합원의 이익 증진(또는 그 보완)을 위해 활동하는 협동조합이 이러한 지역재생을 위해 어떻게 역할을 발휘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3 岡田知弘, 『地域づくりの経済学入門』, 自治会研究社, 2005, 134~135쪽.

4 오다기리(小田切) 교수는 농산촌 재생을 위한 새로운 지역산업진흥으로 제6차 산업형경제, 교류산업형경제, 지역자원활용형경제, 작은 경제의 4개 경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小田切, 『農山漁村地域再生の課題』, 大森彌他 공저, 『実践 まちづくり読本—自立の心・協働の仕掛け—』, 公職研, 2008.

4. 농촌지역 재생을 둘러싼 국가 차원의 논의

앞에서도 언급했듯 최근 농촌지역의 재생을 둘러싸고 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省庁)가 다양한 검토와 정리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개략적인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농림수산업성(農林水産省)의 『도시와 농촌의 협동(協働) 추진에 관한 연구회 보고』(2008년 8월)

이 보고서의 열쇠말은 ‘도시와의 협동(協働)’이다. 즉, 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NPO, 대학, 기업 등도 포함하는 도시와의 대등한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도시와 농촌의 협동의 방식과 방책을 정리하고 있다.

이 때, 도시의 주체와 농촌을 연결시키는 역할이나 양자의 요구를 구체적인 활동계획으로 발전시켜 협동으로 이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다음 활동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서 ‘코디네이터’를 중시하고 이를 농촌 쪽의 행정과 농협 직원, 직접형 NPO에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물건과 물건, 사람과 사람을 매칭시키는 코디네이터가 아닌 활동계획 작성과 평가까지도 할 수 있는, 즉 일반적인 코디네이터와 비교해 좀 더 깊이 있게 참여하는 역할이 기대되며 다음에서 설명할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의 매니지먼트 의미도 포함하여 사용되고 있다.

2) 국토교통성의 『‘새로운 연결’을 통한 지역 활성화 보고서』(2009년 3월), 『인구과소지역 연구회 보고서』(2009년 4월)

국토교통성에서도 많은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보고서에 대해 언급하겠다.

우선 ‘새로운 연결’에 관한 연구회 보고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연결이란 ‘다양한 주체가 협동하여 지역의 과제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 정의하고, ‘핵조직’이라는 열쇠말을 만들어 협동조합과 NPO, 공익법인 등을 이 핵 조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업 항목으로 ① ‘지역주민의 생활을 받

쳐주는 활동’ 및 ②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들고, ‘중간지원조직’에 의한 지원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간지원조직이란 ‘지역의 조직이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 자금, 지혜, 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등의 중계를 하는 조직으로, ‘핵조직’ 만들기 지원, 인재육성과 매니저 알선, 다양한 주체가 협동체제를 구축하기까지의 코디네이트를 수행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구과소 보고서에서는 ‘기초적인 생활서비스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① 일상적인 의료 및 복지, 구매, 지역의 교통을 위한 작은 규모 거점 정비 ② 서비스제공은 기초지자체, 각종조합, NPO 등이 분담 ③ 기존조직에게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들고 있다. 그리고 ③의 기존조직의 구체적인 예로 우체국, 지역상점 등과 함께 농협을 거론하며 지역의 공공(公共) 서비스 제공의 담당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3) 총무성(総務省)의 『새로운 커뮤니티의 방식에 관한 연구회 보고』(2009년 8월)

이 보고에서는 ‘지역협동체’를 지역 만들기의 중심으로 삼고 다양한 주체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종합적, 포괄적으로 매니지먼트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매니지먼트란 ‘지원의 창구가 되어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면서 과제를 찾고 해결방법을 기획’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된 농림수산성의 ‘코디네이터’와 매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치회, 반상회, 기업, 상점가조합, 환경자원봉사, 상공회의소, 노인클럽,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어린이회, 지역금융기관, 아파트관리조합, 주민의 자치적인 소방단체, 각종 마을만들기 단체, NPO와 돌봄 자원봉사자와 같은 다양한 주체가 지역(마을)만들기를 실천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협동조합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참고로, 최근 내각부가 제시한 『‘새로운 공공(公共)’선언』(2010, 6)에서 공공영역을 국가와 행정의 영역만으로 한정 짓지 않고, 그 곳에 사는 주민 간의 자발적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보다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들려는 이른바 ‘

새로운 공(公)'(새로운 공공)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국민, 시민 단체와 지역조직, 나아가 기업과 정부 등이 일정의 규칙과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당사자로 참가하여 협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응방책을 정리하고 있지만 여기에 협동조합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2011년 6월, 3월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을 겪으며 『‘새로운 공공’에 의한 이재민지원활동에 관한 제도의 방향에 대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사회의 담당자, 조직의 힘”의 결집’을 호소하면서 지역의 생활을 지탱하는 일상생활물자의 공급, 농림수산업의 부흥을 위한 사업재개를 위해 재해지역의 협동조합과 전국의 협동조합이 연계하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재생 지원을 염두에 둔 NPO-생협-농협의 연계에 의한 거점 만들기과 지원 네트워크 만들기도 시작되고 있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도 참고하면서 ‘복합협동조합’ 혹은 ‘일본형 사회적 협동조합’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단, 사회적 경제가 어떠한 미래를 전망하는지, 일본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는지,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 농촌지역 재생을 둘러싼 국가 차원의 논의는 약간 겉도는 인상을 지울 수 없으며 개념, 영역,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이 애매모호 하다. 또한 코디네이터나 지역의 공공적 서비스 제공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협동조합에 일부 기대하고 있지만 대체로 협동조합의 위치를 낮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협동조합이 펼치는 지역재생 활동

여기에서는 기존의 조사연구 등을 기초로 주로 농촌지역을 염두에 두면서 협동조합이 펼치고 있는 지역재생 활동의 두 가지 실천 유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⁵

⁵ 이 글에서는 주로 (재)협동조합경영연구소와 (사)JA총합연구소가 사무국을 담당하여 필자도 참여한 연구회에서 거론된 사례를 소개한다. 상세한 내용은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제휴방책연구회가 발행한 『協同組合と地域社会との連携～事例調査に基づく実証的アプローチ～』, 2010. 3을 참조.

1) 협동조합에 의한 내부화 또는 준내부화

첫째는 협동조합 스스로가 내부화하여 말하자면 지역재생의 문제를 사업과 경영의 일환으로 설정하고 자기 책임 하에 진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역재생을 협동조합의 사업과 운영방침으로 삼고 자기 책임 하에 추진한다는 의미로서 내부화, 혹은 협동조합의 조합원과 멤버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준내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유형의 사례로는 후쿠이현민(福井県民)생협의 이동매장사업(이동판매차량: 하트)을 들 수 있다.

후쿠이현은 한계 취락(65세 이상이 마을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마을. 역자주)이 아직 적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이 조사한 바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나 후계자 부족 문제에 이어 마트가 가깝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후쿠이현민생협에서는 무점포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아직 높다는 것과 와카사(若狹)지역에서 이동매장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았다는 점, 그리고 2009년 8월에 실시한 요구조사(매장상권 밖의 무점포사업 이용조합원 265명 대상) 결과, 이동매장을 ‘이용한다’고 답한 사람이 절반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이동판매차량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초 판매차량 3대로 시작하여 주간 이용자가 약 1,200명이었던 사업은 2010년 9월 현재 차량 8대(2대를 추가할 예정), 주간 이용자 약 2,300명으로 증가하였다. 현황을 살펴보면, 차량 한 대의 1일 공급액은 64,770엔(2010년 6월)이고, 객단가가 1,600엔(점포 1,950엔)인데 70%가 조합원 카드를 제시하지 않았고 60세 이상의 이용객 비율이 약 84%로 추산되었다. 또 2010년부터 현의 ‘취락이동판매 시스템 모델 사업’에 의한 인건비 보조를 일부 받아 현이 지정하는 후쿠이 시내의 한계취락 19개 지역도 대상에 넣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활동의 특징은 지역재생을 생협의 단순한 지역 공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업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점포와 무점포 사업에 이은 제 3의 공급사업으로서 이동매장사업은 후쿠이현민생협이 내걸고 있는 ‘사업네트워크 전략’을 바탕으로 복수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을 늘리는 전략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역자치회와 연계의 싹이 트기 시작하였다. 일부

지구(地區)에서는 주민설명회의 일환으로 이동판매에 관한 설명회가 이루어져 지구 사람들 스스로가 이동판매를 알리는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비조합원의 이용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 촉진, 조합원활동과의 연관, 농산물 집하업무 등 새로운 경제사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제와 동시에 복지사업 등 다른 사업과의 상승효과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2) 연계, 외부화에 의한 지역재생

두 번째 유형은 지역재생이 반드시 협동조합의 사업과 운영방침에 배치되지 않고, 협동조합으로서 자기 완결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 기능이나 시설의 관리, 운영을 지역주민 등에게 위탁(외부화), 혹은 연계, 협동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례로는 JA미나미 신슈(JAみなみ信州, 미나미신슈농협-마츠카와지역 사업본부 마츠카와종합지부) 이쿠타(生田)사업소 관내의 농협, 지역설립형 법인, 그리고 행정의 연계를 들 수 있다.

이 사례의 배경에는 우선 농협의 광역 합병과, 농협개혁에 따른 생활매장과 금융지점을 비롯한 시설 및 조직기구의 재편이 있다. 이 지역에서는 본래 주식회사 생활화센터 이쿠타가 지역설립형 법인이 존재하였다. 이 법인은 초등학교의 폐교 위기 속에서 농촌 유학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전 조직이 모체가 되어 2000년에 지역 주민 약 80명이 자본금을 모아 설립하였고 교류사업과 체재시설의 관리를 맡고 있다.

2006년 농협이 관내 유희시설의 해체, 금융사업 축소, 경제사업 위탁 등을 내세우며 생활용품, 생산자재, 연료사업 등을 법인에 위탁하였고 또 법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을 농협사업소 관내로 이전하였다. 2007~2008년에는 생활용품, 생산자재, 연료 등 경제 사업의 일부 및 농협 여성부의 공동구매 배송 업무, 급유소(등유)의 배송업무를 법인이 수탁 받았다. 또한 2009년에는 급유소의 토지 및 시설을 법인에게 양도하고 지역사업소 관내의 정미기(4대) 관리

를 법인이 수탁하는 등 기능 연계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농협은 금융 지점을 폐쇄하였지만 농협사업소에 지역출신 OB를 임시직원(지역매니저)으로 배치하여 인적 연계 체제를 정비하였다.

행정과의 관계에서는 2009년 행정(마츠카와마을 이쿠타지부)의 창구를 농협사업소 내에 개설하였다. 농협 사업소 안에 농협직원(지역매니저), 법인, 행정에서 파견한 3명의 직원이 종사하며 같은 건물에서 각종 행정 서비스·상담, 농협 구매품의 구입, 지역주민과의 교류거점, 나아가 재해 시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이 지구에서는 농협의 광역합병에 따른 조직재편과 사업통폐합 속에서 그 지역 법인에게 시설과 사업을 이관하고 행정을 포함한 연계체제를 정비하는 것을 통해 지역재생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본래 공민관(公民館, 마을회관)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지자체가 세심하게 대응하여 왔다는 점도 한 몫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법인대표자의 리더십, 당시의 농협사업본부장의 열의와 네트워크, 그리고 지역매니저의 채용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지구 내 3취락 중 1취락이 중심이 되어 일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지구 전체, 나아가 마을 전체에 이 모델을 알리기 위해 자치를 포함한 구조 만들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맺음말: 지역사회 공헌과 협동조합의 과제

지역재생이 필요한 상황을 만든 근본 원인은 시장원리주의가 만연한 데에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존재가치가 시장원리주의를 뛰어넘는 사회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시장원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를 지역사회 속에서 키워가는 것이 협동조합의 사명이다.

본래 협동조합은 조합원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조합원의 이익증진을 위해 사업을 하는 경제조직이다. 그런 의미에는 공익성을 내걸고 있는 NPO 등

과는 다르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스스로가 내걸고 있는 이념(운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원리주의를 극복하고 조합원의, 조합원에 대한 사업과 활동을 수단으로 하여 활동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과 활동의 수준을 규정하는 것은 조합원의 공통 이익을 근원으로 한 ‘조직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원리주의가 가져온 많은 문제는 지역(특히 지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유지해 온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형태로 침식해 가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의 사업과 활동 목적을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증진에만 두어서는 시장원리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설정할 수 있는 적정한 범위는 다양하지만 사업과 활동 속에 지역이라는 관점을 두고 사람과 사람의 새로운 연결을 창조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합원에 한정된 것이 아닌 다양한 개인에게 접근하며, 단순히 사업이용자(손님, 고객)가 아닌 동료로서 조합원을 계속해서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노력할 것을 선언한 ‘ICA 1995년 원칙’ 중 제 7원칙(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은 오늘날 시장원리주의의 극복을 강조한 원칙으로 다시 한 번 재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번역: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김연숙)

감수: (아이쿱생협연합회 국제팀 이은선)

協同組合と地域社会への貢献

北川太一（福井県立大学経済学部 教授）

1. 協同組合と地域社会問題

協同組合と地域社会をめぐる問題は古くて新しいものであるが、その画期となったのは、言うまでもなくA.F.レイドローによる問題提起である。よく知られているように、今から30年以上前に報告された『西暦2000年における協同組合』（レイドロー報告）では、日本の総合農協にも注目しつつ、協同組合が取り組むべき四つの優先分野の一つとして「協同組合地域社会の建設」が示された。このことが契機となって、「ICA95年原則」（協同組合のアイデンティティに関するICA声明）では、第7原則として新たに「地域社会への関与」（Concern for Community）が位置づけられ、協同組合と地域社会との関係構築の重要性が改めて認識されるようになった。このことを受けて、例えば日本の農業協同組合（以下、農協、JA）では、1997年にJA綱領が策定された。そこでは、農協が「農業と地域社会に根ざした組織」として「社会的役割」を果たしていくことが謳われている。そして、「地域農業、食、緑」（第一の柱）への取組みとともに、「環境、文化、福祉」（第二の柱）への取組みを通じて「豊かな地域社会」を築くことが明記されている。また、漁業協同組合や森林組合グループでも、ICA95年原則を踏まえてJF綱領やJForest森林組合綱領がそれぞれ策定されている。

協同組合と地域社会との問題を、地域社会において協同組合がいかなる役割を發揮すべきか、そのために協同組合はどのようなしくみで事業・活動を展開していくべきかという課題に置き換えるならば、それは、ICA95年原則における第7原則（および、各協同組合が有している綱領）をいかに具体的に実践していくか、という問題に他ならない。その意味で、めざすべき方向、協同組合理念における位置づけは明確に示されていると言える。

2. いま、なぜ「地域社会への貢献」なのか ―二つの背景―

ところで、本稿に与えられたキーワードは「地域社会への貢献地」であるが、このことが強調さ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近年、日本において地域再生の問題がクワ

一ズアップされてきたことが指摘できる。後にみるように、最近、国(省庁)の文書や協同組合の方針・研修会など、さまざまなところで、地域再生に関する議論が行われているのである。

こうした背景には、次の二つの点があると思われる。

第一は、いわゆる「市場原理主義」の蔓延により地域の疲弊が生じたこと、および、こうした流れの一つとして捉えることができる「平成の行政大合併」の進展である。

“地域でできることは地域に”をスローガンとして、地域の自立(自律)¹を促す政策が基調となり、地域の受け皿としての自治体を強化する目的で、行政合併が強力に進められてきた。ところがそのことが、住民と行政(役場)との距離感を発生させ、要員の合理化に伴って現場の情報が見えない、現場の声が届かないといった現象を惹起させている。

また、伝統的なコミュニティの脆弱化、高齢・少子化時代のなかでの異世代連携の希薄化、くらしをめぐる安全・安心の脅威が深刻化しつつある。農山村では、農林地をはじめとする地域資源の荒廃が、一方市街地においては、“駅前商店街のシャッター街化”や“まちなか人口の空洞化”といった現象がみられる。

第二は、その一方で、近年、小地域でみられる新しい動きがみられ、そうした取組みに注目が集まっていることである。例えば、条件不利地域である農山村地域を中心に、危機感をバネにした地域住民主体による既存の枠組みにとらわれない動きがある。あるいは、「地域設立型法人」(集落型農業法人)²などの地域社会における新しい担い手とも言うべき主体の形成がみられる。こうした動きの根底には、地域政策の基調変化を受けた行政合併に対する危機感、自然災害を契機としたボランティアや地域貢献意欲の高まり、改めて自分たちのくらしや居住する地域を見つめなおそうとする意識の醸成があると考えられる。

また、近年、日本の農業政策においては、水田農業の担い手として集落営農の育成が進められてきたが、そこでは必ずしも水田農業のみにこだわるのではなく、小規模園芸作物の導入や農産物の加工・販売事業への取組み、年代別の部会の設置や地域の自治機能の一部を担うところもみられつつある。

例えば、昭和旧村単位で、地域住民が農協合併前の支店(店舗)を運営するケースや、集落間連携によって農産物直売所を運営するところがある。前述のレイドロ一報告は、主として都市的地帯における総合農協も念頭に置きながら協同組合地域社会の建設を展望したが、近年のこうした一連の動きは、小地域を舞台とした総合農協的なくみづくりの萌芽であるともみることができよう。

いずれにせよ日本においては、地域再生をめぐる議論として、地域の「自助努力」には限界があり「国策」として地域再生に積極的に取り組むべきだという主張に対して、国への「甘え」や「依存」を捨てて「地域の自立」を促すべきであるという主張（対立）がある。その是非はともかく、今、求められているのは、行政等が地域の「自立」に一定程度責任を持ちつつ、自律的な地域づくり、すなわち、行政などが果たすべき役割は前提としながら、地域の住民が少しでも主体的に地域の活性化に取り組むことができる社会をあるべき姿として指定し、そのための条件整備と実践を行うことである。協同組合が取り組むべき課題は、小地域レベルでみられるさまざまな活動にアンテナを張り、協同（協働）のネットワークを構築していくためのしくみづくりであると言える。

3. 地域再生、三つの視点

さて、このように地域再生という言葉は頻繁に使われるものの、その明確な定義はないと思われる。この言葉を使う論者（立場）によって比重の置き方は様々であるが、農村への大型プロジェクトの誘致や企業の進出促進といった「地域開発」とは異なるものとして捉える必要があろう³。現場の実態に即した実証的な先行研究に学びつつ、ここでは次の三つの視点を示しておきたい。

第一は、人の視点である。地域社会の人口減少にできる限りの歯止めをかけて定住人口を増やすこと、さらには、地域に居住する人と人とのつながりの再構築や地域外との交流を促進することが課題となる。

第二は、自然環境・地域資源の視点である。地域の空間を構成する豊かな自然環境が適正に保全されていること、さらには農林地や伝統的な食文化など有形・無形の地域資源が適正に管理され、かつ活性化のために有効に活用していくことが課題となる。

第三は、経済の視点である。農林業も含めた地域（地場）産業の振興やそれに伴う従事者の所得向上、さらには、地域住民が主導して小さな事業を起こすことや、地域の中で経済を循環させていくことが課題となる⁴。

このように地域再生とは、地域における、人・社会・環境・資源、経済のバランスのとれた総合的な発展をめざす取り組みであると考えられるが、こうしたことに、組合員制度を基盤として、組合員の利益増進（あるいはその補完）を行う協同組合が、どのように役割発揮を果たしていくかが問われている。

4. 農村地域再生をめぐる国レベルでの議論

前述のように、近年、農村地域再生をめぐる、国レベルで各省庁がさまざまな検討・とりまとめが行われている。ここでは、その概略と特徴をみておきたい。

1) 農水省『都市と農村の協働の推進に関する研究会報告』(2008年8月)

ここでは、「都市との協働」がキーワードになっている。すなわち、都市の住民だけではなく、NPO、大学、企業等も加えた、都市との対等なパートナーシップ形成が重要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うえで、都市と農村の協働のあり方や方策をとりまとめている。

その際、都市部の主体と農村を出会わせるのみの役割や、両者からの要望を具体的な活動計画へと昇華し協働へと導くばかりでなく、その評価を行い、その結果を次の活動へと活かす役割も負う存在として「コーディネーター」の役割を重視し、農村側として行政や農協の職員、直接型NPOに期待する。ここでは単純に物と物、人と人とをマッチングさせるというコーディネーターだけではなく、活動計画の作成や評価までも行うとするなど、通常のコーディネーターと比べてやや踏み込んだ役割が期待されており、後述する国交省の「マネジメント」の意味も含めて使われているようである。

2) 国交省『「新たな結」による地域の活性化報告書』(2009年3月)、『過疎集落研究会報告書』(2009年4月)

国交省でも多くの報告書が出されているが、ここでは二つの報告書について言及しておく。まず、「新たな結」に関する研究会報告である。ここで新たな結というのは、「多様な主体が協同して地域の課題への対策に取り組むこと」と定義したうえで、「核組織」というキーワードを設定し、その中に協同組合やNPO、公益法人等を位置づけている。そして、重要な取り組み項目として、①「地域住民の生活を支える取り組み」、および②「地域資源を活用した地域活性化のための取り組み」をあげ、「中間支援組織」による支援を強調する。なお、ここで言う中間支援組織とは、「地域の組織が活動を行うために必要な人材、資金、知恵、情報を提供し、ネットワーク等の仲介を行う組織。『核組織』づくりの支援、人材育成やマネージャーの斡旋、多様な主体が協働体制を築くまでのコーディネートを行う。」と定義づけられている。

次に、過疎報告書では、「基礎的な生活サービスの確保」の重要性を強調したうえ

で、その具体的内容として、①日常的な医療・福祉、買い物、地域交通のための小さな拠点の整備、②サービス提供は基礎的自治体、各種組合、NPOなどが分担、③既存組織には多様なサービスの提供をあげる。そして、③の既存組織の具体例として、郵便局や地元商店などとともに農協があげられており、地域の公共的サービス提供の担い手にな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る。

3) 総務省『新しいコミュニティのあり方に関する研究会報告』(2009年8月)

ここでは、「地域協働体」を地域づくりの核として位置づけ、多様な主体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提供(実行)を総合的、包括的にマネジメントする姿が描かれている。ここで「マネジメント」とは、「支援の受け皿となり、活動を総合調整しながら課題発見と解決方法の企画」という定義が与えられており、先に示した農水省の「コーディネーター」とよく似た内容となっている。また、自治会、町内会、企業、商店街組合、環境ボランティア、商工会議所、老人クラブ、地区社会福祉協議会、子ども会、地域金融機関、マンション管理組合、消防団、各種まちづくり団体、NPOや介護ボランティアといった様々な主体が、地域(まち)づくりを実行するとされているものの、ここに協同組合という言葉は登場しない。

ちなみに、最近内閣府が示した『「新しい公共」宣言』(2010年6月)においては、公共領域を国家や行政の領域記のみに限定するのではなく、そこに住む住民どうしの自発的な支え合いと積極的な参画をとおしてよりよい地域社会を創ろうとする、いわゆる「新たな公」(新しい公共)をめぐる議論がなされた。しかしながら、国民、市民団体や地域組織、さらには企業や政府等が一定のルールとそれぞれの役割を持って当事者として参加し協働することの重要性を述べ、それに向けた対応方策をとりまとめているものの、そこに協同組合は登場しない。

ただし、本年6月、3月11日に発生した東日本大震災を受けて、『「新しい公共」による被災者支援活動等に関する制度等のあり方について』がとりまとめられた。そこでは「さまざまな『社会の担い手組織の力』の結集」を呼びかけ、現状において「地域の生活を支える日常生活物資の供給、農林水産業の復興に向けた事業再開等のために、被災地の協同組合と全国の協同組合が連携して取り組んでいる。また、長期的な復興支援を見据えたNPO－生協－農協の連携による拠点づくりと支援ネットワークづくりも始まっている。」と協同組合の活動を評価している。そのうえで、イタリアの「社会的協同組合」なども参考にしながら、「複合協同組合」あるいは「日本型社会的協同組合」の制度を検討する必要性が記されている。ただし、

社会的経済なるものがどのような未来を展望するのか、日本において実現するための条件が十分に備わっているのか、今後十分な検討が必要であると思われる。以上、農村地域再生をめぐる国レベルでの議論については、いずれにおいても言葉がやや踊っている印象は拭えず、概念、領域、機能等に関する内容は曖昧である。また、コーディネーターや地域の公共的サービス提供の担い手としての役割が協同組合に一部期待されているが、総じて協同組合の位置づけそのものは低いと言えよう。

5. 協同組合による地域再生の取り組み

ここでは既存の調査研究などをもとにしつつ、主として農村地域を念頭に置きながら、協同組合による地域再生の取り組みのパターンを二つ示してみたい⁵。

1) 協同組合による内部化もしくは準内部化

第一は、協同組合自らが内部化して、すなわち、地域再生の問題を事業・経営の一環として位置づけて自己の責任のもとに進めるケースである。この場合、地域再生を協同組合の事業や運営方針に位置づけて、自己の責任のもとにすすめる意味での内部化、あるいは協同組合の組合員・メンバーが有する地域のつながりやネットワークを活かしてすすめる準内部化が考えられるであろう。

このタイプの事例として、福井県民生協による移動店舗事業(移動販売車:ハーツ便)の取り組みがある。

福井県ではまだまだ限界集落が少ないと言いながらも、実際に県が調査してみると、鳥獣害被害や後継者不足の問題に次いで、スーパーが近くにないという結果が示された。一方、福井県民生協では、無店舗組合員のカバー率がまだまだ高いこと、若狭エリアでの移動店舗に関する試行的な取り組みがあったこと、さらには、2009年8月にニーズ調査(店舗商圏外の無店舗利用組合員265名を対象)を行ったところ、移動店舗を「利用する」と答えた人が半数近くあったことなどを受けて移動販売車の本格展開に踏み切った。

当初、販売車3台でスタートし、週間の利用人数は約1,200人であったが、現在(2010年9月)では8台(さらに2台増やす予定)、週間の利用人数は約2,300人となっている。現状では、1車1日当たり供給高64,770円(2010年6月)、客単価1,600円(店舗1,950円)であるが、7割が組合員カード未提示、60歳以上の利用者割合

が約84%と推計されている。また、本年度より県の「集落移動販売システムモデル事業」による人件費補助を一部受け、県が指定する福井市内の限界集落17地区も対象として事業を展開している。

この取り組みの特徴は、地域再生を生協の単なる地域貢献ではなく、あくまで事業として位置づけていることである。すなわち、店舗と無店舗に続く第3の供給事業として移動店舗事業を位置づけ、福井県民生協が掲げる「事業ネットワーク戦略」のもとで複数事業を利用する組合員を増やす戦略として展開している。こうした取組みの結果、地元自治会と連携の萌芽があることも見逃すことはできない。一部の地区では、住民説明会の一環として移動販売の話が行われ、地区の人たち自らが移動販売の広報を行うといった動きも生まれている。ただし、現状では非組合員の利用が多いため、組合員加入の促進、組合員活動との連関、農産物の集荷業務など新たな経済事業の可能性を模索するとともに、福祉事業など他の事業との相乗効果の発揮が課題となっている。

2) 連携・外部化による地域再生

第二のパターンは、必ずしも、地域再生が協同組合の事業や運営方針の正面に位置づけられておらず、協同組合として自己完結的には取り組まれていないものの、事業機能や施設の管理・運営を地元住民などに委託(外部化)、あるいは連携・協働するケースである。

このタイプの事例として、JAみなみ信州(まつかわ地域事業本部松川総合支所)生田事業所管内における農協、地域設立型法人、行政の連携の事例がある。

この取組みの背景には、まず農協の広域合併と農協改革にともなう生活店舗や、金融店舗をはじめとする施設ならびに組織機構の再編がある。当地域では、もともと株式会社活性化センター生田が地域設立型法人として存在していた。この法人は、小学校廃校の危機のなかで山村留学の受け皿として設立した前身組織が母体となって、2000年に地区住民約80人が資本金を出し合って設立し、交流事業や滞在施設の管理などを行ってきた。

2006年に、農協が管内遊休施設の解体、金融事業の縮小、経済事業の委託等を打ち出す中で、生活用品、生産資材、燃料事業等を法人へ委託し、さらに法人が経営する飲食店を農協事業所管内に移設した。

2007～2008年には、生活用品、生産資材、燃料など経済事業の一部、および農協女性部の共同購入の配送業務、給油所(灯油)の配送業務を法人が受託

し、2009年には、給油所の土地・施設を法人に譲渡、地域事業所管内の精米機(4台)の管理を法人が受託するなど機能連携が進められている。また、農協は金融店舗を閉鎖するものの、農協事業所に地元出身のOBを臨時職員(地域マネージャー)として配置することによって、人的連携の体制を整えた。

さらに行政との関係では、2009年に行政(松川町生田支所)の窓口を農協事業所内に開設し、このことによって農協事務所内には農協職員(地域マネージャー)、法人、行政の3人の職員が従事し、同じ建物で行政の各種サービス・相談、農協購買品の購入、地域住民の交流拠点、さらには災害時などの情報共有が行えるようになった。

このように当地区においては、農協の広域合併に伴う組織再編や事業統廃合の中で地元法人への施設や事業の移管が行われ、行政も含めた連携体制の整備により地域再生が試みられている点に特徴がある。こうした背景には、もともと公民館活動が活発な地域という風土を有し、比較的行政がこまめな対応をとっていることも奏功していると言えよう。もちろん、法人代表者のリーダーシップ、農協事業本部長(当時)の熱意やネットワーク、さらには、地域マネージャーに人を得たことも要因としてあげられる。今後は、現状では地区内3集落中の1集落が中心となっている傾向があり、地区全体、さらには町全体にこのモデルを広げるために、自治も含めたしくみづくり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る。

6. むすび ―地域社会貢献と協同組合の課題―

地域再生を必要とさせる状況を生み出した根本原因が市場原理主義の蔓延にあること、そして、協同組合の存在価値が市場原理主義を超えた社会の実現にあるとするならば、いろいろなアプローチがあるにせよ、市場原理主義を克服するためのしくみを地域社会の中に育むことは、協同組合の使命であろう。

そもそも協同組合は、組合員(メンバーシップ)制を原則としており、組合員の利益増進のために事業を行う経済組織である。この意味において公益性を掲げているNPO法人などとは異なっている。したがって協同組合は、自らが掲げる理念(運動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市場原理主義を克服し、組合員の(組合員に対する)事業や活動を手段として行うべきものである。そして、事業や活動の水準を規定するのは、組合員の共通の利益(共益)を源泉とした「組織力」であるとされてきた。

ところが、現代における市場原理主義がもたらした様々な問題は、地域(とりわけ地方)を巻き込む形で露呈している。さらには、地域社会を維持してきた人と人とのつながりや信頼関係を切り裂く形で浸食しているのである。ということは、協同組合の事業や活動の目的を組合員個々の利益の増進にのみ立脚するのでは、市場原理主義を克服することはできないことになる。

すなわち、その適正な範囲はさまざまであるが、事業や活動の中に地域という視点を据え、人と人との新しいつながりを創造するようなしくみの構築が必要となるのである。組合員に限らずさまざまな個人にアプローチし、単なる事業利用者(お客さん、顧客)ではなく、仲間としての組合員を絶えず獲得する努力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は、この点にある。「地域社会の持続可能な発展」に努めることを宣言した「ICA95年原則」における第7原則(地域社会への関与)は、現代においては市場原理主義を克服することを謳った原則として、もう一度再設定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思われる。

1 「自立」と「自律」との違いは、前者が「他の援助や支配を受けず自分の力で身を立てること」を意味し、主として経済的な概念であるのに対して、後者は「自分で自分の行為を規制すること。外部からの制御から脱して、自身の立てた規範に従って行動すること」を意味し、主として行動的な概念をいう(『広辞苑』による)。この意味において、地域づくりで重視されるのは「自律」である。

2 農山村地域における新しい動きについては、例えば、小田切徳美編著『JA総研研究叢書 4農山村再生の実践』農文協(2011年)、北川編著『農業・むら・くらしの再生をめざす集落型農業法人』全国農業会議所(2008年)などを参照。

3 岡田知弘『地域づくりの経済学入門』自治会研究社(2005年)134～135ページ。

4 小田切氏は、農山村の再生に向けた新しい地域産業振興のためには、「第六次産業型経済」、「交流産業型経済」、「地域資源活用型経済」、「小さな経済」という四つの経済の重要性を指摘している(小田切「農山漁村地域再生の課題」大森彌他共著『実践 まちづくり読本—自立の心・協働の仕掛け—』公職研、2008年)。

5 ここでは主に、(財)協同組合経営研究所と(社)JA総合研究所が事務局となり、筆者も参画した研究会において取りあげた事例を念頭に置いている。詳細は、協同組合と地域社会連携方策研究会編『協同組合と地域社会との連携～事例調査に基づく実証的アプローチ～』(2010年3月)を参照のこと。

[付記]

本稿は、以下の拙稿をベースにして加筆・修正を加えたものである。

北川太一「地域再生における協同組合の役割」『生活協同組合研究』Vol.425(2011年6月)

지역 활동가들이 보는 협동조합의 나눔 활동

때/곳: 2011년 11월14일(월) /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회의실

참석: 김이창(구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진홍(익산 희망연대),

이혜정(인천 오순도순공부방), 정경섭(마포 민중의 집)

사회/정리: 김아영(생협평론 편집위원)

사회: 안녕하세요?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눔 이야기는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활동과 나눔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협동조합들은 조합원의 민주적 관리와 경제적 참여 등 7가지 원칙을 세우고 이것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 기여의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리는 활동과 호혜적인 나눔의 실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좌담회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분들과 함께 지역사회 활동과 나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분들의 활동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독자사업보다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운동단체들과의 동반 성장을 지향

정경섭(마포 민중의 집/이하 정경섭): 안녕하세요? 마포 민중의 집의 정경섭입니다. 마포 민중의 집은 2008년도에 처음 설립됐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독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지역운동 사례들을 공부하다 보니 독일의 사회문화센터, 프랑스의 문화의 집, 일본의 국민관 등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스웨덴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민중의 집이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민중의 집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100년 넘게 지역에 존재하고 있으며, 건물 하나에 만남의 장소, 시민단체가 같이 쓰는 사무실, 대형 강의실도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델을 우리

나라에도 적용해보자고 시작한 곳이 마포 민중의 집입니다. 지역의 노동조합이 시민단체나 진보정당과 같이 네트워크를 맺고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해보자는 게 마포 민중의 집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재 중랑구와 구로지역에도 생겨 3개가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관계를 맺고 민중의 집 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독자적인 사업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운동 단체들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지역 내 환경 운동, 성소수자운동, 장애인운동 등의 단체들이 민중의 집에 와서 자기 단체의 이름으로 모임도 진행하고 강의도 개최하는 등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지역의 단체들이 각자 너무 바빠서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중의 집은 단체들이 서로를 알고, 소통하도록 하는 역할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은 완전히 회원의 회비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미후원이라고 후원을 받는 프로젝트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로 쓰입니다.

아이들을 한마을에서 공동체적으로 키우는 시스템

이혜정(인천 오순도순공부방/ 이하 이혜정): 저는 인천에서 오순도순 공부방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혜정입니다. 오순도순 공부방은 1999년에 민간 활동의 차원으로 처음 문을 열었고, 2004년부터 법제화 아동복지시설로 전환되었습니다. 저희는 IMF 이후 경제적 위기 때문에 결식아동의 문제가 사회화 됐을 때 주부 세 명이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지원한 쌀을 지급하기 위해 실시한 가정방문을 통해 급식을



이혜정 (인천 오순도순공부방)

받는 아이들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돌보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던 공부방을 1970년대 빈민운동 차원의 공부방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재원도 없이 그냥 선생님 중 한 분이 본인의 집을 내주셔서 시작했는데 다행히 후원회가 꾸려지고 십시일반 모아지는 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기초 학습 지도와 종이접기, 미술활동,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리를 잡았고, 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전환한 후 지금 13년째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재정문제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 법제화된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했습니다. 안정적인 재정 지원 없이 공부방을 운영하게 되면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는 했지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다보니 지도점검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부방에 대한 평가를 점수화 하면서 불합리한 점들이 있는 거죠. 일단 수급자나 장애 아동 순서로 점수를 매기게 되고, 평균 출석률도 따지다 보니 개별 아이들의 상황을 제도로 규정지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인천지역에서는 평가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지역아동센터의 83%가 평가를 거부하기도 했구요. 지역아동센터에 환경이 열악한 친구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보편적인 복지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매몰되다 보니 지역아동센터가 교육철학과 운영철학 없이 정부의 아동복지시설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공동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한 마을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 오순도순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이지만 공부방이라는 이름을 놓지 않는 것도 역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지협(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별로 소통의 시스템을 갖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돕는 일에 주력

김이창(구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하 김이창): 저는 구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이창입니다. 저희 센터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소속된 단체와는 달리 국가 예산을 100% 지원받는 기관으로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산 지원을 정부에서 받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결혼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운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별도의 사업으로는 방문 지도사가 직접 찾아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거나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는 ‘방문 지도사업’과 결혼 이민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치료 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고용 지원과 취업 능력 개발 등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사회: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거나 실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런 활동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좌담회 주제는 지역사회 활동과 나눔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지원을 받는가보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이창: 사실 모든 다문화 가정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언어나 문화 차이에 관련된 어려움도 많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점은 갑자기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지원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도움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사회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 이민 여성들을 단순히 수혜의 대상으로 보고 일방적으로 후원을 하기보다는, 이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중참여형 시민운동을 이끌기 위해 다양한 사업 펼쳐

이진홍(익산 희망연대/ 이하 이진홍): 저는 익산에 있는 지역시민단체인 희망연대의 이진홍입니다. 희망연대는 시민이 있는 시민운동 즉, 대중 참여형 시민운동을 위해 시작된 단체입니다. 시민단체는 행정이나 지방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의 개발과 진행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농촌 마을이나 학교 담장, 사회복지시설에 벽화를 그리는 활동입니다. 벽화 그리는 작업은 미술 전문가 몇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실력을 갖춘 회원들과 다양한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공공미술작업으로,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활동 때마다 약 200명이 모여서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행복 도시락 자원 활동입니다. 요리학원생과 식당 운영 회원들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조손가정이나 장애인가정에 특별한 외식 요리와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업과 시민의식 교육을 위한 강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제작소 사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사회 창안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여 익산시에 사업을 제안하는 형식인데, 해를 거듭할수록 행정에서도 적극 사업에 반영하려고 노력해 실제 민관 협력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 각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듣다보니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빨리 좋아질 것 같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하는 활동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고, 다른 듯 하지만 비슷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지역 기반 활동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 협동조합들이 지역사회 활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활동을 고민하는 단체들에게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준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역사회 활동은 누구에게든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중요

이혜정: 공부방 활동을 10년 정도 해보니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소통이 안 되면서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거나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간담회를 요청하고 협의회를 만드는 등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 활용하니까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비용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부방 이용 아이들이 밥 먹을 때 급식 카드를 사용해서 체크하도록 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방에서 밥을 먹는 것을 단순히 한 끼를 카드로 사 먹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서로 나누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급식 카드를 거부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저희 생각을 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니 큰 마찰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은 누구에게든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홍: 시민 단체들도 행정이나 시의회 관계자와 만나고 부딪히는 일이 거의 날마다 일어납니다. 특히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힘이 있으면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입니다. 민관협력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면 온전히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회창안대회의 경우도 처음에는 시민들이 내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행정 관계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년을 거치면서 시공무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도 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시민들을 동원의 대상에서 참여의 주체로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관협력은 행정이라는 조직과 시민단체의 생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구성원의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관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두 분께서 실질적인 경험을 토대로 제도적, 구조적인 접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지역사회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고민하는 마포 민중의 집과 구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역사회 활동을 펼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라도 서로 나눌 수 있다

정경섭: 저희는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인간과 인간이, 자연과 인간이 돈을 매개로 하지 않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직장도 별로고, 학벌도 별로면 어딘가에 가서 활동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마포 민중의 집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라도 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의 결혼 이민 여성들은 자기 나라의 언어를 가르쳐 주는 강좌를 할 수도 있고,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라면 다림질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좌를 할 수 있습니

정경섭 (마포 민중의 집)



다. 혼자 사는 할머니는 자신이 알고 있는 요리에 대해 알려주면 되는 거구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누구라도 서로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김이창: 구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인의 성장과 관계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이 모여 관계의 발전을 이루고 이것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주로 가족관계에서 개인의 역할과 성장을 중심으로 고민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이 확대되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경섭: 요즈음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을 '재는 다문화야'라는 식으로 구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스웨덴의 민중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곳에서는 민중의 집을 만들기 시작했던 시대정신이 이주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모든 안내서가 6, 7개의 언어로 되어 있고 각 나라의 문화 배우기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더 다양해질 텐데 이에 대한 진지한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이창: 다문화가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는 구별하지 않고 통합해서 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따로 분리해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



김이창 (구로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죠.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를 다문화가족 특성화학교로 지정하고 그 아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다시 다문화가족 아이들끼리만 분리해 내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혜정: 사실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은 다문화라는 표현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구별 지으려 하고 프로그램도 따로 만들려고 하느냐는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부방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일까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빈곤한 삶을 탈피하도록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공부방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네 분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지역사회 활동은 분명하게 지역의 상황과 현실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시민들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과 내용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되어 할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지금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 보는 작업일 것 같습니다.

보통 지역사회 활동하면 ‘나눔’을 많이 떠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말에 나눔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역에서 나누려는 사람들과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동안 나눔에 대해 느꼈던 부분을 이야기 해볼까요? 아울러 지역사회 활동이 나 나눔에 대한 조언을 협동조합에게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담회에 참석한 분들 모두 직접, 간접으로 협동조합과 관계를 맺고 있거나 함께 사업을 진행해 보셨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눔의 방법 획일화 경향, 나눔 실천 방식에 대한 성찰 필요

정경섭: 저는 나눔의 방법이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맘때쯤이면 김장 담그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한 활동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방법이 김장 담그기만으로 획일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다양화되기 위해서는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에 대한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나눔은 공동체적 삶을 확장하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때가 되면 어느 시설이나 기관에 가서 결연을 하고 돈이나 과자 같은 것을 주는 일회성 행사는 공동체적 삶의 확장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를 맺어 서로가 나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들의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예술적인 분야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에 오는 친구들에게 세상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고,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상상력을 나눠주고 싶기 때문이죠. 아직 직접 실천해 본 것은 아니지만 나눔의 다양화를 통해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공동체가 확장되는 나눔의 순환구조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일단 협동조합의 규모가 저희보다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체적으로 풍요로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네트워크 형성에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찾아가서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네트워크 형성을 수줍어한다고 해야 하나요? 주변의 작은 단체들을 아우르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통해 지역의 단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홍: 희망연대가 있는 익산에서는 아이쿱손리생협이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대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아마 활동가분들이 예전부터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관계를 잘 맺어왔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생활협동조합의 경우 푸드뱅크를 통해 어려운 가정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빵을 제공한다거나 물품 나눔을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베이커리의 케이크 접시를 재활용하기 위해 모으는 과정에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보았는데요. 그런 나눔들이 조합비나 조합원들이 매장에서 물품을 이용한 결과로 모아진 거라면, 이제는

조합원의 삶과 생활로 나눔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협이 추구해야 할 것은 각각의 조합원들이 삶 속에서 연대하고 나누는 가치를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사업의 수익을 통해 나누는 것도 지역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원래 생협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가치가 조합원들 삶과 생활 속에서 녹아나고 실천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 일까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삶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생협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조합원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의 활동가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합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활동가들이 무대를 만들고 조합원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시도되었으면 합니다.

물질 나눔보다는 삶 속에서 연대하고 활동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

이혜정: 저도 생협을 이용하고 있지만, 주변의 인식이 일단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벽 같은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개인적으로는 생협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논리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대형 마트에서 연말이면 기관이나 시설에 과자를 전달하고, 과자 상자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매장에 전시하는 그런 식의 물질적인 활동은 진정한 나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 뭔가를 주는 것보다 구체적인 활동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을 나누는 것을 통해 나눔의 의식을 공유하고 그것이 다시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활동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쉬운 점은 생협이 생협끼리의 연대가 아닌 다른 단체와의 연대에는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이진홍: 익산은 도농 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생협이 지역 농업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시민 단체들이 대형마트에게 지역생산물, 농산물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요구를 많이 하는데요, 생협에서도 지역을 살리는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혜정: 저는 생협이 조합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청소년동아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공부방 아이들과 생협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먹을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 주기 위해 생협 활동을 직접 보고,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내용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요, 한 아이가 생협은 직원을 뽑을 때 학력을 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취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구체적인 생각을 하는 걸 보면서 이런 것이 나눔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결국 어떤 것을 경험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려는 작업이 나눔인 거죠. 이번에 저희 공부방이 있는 지역에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지역 자체가 없어질 것 같은 위기감 등을 담아 1년 동안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해주고 공유해 주는 것이 바로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누군가 생협에 뭔가를 요청하면 함께 해주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먼저 필요한 곳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김이창: 제가 개인적으로 생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나눔과 사람을 따로 떼어내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이럴 때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협에서 그걸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한 명씩만 있으면, 조합원들 중에 재능가진 사람을 적절한 활동에 연결 해주고,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나눔을 실천하는데 사람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울러 일반적으로 나눔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재원이 나누겠다고 생각되는 대상에 100% 쓰일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나눔을 전문적으로 책임감 있게 잘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행정에 일정 비용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생협에서 나눔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의 일부를 인력과 행정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눔을 해야겠다는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나눔 활동에 대해서 남들이 하던 거 말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단체의 경우 한국어 교실이 중요한데 여기에 지원하겠다는 사람이나 단체보다는, 더 새로운 것, 남과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얼마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두 협동조합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역에서 함께 하기 위해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친환경 물품의 가격에 대한 부분과 지역 농업과의 연계 부분에 대한 말씀은 생협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이기도 하고 또 함께 풀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가격과 농업 문제는 친환경 식품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협 앞에 놓여 있지만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원칙이고 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생필품에 대한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



추려고 새로운 방식의 가격 정책을 실행하려 노력하고 있고, 특정 지역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러한 문제들 역시 지역사회 활동과 나눔을 통해 구체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좌담회에 참석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눠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편지

- 이슈** ▪ 종편 방송을 어찌 할꼬?
- 사람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반값 등록금’과 교육복지 실현!

르뽀 강은 가르지 않고 막지 않는다

종편 방송을 어찌 할꼬?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정치 세력과 언론 세력이 아합한 산물, 종편

언론법 개정에서부터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사업자 선정부터 온갖 특혜 논란이 일었던 종합 편성 채널(이하 종편)이 기어이 방송을 시작했다. 종편 방송 신문사들은 대대적인 홍보와 합동 개국 쇼를 통해 분위기를 띄우고 다른 매체사들은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인기 연예인과 PD들이 종편으로 옮기는 소식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고 이들의 몸값이 화제가 되었다. 방송 제작비는 상승하고 종편에 필요한 콘텐츠를 만드는 외주 제작사들은 모처럼 호황을 맞았다. 종편이 드라마와 예능 등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다는 기대를 보이는 사람도 있다. 기존 지상파 방송 3사 중심에서 지상파와 다름없이 보도와 교양, 드라마와 예능 등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있는 종편채널이 4개나 등장하면서 방송 시장이 구조적인 변화로 출렁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송시장의 변화는 방송 산업에만 머물지 않고 한국 사회 전반과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 지형과 사회 여론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사실 산업 자체만 놓고 보면 방송시장은 3조원도 되지 않는 작은 시장이다. 삼성전자 2010년 영업이익의 5분의 1, 현대자동차 올 한해 당기 순이익 절반에도 못 미치고, 연간 10조원 이상이라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보다도 적다. 시장규모는 작은데도 조중동 등 보수 신문사들에게 방송진출의 길을 터주는 것을 놓고 술한 대립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만큼 정치 사회적으로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여당은 온갖 궤변과 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재투표와 대리투표 논란을 일으키며 2009년 7월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했다. 신문과 대자본이 방

송에 진출하면 글로벌 미디어그룹이 만들어져서 세계적인 미디어 산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방송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명분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은 자신들의 정치적 대변자인 보수신문에게 방송이라는 선물을 안기기 위한 빌미에 불과했다. 오히려 한정된 시장에서 방송사 수가 늘어나 방송사들의 매출은 줄어들 위기에 놓였고, 세계시장에 내놓을 콘텐츠를 생산할 재원은 말라가고 있는 형편이다. 공멸의 위기가 감돌고 있다. 종편들은 글로벌 미디어그룹을 향한 자본 투자와 경쟁력 강화는 커녕 유치산업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며 온갖 특혜를 요구하여 연명을 꾀하고 있는 정도다. 종편은 보수정권의 정치적 의도와 신문 산업에서 위기를 느낀 보수신문들의 방송진출 욕심이 빚어낸 산물이다. 종편은 기득권 세력의 이익만 감싸다가 국민들에게 배척당하고 있는 보수 세력들이 기대는 희망이기도 하다. 조중동 신문만으로는 여론 장악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미래 생존마저 불투명한 마당에 그나마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라고 여기는지 모르겠다. 온갖 특혜를 베풀며 이들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보수 세력들의 기대도 종편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요즘 트위터 등에 빼앗긴 주도권을 그나마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노골적인 편파 보도는 조심할 수도

그러나 종편이 보도에서 당장 노골적으로 보수적인 정치세력과 기득권을 대변하기 위해 온갖 불공정과 편파만을 저지르지는 않을 수도 있다. 신문시장에서는 확고한 보수독자들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관점과 이해를 반영해왔지만 새롭게 진출한 방송시장은 다르다. 이미 정권에 장악당한 KBS와 MBC가 방송의 조중동이라 불릴 만큼 권력의 홍보 보도를 일삼고 있다. 그들은 지난 달 한-미 FTA 비준안의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문제 삼기보다는 최루탄 투척을 주요하게 다루며 야당의 폭력성을 부각시켰다. FTA 비준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영하의 날씨에도 물대포를 쏘아댄 경찰에 대해 가장 깊이 있게

보도한 것은 오히려 SBS였다. 방송 기자들이 시민들에게 취재거부를 당하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조중동 종편은 정권 홍보 보도로 KBS나 MBC와 경쟁할 이유가 없다. 적어도 KBS와 MBC가 권력에서 독립하여 공정한 방송으로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는 오히려 이들과 차별화함으로써 틈새를 노릴지도 모른다. 정권과 유착한 방송이라는 평판을 벗어나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종편에게 MB정권은 계륵이거나 좀 심하게 표현하면 똥 치운 막 대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미 방송 진출 사업권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그들 편을 들다가는 자칫 함께 몰락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공정한 진실보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진보 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온갖 특혜는 철폐되고 시장에서 힘겨운 살아남기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세력을 흠집 내면서 보수의 재구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보수 세력을 집결시키기 위한 논리를 확산시키는 보도를 할 수도 있다. 시청자들이 피부로 쉽게 느끼지 못할 만큼 교묘하고 치밀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하다가 역풍을 맞으면 시청자들이 모두 이탈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생존마저 위협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이다.

살그머니 의식을 파고드는 드라마

보수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드라마는 어떤 점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사고와 의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편파적인 보도보다 저항감이 적기 때문이다. 드라마가 특정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결정할 수도 있다.

다양한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한 것도 드라마의 힘이 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90년 KBS 2TV의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시대적 아픔에 고뇌하면서도 강인한 의지와 뛰어난 판단력을 지닌 인물로 그려졌다. 국민들에게 뚜렷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고 그것이 국회의원,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정치적 자산이 되었다. 경우에 따라 드라마는 강한 정치적 잠재력을 가지고 특정인(

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일보의 종편 채널A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하는 <인간 박정희>를, 조선일보의 종편 TV조선은 남북한 관계를 소재로 하는 <한반도>를 각각 내년 3월과 1월에 방영할 예정이다.

특정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을 일부 바탕으로 하여 온갖 신화와 허구를 적절히 섞어 만들어진다. 그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을 배경으로 하는 사극에서도 역사 왜곡의 논란이 빚어진다. 작가와 방송사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특정 인물이나 사건 및 시대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의원이 유력한 대선 후보인 마당에 그럴 우려는 더욱 깊다. <인간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어떤 식으로든 박의원의 정치적 입지와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 100억원 대의 제작비를 들이겠다는 TV조선의 <한반도>는 남남북녀가 만나 대통령 부부가 되고 통일을 이뤄가는 과정을 그리는 드라마다. “이념이나 정치의 측면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크다. 남북관계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특정 정치세력 편들기 등으로 비판받고 있는 조선일보의 보도와 논조를 보면 정치색을 떨 가능성이 크다. TV조선은 조선일보의 고정 독자층인 중장년층 남성 시청자를 겨냥한 프로그램을 대거 편성하여 보수적인 색채를 드러냈다. 편파보도로 비판받는 조선일보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옹호하고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정의옹호, 불편부당 등을 사시로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들과 기준이 다르다. 국민들은 정치적 편향이라고 보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잣대로 정치적 중립이라고 믿는다.

자본과 기업 편을 들게 될 종편

정치적 편향 못지않게 우려되는 것은 그들이 자본과 기업의 대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종편들은 이미 기업을 대변하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해놓고 있다. 기업 홍보를 위한 경제 뉴스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TV조선은 개국 특

집으로 <기업가 열전 대한민국인 정주영>, <안티포폴리즘-공짜의 역습, 지중해를 가다>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TV조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TV조선은 그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임을 자임한다”고 밝혔다. 친기업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채널A는 <대한민국 산업경제 발달사: 대기업의 성공, 좌절, 도전사>, <같이 가야 멀리 간다: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 사례보고서>라는 프로그램을 내보낸다. MBN은 <한국 경제의 빅3를 만나다> 등을 준비했다. 기업인들이 얼마나 치열한 노력으로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왔는지를 그려내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친기업 친시장적인 신자유주의 이념을 확산시키는 기지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주역을 노동자나 국민이 아니라, 이들 일부 기업인의 도전과 열정으로 만들어 온 역사로 부각시켜 기업가들의 기업 정신을 사회적으로 미화하게 될 것이다. 사람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우리사회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여론을 만드는 가운데, 기업의 편법과 기업가들의 비리와 탐욕은 철저히 가려진다. 이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앞으로 기업과 종편사와의 유착 가능성은 더욱 많다. 프로그램 제작비 이상을 기업에게 협찬 받고 사실상 기업 홍보 프로그램을 버젓이 편성할 수도 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얼마나 호평 받고 있는지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기업 돈을 받아 만들 수도 있다. 대기업으로서는 광고보다도 훨씬 효과가 큰 홍보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기꺼이 큰돈을 협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신문에서 이미 흔히 나타나곤 했다. 취재 지원 명분으로 만든 기획특집 시리즈는 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방송은 훨씬 효과가 크므로 지원과 협찬의 규모도 엄청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연명은 가능한 먹을거리

종편의 재원은 결국 광고인데 광고시장은 더 이상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광고 산업 규모를 몇 년 안에 50% 이상 키우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포화 상태인 미디어 시장에 종편이 4개

사나 등장했으므로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성급해 보인다. 종편 사마다 경영전략이 다르므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한 방송사당 연간 1천억에서 2천억원 정도의 매출이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약 6천억원의 재원이면 그럭저럭 종편사들의 먹을거리는 되는 셈이다. 올해 SBS의 이익이 약 1천억 정도로 예상되고 KBS와 MBC도 좀 더 비용을 줄이면 SBS정도의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보면 방송 3사에서 대략 3천억원 정도의 여력이 있다. 정부에서는 의약품을 비롯하여 광고금지 품목을 대폭 완화하고 기업 협찬을 더욱 폭넓게 허용할 움직임이다. 신문과 방송의 영향력을 앞세워 기업을 압박해서 가져오는 광고나 협찬도 있을 것이다.

종편들이 기업에 협찬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신문이나 지역방송 등 중소 매체의 광고를 종편들이 빼앗아 오는 몫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BS 수신료를 올려 늘어나는 재원만큼 KBS2의 광고를 줄여서 그 광고물량이 종편으로 흘러가도록 하려던 시도는 일단 무산된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든 다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다. 그리고 보면 종편에 필요한 전체 시장 재원은 조금 빠듯하긴 하지만 쉽게 종편이 시장에서 망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지상파 방송사들을 포함하여 방송사들이 사이좋게 나누지는 않을 것이다. MBC, KBS, SBS 등을 비롯한 지상파 방송광고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적으로 판매할 때에는 방송사마다 어느 정도 광고비를 안분해 주었다. 해마다 조금씩 방송사별 방송광고 시장점유율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종편이 등장하고 코바코가 더 이상 독점적 판매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시장경쟁은 생존 게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익을 남기는 방송사와 적자를 보는 방송사로 나누어 질 것이다. 그렇더라도 적자를 보는 종편사들이 금방 문을 닫을 정도는 안 될 것이다. 언론사들은 빚이 좀 쌓여도 언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버틸 것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다급해지면 보도를 무기로 광고주나 기업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언론보도는 진실을 알리거나 건강한 여론을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광고비를 갈취하는 흥기가 될 수도 있다.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 막아야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공적 미디어렐(Media Rep)¹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사가 직접 광고주나 광고회사를 상대로 광고를 판매하지 않았다. 판매를 대신해주는 회사인 코바코를 통해서만 판매했다. 그것은 방송의 제작 및 편성을 광고 판매와 분리시키고자 하는 취지였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코바코가 지상파 방송의 광고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위헌으로 결정하면서도 방송제작 및 편성이 광고영업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그대로 인정했다. 현재의 취지를 살려서 제도화하는 법이 미디어렐법이다. 그러나 입법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이 이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방송광고 판매시장은 무법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종편은 이 틈을 타서 직접 광고영업에 나섰고 이를 빌미로 SBS와 MBC도 직접 영업이나 다를 바 없는 자회사 형태로 광고영업을 하겠다고 나섰다. SBS는 지주회사가 미디어 크리에이트라는 방송광고판매회사를 설립하여 내년 1월부터 방송광고 판매를 시작하겠다고 했으며, MBC도 직접 미디어렐 회사 설립 준비를 사실상 마친 상태이다. 이런 자회사들은 본사와 경영이 분리되기 어렵다. 그러니 광고판매를 위해 방송사의 제작 또는 보도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방송 프로그램이 광고주의 영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방송의 독립과 자본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사실상 물 건너가고 방송프로그램은 홍보 프로그램으로 변질될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이렇게 종편과 지상파들이 사실상 직접 영업을 통해 광고시장을 휩쓸면 미디어 생태계가 파괴된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표현되고 이것이 건강한 토론을 거쳐 여론을 만들어 가야한다. 그것이 여론 다양성을 그토록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다. 여론 다양성은 다양한 미디어가 존립해야 가능하다. 광고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종편과 지상파가 직접 광고를 판매하면서 광고 재원을 빼앗아 가면 광고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¹ 미디어렐은 매체를 뜻하는 '미디어(Media)'와 대표자를 의미하는 '레프리젠티브(Representative)'의 합성어로 인쇄매체의 지면이나 전파매체의 시간을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에 판매하는 것을 매체 측을 대신하여 담당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뜻이다. (필자 주: 네이버지식사전 참조)

매체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신문의 경우도 방송까지 장악한 조중동 등은 시장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겠지만 나머지는 큰 어려움이 예상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편에 대한 감시 강화와 종편의 특혜 폐지가 시급

이제 종편의 등장으로 인한 언론 구조 개편은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 개편의 회오리 속에서도 민주적 여론 지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드는 길 뿐이다. 당장 종편을 퇴출시키는 것은 정치적 구호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경쟁에서 실패하여 시장에서 퇴출되기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

우선 종편이 권력과 자본의 전위대 역할을 하면서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감시하는 일이다. 보도 뿐 아니라 교양, 드라마, 심지어 예능에서도 편향적인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모든 국민들이 종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겠지만 집중적으로 이를 모니터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 종편이 미디어 생태계를 더 이상 교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직접 광고 영업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조중동의 직접 영업은 MBC나 SBS에게도 직접 영업의 빌미를 준다. 거꾸로 MBC나 SBS가 미디어 어업을 설립하게 되면 조중동의 직접 영업을 정당화해주는 꼴이 된다. 방송사가 소유한 미디어랩은 사실상 직접 영업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조중동의 직접영업을 막을 명분이 퇴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조중동의 직접 영업과 방송사의 자회사 미디어랩 설립을 금지하는 미디어랩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방송사의 미디어랩이 아니라 공적 역할을 하는 미디어랩을 만들어서 방송보도와 광고영업이 유착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편의 특혜를 폐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종편은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전국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고 보도, 드라마, 예능 등 모든 장르의 방송을 하므로 사실상 지상파와 다를 바가 없는데도 광고와 편성에서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 대표적인 특혜가 바로 중간 광고이다. 지상파 방송은 중간광고

가 금지되어 있는 반면 종편은 중간광고가 허용되어 있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시작 할 때와 끝날 때 나오는 광고는 리모콘을 통해서 피해 버리곤 한다. 광고주는 광고를 해봤자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다. 반면 프로그램 중간에 나오는 광고는 시청자들이 피해가기 어렵다. 시청자가 프로그램에 몰입하고 있을 때 광고가 나오기 때문이다. 광고효과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 단가는 더 비싸기 마련이다. 이러한 중간광고는 시청자들의 시청 흐름을 끊어 놓을 뿐 아니라 부당한 특혜라는 점에서도 규제해야 마땅하다.

술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종편방송은 현실이 되었다. 저지하고 퇴출해야 한다지만 금방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승리하면 길이 조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허가 기간이 끝나는 2013년 말 재허가 때 취소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멀다. 재허가에 도 심사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야 하므로 취소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권교체 등 정치지형이 바뀌면 종편들도 재허가를 받기 위해 그 기준을 지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디어법을 개정하여 신문사가 방송을 동시에 경영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현재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강제로 처분하게 하든지 아니면 신문과 방송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중동과 보수 세력들도 순순히 따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민주 진보 정권이 만들어졌을 때에나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러는 사이에 종편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점점 깊어질 것이다.

지금 당장 할 일은 그들이 여론을 왜곡하거나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막고 그들만의 특혜를 없애는 일이다. 

사람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반값 등록금’과 교육복지 실현!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가난한 지방정부도 하는 일을 외면하는 부자 중앙정부

지난 10.26 보궐선거 이후 새로워진 서울시가 국민들 사이에서 연일 ‘기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자기부담금 폐지, 공기업 노조 관련 해고자 복직 추진 등 시민사회가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 줄기차게 호소해왔던 일들이 하나씩 추진·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민생대책 수립과 복지확대 과정에서 속도와 폭의 문제는 논란으로 제기될 것입니다만, 1% 특권층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개혁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정치와 행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2012년 1학기부터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립대의 입학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뛰고, 고정되어 있던 대학 서열체제에까지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운동이 특정 대학을 집중 지원하자는 캠페인은 아니었지만,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에 시달리던 우리 국민들이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에 폭발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다 보니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1% 특권층을 위한 예산, 정책, 사업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특권층·강부자를 위한 정책 기조의 압권은, 검증에도 실패하고 이익의 균형에도 실패한 한-미FTA 비

준안의 기습·날치기 처리일 것입니다. 정권 내내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에 집착하더니 이제는 실패한 미국 경제로 예측되는 걸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이들의 고달픈 삶이 출산을 꼴찌, 자살률 1위 수준이라는 비극적 통계로 드러나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등록금,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가계부채, 이자폭리 등도 세계 최악의 수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많이 산업재해로 죽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국 사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이 특권층·강부자들을 위한 정책에만 여념이 없으니 우리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지방 정부도 하고 있는 일들을 2012년 기준으로 예산만 330조에 달하는 부자 중앙 정부는 하지 않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동안 대학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전국의 교육시민단체들의 눈물겨운 반값 등록금 운동과 함께, 교육복지 확대를 호소하는 간절한 민심의 목소리가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정책과 예산 집행에서 사람과 교육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줄곧 외면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2년 예산안에서 정부 재정 1조 5,000억원(실제로는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3312억원에서 1조 1,7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을 투입하는 장학금 예산을 포함하긴 했지만, 이는 명목 등록금을 30%까지 인하한다는 지난 6월 23일의 대책보다도 한참 후퇴한 것으로, 2006년부터 현 집권세력이 약속해온 반값 등록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대책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온전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염원하는 것이지,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정도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미친 등록금과 살인적인 교육비 문제가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고통과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1,000만원 안팎의 초고액 등록금을 포함해 연간 2,000~3,000만원에 이르는 생활비·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와 대출에 허덕이다 죽음으로, 신용불량자로, 대부업체로, 불법 다단계로 내몰리는 상황입니

다. 부자감세에 90조원, 4대강 사업에 2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한 정부는 반값 등록금을 위한 5조원 안팎의 예산은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립대학의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이어, 서울시립대에서도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고, 또 충북에서도 충북도립대의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되자 다시 한 번 전국에 반값 등록금 신드롬이 불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 들고 교육복지와 교육 공공성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지 않고 전국적 범위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의 영역에 있던 ‘반값등록금’이 여기저기서 현실이 되자, 과중한 교육비 부담에 시달리던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더욱 더 거세게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흑독한 민생고의 시대와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

위에서도 언급했듯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참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양극화·노령화라는 3중의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의무가 있다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최근, 친환경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운동과 함께, 재벌슈퍼마켓(SSM)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저항,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등이 국민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슈들은 교육 관련, 일자리 관련 이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교육비 걱정, 일자리 걱정 시달리고 있기에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로서 인구에 적극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교육비 걱정없이 살 수 있는 ‘교육복지’와 일자리 불안·실업 걱정이 없는 ‘노동복지’를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안정을 보장해 줄 ‘그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갈구하고 있습니다. 즉, 나라의 법과 제도, 정책과 예산을 보육·교육·주

거·의료·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제대로 된 복지국가에 대한, 민생희망 및 복지확대에 대한 열망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제 20대 80의 사회 정도가 아니라 ‘1% 특권층’과 ‘99% 서민층’의 초양극화 사회가 됐다는 진단이 나올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民主)공화국’이 아니라 ‘민살(民殺)공화국’이 돼버린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 된 삶을 살기는커녕, 질식당하고 민생이 살해당하고 있는 비참한 공화국으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지확대를 갈구하는 민심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정부가 지금 우리사회의 민생고와 비극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민생 문제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살인적인 교육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교육비 고통과 부담이 가장 심각하다는 것은 널리 확인된 사실입니다. 올해 초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양육·교육비용이 2009년 기준으로 2억 6천만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휴학했을 때 비용이나 어학연수비 등은 계산이 안 됐다니 실제 자녀 1인당 3억원 안팎의 양육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돌인 집은 무려 6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육개발연구원의 조사에서도 교육비 탓으로 출산을 포기했다는 답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곳곳에서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결국은 출산을 꼴찌 수준의 나라가 돼 버린 것이죠.

특히, 미친 등록금의 나라

국민들의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과 부담 문제의 핵심에는 무엇보다도 ‘대학 등록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이를 부인하지 못하고 다시 반값 등록금 이야기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대대적으로 공언해왔음에도 최근까지 전혀 이행을 안 하다가 올해 5월 다시 반값 등록금을 재추진하

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상은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일부 확대하는 것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 부인 사건에 이은 제2의 반값 등록금 사기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어야 할 경제적·사회적 고통이 너무나 큰 상황에서, 일부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등록금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대학 등록금 문제, 살인적인 교육비 문제의 해법으로는 핵심을 한참 잘못 짚은 것입니다.

지난 2011년 8월4일에는 우리나라 대학생 약 5만명이 대부업체에 8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금감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점점 늘어나 3만여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또 대학생 5천여 명이 서울의 거여동, 마천동 일대에서 불법 다단계 업체에서 합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학생의 수는 작년에 비해 57.2%, 금액은 40.4%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연체율 또한 대부업체 전체 연체율의 두 배를 넘는 14.9%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값 등록금 조기 실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¹ 전면 개선(각종 자격 제한 철폐)이 없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과중한 빚과 폭리의 수렁으로 빠져들고야 말 것입니다.

한편, 감사원은 2011년 11월 초 각 대학들이 ‘등록금을 10~20% 뺄튀기 하고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종합하면, 그동안 시민사회가 주장한대로 최소 10%에서 20%가량의 ‘등록금 뺄튀기’가 자행되었음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35개 대학에서 해마다 평균 6,552억원(대학당 187억원)의 예·결산차액이 발생했는데, 6,552억원은 지난해 35개 대학 등록금 수입(5조 1,53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로, 최소 12.7%의 ‘거품’이 확인된 것입니다. 또, 학교 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기부금 등을 재단

¹ 2010년 1월 취업후학자금상환제특별법에 따르면 2010년 1학기부터 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제도로 이명박 정부는 이를 ‘든든학자금’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든든하지 못한 제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대학생의 50% 가까이가 각종 자격 제한으로 신청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으로 보내거나(연평균 1,982억원), 재단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 등을 교비로 부담하고(연평균 1,703억원), 임대건물 등의 운용 수익을 재단에 보내고 대학에는 덜 보낸 금액(연평균 1,056억원)까지 감안하면 20% 가까이 등록금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 위에서 대학과 재단이 수없이 많은 부조리를 저지른 것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학생, 학부모들의 고통을 줄이고, 대학을 투명하게 개혁할 때인 것입니다.

먼저, 중앙정부가 반값 등록금 실현에 최대한 근접한 예산안을 마련하고, 대학들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영해 자체적으로 10~20%정도의 등록금 인하 결단을 내리거나 2010년 기준으로 1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적립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과감한 등록금 인하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지방정부들도 나서서 강원도립대학 무상교육, 충북도립대학 반값등록금, 서울시립대학 반값등록금을 구현하고 있는데, 내년 기준으로만 33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중앙정부가, 수십 차례 국민들에게 공언했던 반값등록금을 구현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용납받기도, 이해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표 1>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과 민간재원 비중(2008)

구분	2008		2000	
	정부재원	민간재원	정부재원	민간재원
한국	22.3	77.7	23.3	76.7
OECD평균	68.9	31.1	75.1	24.9

(단위: %)

*우리나라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중 민간지출 비율은 2000년에 76.7%를 유지하다 2008년 77.7%로 오히려 1%p 상승하였음.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단계 민간재원 비중은 OECD 평균보다 약 2.5배이며, 칠레(85.4%)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 OECD에서 고등교육재정 지원이 꼴지 수준이다 보니 이처럼 학생·학부모 등 민간부담이 세계최고, 최악의 수준이 돼 버린 것임.

<표 2>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2008)

구분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한국	7.6	4.7	2.8	4.2	3.4	0.8	2.6	0.6	1.9
OECD 평균	5.9	5.0	0.9	3.7	3.5	0.3	1.5	1.0	0.5

(단위: %)

*2008년도 GDP는 1,026,451,811백만원임(2007년도 975,013,000백만원 대비 5.3%p 상승), GDP 대비 공교육비 산출식은 [(정부부담 금액+민간부담 금액)/GDP*100], 고등교육단계에서 정부 부담이 OECD의 1/2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미친 등록금 문제의 핵심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임.

그나마 있는 학자금 대출제도도 엉망입니다. 2010년 1학기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를 도입하기도 했으나, 취업후학자금상환제는 △소득 7분위 이하 △평균 B학점 이상 △35세 미만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불가) 등 불필요한 자격 제한을 두었으며, 높은 금리(2011년 1학기 4.9%), 군 복무 중 이자 부과,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복리를 적용하는 문제 등으로 대학생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대학생들이 결국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야 만 것입니다. 내년 1학기부터는 학점, 연령, 소득 기준 등 자격 제한을 전면 철폐하고, 이자율을 대폭 낮추고, 군 복무 중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개선 조치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고, 세부자료까지 공개하며, 학생 동수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체없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때

이처럼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과 미친 등록금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 최근의 등록금 투쟁이 국민복지와 민생문제 해결 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반값 등록금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80~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회정책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이토록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 국민들이 이토록 반값 등록금을 영원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과중하고도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다들 너무나 고통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말이나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엄청난 고통과 부담을 우리 국민들이 겪다 보니 그런 말들이 설득력 있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죠.

<표 3> 고등교육학교 현황

대학구분	학교종류	국 립	공 립	사 립	합 계
대 학	대학교	28	2	153	183
	교육대학	10			10
	산업대학	3		6	9
	기술대학	0		1	1
	각종대학	2		3	5
	사이버대학	1		18	19
소 계		44	2	181	227
전문대학	전문대학(2년제)	2	7	95	104
	전문대학(3년제)	1		42	43
소 계		3	7	137	147
합 계		47	9	318	374

(단위: 만명)

*위 대학들에 총 330여만 명의 대학생이 재적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별도로 대학원생도 30만명이 재적 중임. 그 만큼 많은 국민들이 미친 등록금과 교육비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4> 2009년 전국 사립대학 적립금 보유 현황

구분	교비회계	법인회계	합계
일반대학	6,915,498,190	838,401,802	7,753,899,992
산업대학	130,446,614	3,659,081	134,105,695
전문대학	2,119,207,725	48,720,707	2,167,928,432
대학원대학	7,626,497	19,833,052	27,459,549
합계	9,172,779,026	910,614,642	10,083,393,668

(단위: 천원)

*출처: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일반대(148교), 산업대(7교), 대학원대(36교), 전문대(134교) 총 325교 대상. 2009년 대차대조표 기준. 정부가 등록금 지원 등 고등교육 지원을 외면하고, 대학은 대학대로 등록금에만 의존해서 대학을 운영하면서, 학생, 학부모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대학은 큰 부자가 되고 있는 것임. 2009년 기준으로 이미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총계가 10조원을 넘어섰음.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대학들의 적립금의 일부를 등록금 인하에 사용한다면 반값등록금은 더 빨리 구현될 수 있는 것임

돈 낸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사회, 돈 낸 만큼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교육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일까요? 국민주권의 참된 민주주의라면 우리 국민들이 다들 원하고, 사회복지와 공정한 사회에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런 정책이 잘 구현된 사회를 어서 만들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독일은 각 주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곳도 있고, 한 학기당 등록금 상한제를 적용해 70~80만원을 받는 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정말 소액에 불과한 그 등록금마저도 최근 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뉴스에 가슴을 쳐야 합니까. 이제 우리도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습니다. 다만, 바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값 등록금이라도 구현하자고 절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훨씬 못 살던 20세기 초중반에 유럽은 대학까지 무상교육, 누구나 다 무상의료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그 골격

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대학에서 등록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학생들이 학생 수당을 받고 공부에 전념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모름지기 국민을, 교육을 그 정도로는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사회적 지원을 받은 청년학생들이 사회로 나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적극 봉사하고 기여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중앙정부 예산만 내년에 무려 330조원, 의지만 있다면 국민도 행복해지고 고등교육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못할 리가 없습니다. OECD 회원국들의 고등교육비 지출 중 공적부담과 사적부담의 비율은 69.1%대 30.9%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반대로 사적부담 비중이 79.3%(200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의 미친 등록금 문제의 원인과 해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고등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철저히 개인에게 부담시켜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이 되어버린 것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자구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 반값 등록금과 그에 근접한 정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철저히 학생, 학부모 책임과 부담에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은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논쟁은 뒤로 하고, 최소한 교육비만큼은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사회, 출생의 불평등은 어찌 할 수 없다 해도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선만큼은 최대한 공정하게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정부가 교육에 대한 철학도 없이 반값 등록금과 교육복지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민심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민의 살인적 교육비 고통을 해결하고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일이 진보, 중도, 보수를 가를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라도 나서야 할 일입니다. 유럽의 역사에서도 많은 복지제도가 보수적 정권하에서 발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고등교육의 발전과 국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값 등록금 실현

과 교육복지 확대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확대한다는 정도의 대책은 전혀 등록금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위주의 장학금 지원 확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의 명목등록금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등록금 문제의 본질을 흐리면서 반값 등록금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극소수 최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큰 부담과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성, 보편적 복지가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 세대에겐 절대적으로 중요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등록금 문제의 가장 올바른 해법은, 모든 계층에게는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거나 그에 최대한 근접한 안을 적용하고, 나아가 저소득층에게는 장학금을 추가로 대폭 확대하고, 그 반값이나 그 이하마저도 부담스러운 이들에겐 무이자나 최소 이자로 신청자격 제한없이 후불제 학자금 대출을 적용하는 것 등이어야 합니다.

등록금 투쟁, 이제 끝을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대학생·학부모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등록금과 청년실업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대학생 자살자가 계속 늘어나 무려 250여 명이나 자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반값 등록금뿐만 아니라 고교 의무 교육화,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등 교육복지 정책도 신속하게 확대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감안해서 정부 여당이 하루빨리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우리 국민을 생각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봤을 때도 사람이 가장 귀중하고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사람을 살리고, 교육을 지원하는 데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살인적인 교육비와 미친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과 고통을 해결하게 되면 그 자체로 국민들을 살리면

서도 그 만큼 가게마다 소비 여력이 발생해 내수가 진작되어 경제도 활성화 되고, 교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수록 그 자체가 사람을 키우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것이면서, 교육비 고통과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양극화까지 예방하는 등등의 다방면에서 참 좋은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을 어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아이쿱 생협만평

이동수



강은 가르지 않고 막지 않는다

서분숙 (르뽀작가)

그 강

강이 있었다. 유난히 더웠던 대구의 여름,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언니들은 돈 벌러 공장 기숙사로 들어가 버렸고 아버지는 어디 공사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있을 것이다. 온몸에서 흐르는 땀이 몸을 무너지게 할 만큼 더운 오후다. 시장 노점에서 어머니가 팔고 있는 갈치의 은비늘이 무더위에 지쳐 녹아내린다. 목이 타들어가도 어머니는 당신이 드실 물을 아껴 은빛 갈치 위로 열심히 물을 끼얹었다. 갈치를 파는 일은 가족에게 목숨을 유지하는 일과 같은 것이었으므로 타는 갈증을 참고 수정같이 맑은 물을 갈치에게 끼얹는 일은 성스러운 일이었다. 물이 닿자 마치 살아서 헤엄이라도 칠 듯 반짝거리던 갈치. 그리고 그해 여름, 그 강.

송사리 떼처럼 아이들이 몰려든 곳은 낙동강의 지류인 신천이었다. 신천으로 가던 길에는 대구 신도 극장이 있었다. 가끔 ‘남진’과 ‘하춘화’의 리사이틀이 열리던 그 극장. 구불구불한 레이스가 달린 블라우스를 입은 가수들은 극장 간판의 그림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화려한 가수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그 극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싶었던가 어쨌던가. 그 극장의 모습은 이제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하지만 극장 옆을 흘러가던 신천에서 놀던 기억은 삼십년이 훨씬 지나도 그저 생생하게 흘러올 뿐이다.

종아리를 담그고 놀던 신천의 물은 바닥까지 환하게 다 보일만큼 맑았다. 빛에 굴절된 자갈돌의 모습은 휘어져 있었다. 남자 아이들이 물을 몰아 내달려오면 빨라진 물살은 어느 샌가 바람처럼 내 몸을 훑고 지나간다. 물결 따라 흐르던 작은 생명들, 이름도 알지 못한 민물고기들을 좇아 따라 가보지만 좀체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 때, 어린 나의 손가락을 피해 떠나갔던 강의 생명들, 그 생명을 실은 강물들은 지금은 어디를 흘러가고 있을까.

강에 대한 유년의 기억은 신천이 전부다. 그러나 아름다운 신천에 대한 기억도 오래가진 못했다. 대구가 한국의 대표적인 섬유 도시로 서서히 자리 잡아 갈 무렵, 신천도 염색약을 탄 듯 검게 물들기 시작했다. 대구모로 기성복이 생산될 즈음이다. 온갖 색의 기성복들을 만드는 원단을 물들인 염색약은 정화되지 않은 채로 신천으로 흘러들었다. 지금도 기억난다. 공단 뒷길을 걷다가 자주 보게 되던, 지름이 오십 센티는 될 만큼 넓은 배수로로 쿵쿵 쏟아져 나오던 오폐수들. 수 만년을 흘러온 강이라 해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허망했다. 시커멓게 썩어 버린 강물을 멀리하고, 오랫동안 강을 잃고 산 세월이었다. 신천에서 놀던 유년의 기억은 가끔 들여다 본 흑백 사진처럼 추억 속에서만 흘러갈 뿐이었다.

내성천, 비틀거리던

지난여름, 내가 내성천을 찾기 직전, 어머니는 깊은 수술을 하셨다. 신천 옆에 있는 칠성시장은 어머니의 일터였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삼십 오년동안 은빛 갈치와 고등어, 그리고 겨울이면 동태를 파셨다. 두 평 남짓한 노점은 우리 가족의 목숨과도 같은 터전이었다. 오랜 당뇨로 몸의 혈당이 빠져버린 깡마른 어머니에게 생선 상자를 지고 나르는 일은 무리였을 것이다. 일흔을 눈앞에 두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쓰러졌다. 아니 꼬꾸라졌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듯하다. 겨울 날, 팡팡 언 갈치가 가득 담긴 상자를 들던 순간이었다.

한순간에 시커멓게 썩어 버리던 신천처럼, 생활력 강하던 어머니가 쇠약해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허리뼈를 세우는 긴 수술을 두 번이나 한 어머니는 두 번째 수술을 마치고는 정신을 놓아 버렸다. 중환자실에서 보름 만에 깨어난 어머니는 낯선 사람 같았다. 평소에는 입에도 대지 않던 통닭을 하루에 두 마리나 삼키던 어머니의 모습은 기이했다. 한평생 가난했던 어머니. 어머니의 세월 속에는 창자를 오그라들게 한 배고픈 시절도 있었다더니 정신을 놓아 버린 어머니의 무의식은 그 시절로 돌아간 걸까. 자식이 온 줄도 모르고 방바닥에 앉아 닭고기를 뜯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프게 다가온다. 꽃꽂하게 허리

떠고 구십까지 살겠단던, 질기던 생의 갈망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장돌뱅이라고 비웃던 세상의 멸시에도 끄떡없이, 오랜 세월 갈치와 함께 흘러온 어머니의 세월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그 단절 어디쯤엔 지독했던 노점 철거, 강제 단속에 맞선 어머니의 싸움도 단단히 들어앉아 있을 것이다. 그렇다. 어머니의 허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건 아니었다.

신천은 하루아침에 썩어버린 게 아니었다. 오랜 세월동안 높은 밀도로 쌓여진 욕망들이 터져 버린 것이다.

정신을 놓아 버린 어머니를 뒤로하고 찾아간 내성천이었다. 그때 이미 어머니는 고열이 오르고 있었고 2주 내로 임종이 올 것 같다고 의사는 예언했다. 무의식 속에서도 막내인 내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곧 어머니에게 한번 다녀가라는 외삼촌의 전화음을 들으면서도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어머니는 결코 그렇게 세상을 쉽게 떠나실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던 걸까. 오히려 어머니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외삼촌을 위로하며 나는 내성천으로 가기 위해 영주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발밑의 모래가 스멀스멀 빠져 나가고 있었다. 바지를 걷고 나무처럼 뿌리내리고 내성천에 섰다. 누군가는 내성천 모래의 흐름을 느껴보라고 한다. 잠시, 목적도 없이 걷던 물길 위에서 침묵한다. 발바닥 밑으로 슬슬슬 흘러가는 모래들의 이동이

느껴진다. 이럴 수가, 이렇게 빨리 떠나 버리다니. 모래들의 이동을 느끼고 있던 나의 호흡이 빨라진다. 이럴 수가! 잠깐 사이에 몸이 기우뚱한다.

발바닥 아래의 모래가 급하게 이동해가면서 내가 서 있던 자리가 위태로워진 것이다. 잠깐 사이에 강은 나의 균형을 깨뜨렸다. 강의 내면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낙동강 본류의 깊이가 수심 6미터까지 파헤쳐져 나갔다. 파낸 토양은 강 주변에 쌓여 있다. 애초 강바닥이었을 저 피, 저 살들.

본류가 급격히 깊어졌다. 예전의 길이 아니다. 날벼락이다. 느리게 느리게 흘러가던 지류들도 절벽 같은 깊이로 내몰린다. 재앙이다.



“역행 침식이에요..”

일행 중 누군가가 아주 짧은 말로 이 상황을 정리해 준다. 본류의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면서 상류에 있던 지류의 흐름이 빨라지는 현상. 물살이 빨라지면 서 물이 싣고 가던 퇴적물들도 함께 실려 내려갔다. 예전 모래톱이 수놓았을 내성천은 이제 바지를 허벅지까지 걷어 올리고 들어가도 젖기 일쑤다.

걸음을 멈추고 서 있노라면 발바닥 아래로 그 짧은 순간에도 수도 없이 끌려가고 있는 모래들의 흐름이 느껴진다. 철거 같고, 구속 같고, 강제 이주 같은 아픈 흐름이다.

철거 같고, 강제 이주 같은

어머니의 삶은 자주 구속되었다. 개발이 시작되던 칠십년 대에 무언가를 허물고 다시 세우기에 급급한 도시에서 두 평 남짓한 어머니의 터전은 자주 허물어졌다. 어머니의 터전은 곧 우리 가족의 생명이기도 했기에 나는 허물어진 어머니의 터전에서 자주 갈치를 주워 담았다. 꿈쩍했던 건 나뭇굴던 은빛 갈치를 다시 짓이겨 놓던 검은 군함발이었다. 어린 시절, 나는 너무 일찍 삶을 짓밟개던 공권력을 봐버렸다. 대구 칠성시장에 까마귀 떼처럼 상주하던 전투경찰들. 국가가 그들에게 내린 명령은 민중의 삶을 철거하고 생존의 본능을 죽이라는 거였다. 그 까마귀 떼들은 지금 어디로 이동한 걸까.

습지가 파헤쳐진 낙동강 본류에서도 생존은 철거되었다. 혈액 투석처럼 강의 한쪽 몸에서는 설 새 없이 물이 빠져 나가고 드러난 강바닥 위로 수십 대의 포크레인이 올라선다. 심장을 파먹는 야수들처럼 강바닥을 파헤치는 포크레인의 삽날이 섬뜩하다. 퇴적된 세월을 들어낸 깊이가 6미터이다. 물이 채워지고 보가 세워진 강은 흐르지 않는다. 강은 물속에 갇혀 버렸다.



본류의 수심이 깊어지면서 상류에 있는 내성천의 유속도 빨라졌다. 강바닥이 갑자기 급경사의 지형을 만난 것이다. 빨라진 유속을 따라 모래들도 급하게 하류로 쓸려 내려간다. 내성천 주위의 모래밭은 많이 줄어들었다. 간도처럼 강 사이에 놓여있던 얇은 모래톱들은 이미 많이 사라졌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아도 수심이 많이 깊어진 게 보인다. 이대로라면 6미터나 파헤쳐 놓은 본류의 깊은 수심도 곧 쓸려간 모래로 차오를 것이다.



내성천에 내리는 저녁노을을 바라본다. 하늘 반 물 반 똑같은 모습으로 번져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의 발목을 오래도록 잡아 두었을지도 모르는 저 노을.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던 무거운 삶을 자주 노을 속에 묻어

버리고 싶었던 세월도 있었다. 저무는 것들은 왜 스스로를 태워야 하는 걸까. 본류의 파괴를 향해 몸을 내던지듯 모래를 흘려보내는 내성천. 깊이 패인 본류의 바닥 속으로 다시 모래가 채워지는 이 현상을 누군가는 자연의 복원력이라고 하지만, 내성천에 번지는 노을을 보는 저물녘, 나는 이 흐름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다.

아름 깊은 세월이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자식들의 마음을 돌아볼 여지가 없었던 어머니. 자주 엇나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던 어머니는

무당을 불러 집 마당에서 자주 굿을 벌였다. 물가에 있는 자식, 대처에 있는 자식, 어느 깊은 웅덩이에서 헤매고 있을지도 모를 또 다른 자식을 찾아달라고 머리카락을 태우고 옷을 태우고 종이 인형을 태우던 어머니의 세월. 쏟아내던 절규처럼 흘러간 어머니의 모래들. 그 모래가 어찌면 내 깊은 상처들을 채웠는지도 모른다. 나의 상류에 흐르는 강, 어머니.

가르지 않고, 막지 않고

사락사락 부딪치는 바람이라도 불어올 때면
어른보다 훨씬 더 자란 부들군락을 지나서
수변에 펼쳐지는 나리군락을 따라 가다보니
소담스런 내성천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석양도 힘없이 뉘엿뉘엿 넘어, 으스스할 때
한창 짝짓기 철인 풀 잡자리 때, 모여 들고
어느덧 발길 닿는 대로 개울 따라 걷다보면
물에 비친 별무리, 놀라 뛰어오른 물고기 떼

아낙들 구부린 채 제각각 고동 줍느라 바쁘고
서넛하늘 검은 그림자는 점점 길어져만 가고
언제나 그들만의 잔치는 시간가는 줄 모른 채
그렇게 한여름, 한적한 내성천은 깊어만 간다.

강봉화 -내성천에 가면

조계사 안에 있는 공간 ‘모래’에서는 낙동강을 주제로 한 시와 사진전¹이 열리고 있었다. 조계사 앞 도로에서는 사람들이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털어내

¹ ‘강은 막지 않고 가르지 않는다’. 지난 10월, 조계사 안에 있는 공간 ‘모래’에서 열린 낙동강 사진과 시 전시회의 이름이다.

고 있다. 오래된 나무의 나이만큼이나 은행 떨어지는 소리도 우두두두 요란하다. 가을이 깊다.

작은 전시 공간 안팎을 뱅뱅하게 덮고 있는 하얀 천 안에는 낙동강이 흐르는 시와 사진이 담겨있다.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있다. 차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사대강 강줄기를 따라 가던 사람들이 우연히 이 자리에 모인 거라고 한다. 지난 날 내가 낙동강에서 만난 생명들처럼, 이 사람들은 강가에 살고 있는 오래된 생명들 같다. 흰수마자, 강도래, 날도래, 수달, 그리고 버드나무 안에 사는 원앙. 내가 내성천에서 만난 오랜 생명들….

공간 ‘모래’에서 보이차를 마신다.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한진중공업,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래알처럼 많은 이야기, 우리 삶의 모래톱 같은 이야기를 나눈다. 그곳, 그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삶이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근근이 버티고 있다는 걸.

다시 내성천을 생각한다. 본류로 흘러드는 모래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인가. 내성천으로 흘러드는 모래의 흐름을 근원지에서 막아 버리려고 하고 있다. 내성천 상류에서는 영주댐 공사가 완공되어가고 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내성천으로 흘러드는 물과 모래가 수문 속에 갇히게 된다. 모래와 물이 공급되지 않는 내성천은 곧 숲으로 변할 것이다. 모래톱이 넓게 펼쳐진, 너무나 아름답고 오�히려 숨겨 두고 봤던 내성천을 기억 속에 가둬두고 싶지는 않다. 사라지려는 것들에게 안타까운 푸념만을 던지고 싶지는 않다.

나는 그날 내성천 주변의 땅 한 평을 샀다.

‘샀다’는 말이 어색하기도 하지만, 지류의 개발 앞에 놓인 내성천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한 것이다. 늘 잃고 놓치고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던 마음은 그 일을 강행한 대상에 대해 증오심을 갖게 한다. 내성천 내셔널 트



러스트 * 운동은 어쩌면 그런 증오하는 마음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치유하게 할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기다리지 않고 달려간 ‘희망버스’가 우리들 스스로에게 희망이 되었듯이 말이다.

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계신다. 말끔하게 정신이 돌아온 어머니는 이제 병이 깊은 당신의 몸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이다.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 나는, 그래서 그 삶이 무거워 한이 되고 병이 된다. 깊은 죄책감...

우리가 강 속으로 걸어 간 힘. 이제 그 힘을 기억해야겠다. 나도 어머니의 삶 속으로 걸어가기 위해. 

* 내성천 트러스트는 시민들이 모금과 기부를 통해 내성천 주변 본래 강의 땅이었던 사유지를 확보, 다시 강의 품으로 되돌려 주기위한 운동이다. 이를 위해 2011년 안에 강의 대리인으로 모금에 참여하는 1만명을 모집하여 사유지 1만평을 확보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추진, 그리고 2015년까지 10만명이 참여하여 10만평의 사유지를 확보, 강의 자연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체습지로 복원할 계획이다.

내성천 트러스트 홈페이지 - <http://www.ntrust.or.kr/nsc/>

지속 가능한 사회는 행복한 노동에서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장)

인권에 대한 다른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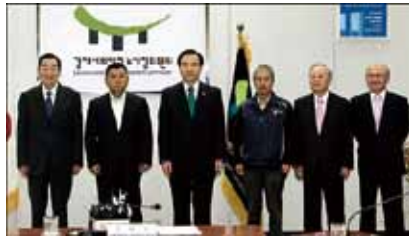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베를린 거주 한인들과 독일환경단체 회원 등 50여 명은 대통령궁 앞에서 한국의 4대강 사업과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4대강 파괴, 원전 건설이 녹색성장? MB정권은 거짓말을 멈춰라”, “4대강은 자유롭게, 생명은 평화롭게” 등의 한글과 독일어로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도착하기 직전, 경호원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한국인들 십여 명이 검은색 미니버스에서 우르르 내려 시위대를 가로막았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를 목격한 독일 경찰들은 놀란 표정으로 황급히 경호원들에게 달려가 당장 시위대 앞에서 비켜줄 것을 요구했다.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였기 때문이다. 경호원들은 머쓱하게 물러나야 했다. 우리나라와는 ‘합법’과 ‘불법’의 위치가 완전히 바뀐 셈이다.



노동문제에 대한 시각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입장에 따라 극단적으로 다르다. 흔히 말하는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였던 마지막 모습이다. 당시 노동부장관,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 전경련·경총 대표들이 얼핏 보기에 사이좋은 사람들처럼 나란히 서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얼마나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과연 누구의 생각이 사회를 지속 가능하도록 발전시키는 데에 가장 유익한 것일까?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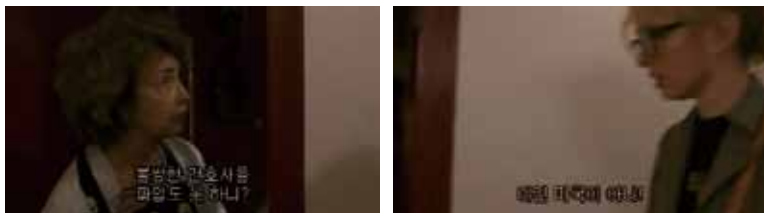
노동자 파업에 대한 유럽의 시각

<빌리 엘리어트>란 영국 영화가 있다. 파업을 하던 광부가 아들을 데리고 런던에 있는 왕립발레학교에 면접시험을 치르러 가는 눈물겨운 사연이 영화의 중심 내용이다. 면접시험이 끝나고 영국 왕립발레학교 교장 선생님은 광부 학부모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파업에서 꼭 승리하세요.”

우리나라 교장 선생님들 중에서 파업 중에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에게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배우 줄리 델피가 감독과 주연을 맡은 프랑스 영화 <뉴욕에서 온 남자, 파리에 온 여자(2 Days In Paris)>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온다.



지방에 갔다가 집에 좀 늦게 들어오는 딸에게 엄마가 이유를 묻자, 딸은 “데모 때문에 차 막히고 난리 났어요.”라고 답한다. 그 말을 들은 엄마가 딸에게 타이른다. “불쌍한 간호사들이 파업도 못하니? 여기는 미국이 아니야.”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비난하는 일은 ‘천박한 자본주의’ 미국에서나 하는 교양 없는 짓이라는 은근한 비난이 그 짧은 대사 속에 담겨 있다.

유럽 사회에서는 노동자 파업을 비난하거나 노동운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양이 없거나 생각이 모자란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정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영화의 특별한 장면만을 모아서 일반화시키는 오류’라고 지적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아래 사진을 보자.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부대사가 한국의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출연해 하는 말이다.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여론이 파업에 대해 이해심을 보이는 편입니다. 파업권은 필수적인 사회권리라는 신념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는 편입니다…(중략)…그러므로 이 같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를 문제 삼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함으로써 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신성불가침의 권리’라고 공무원이 이야기한다. 프랑스 사람들의 이러한 정서를 ‘빠리의 택시운전사’ 흥세화 씨는 ‘톨레랑스’라는 한 단어로 설명해 한 때 논술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이나 교양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노동자 파업에 대한 미국의 시각



유럽 사람들에게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미국 사회도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처럼 편협하지는 않다. 몇 해 전, 미국 영화의 도시 할리우드에서 작가노조가 파업을 벌인 적이 있는데, 골든 글로브 영화제 시상식이 취소돼 버렸다. 작가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배우들이 영화제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가들이 없다면 배우는 레드 카펫을 밟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단 한 명의 배우도 시상식에 참석해 레드 카펫을 밟지 않았다.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미국 드라마에서 주인공 스코필드 역으로 인기를 끌어 ‘석호필’이라는 한국식 이름까지 얻은 인기 배우 웬트워스 밀러는 “나는 작가들을 지지합니다. 그들은 창작 작업을 함께하는 형제자매이고 그들이 만드는 대사와 각본이 없다면 배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나 방송 작가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을 벌였더니 유명 영화배우와 탤런트들이 작가노조의 파업을 지원하느라 연말 시상식에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더라, 작가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더라…우리 사회에서

는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전형적인 자본주의 사회 미국에서도 이는 상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미국 애니메이션 <슈렉> 2편에 나오는 장면이 있다.



주인공들이 마녀가 사는 성을 방문했을 때, 정문을 지키는 경비가 주인공들을 건물에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하자 “사실은 우린 노조에서 나왔다”고 거짓말을 한다. 정문 경비는 자신이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호소하며 열린 성 안으로 들여보내 준다. 정문 경비가 노동조합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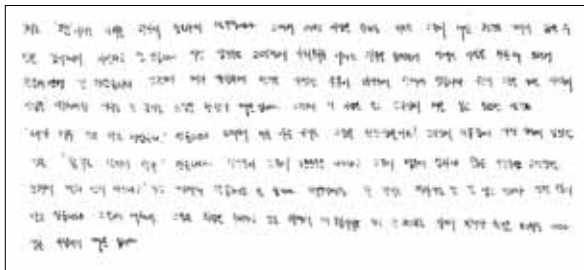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선 거의 그 반대다. 노동조합을 방문하는 것이 주된 일과인 나같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 있다. 회사 경비실에서 안내하는 경비나 도우미 직원들이 웃음 띤 얼굴로 친절하게 안내하다가도 “노동조합에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대개는 얼굴에서 웃음이 싹 가시면서 찐찐맞아진다. 경비나 안내하는 도우미 직원들도 분명히 노동자인데 노동조합에 대해 매우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각

강의 시간에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아 때 묻지 않은 얼굴로 교수(실제로는 ‘비정규직 시간강사’)와 눈을 맞추며 강의를 열심히 들었던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 답안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적었다.

“저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2년 전에 사회복지론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보면서 만들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편견을 가졌던 부분이 노동운동에 관해서였습니다. 웬지 그들을 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회복지론’도 공부했고 ‘장애인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는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 유독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이기적 투쟁’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 정도가 딱 그렇다.



미국산 수입 소고기 관련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한 젊은 여성의 머리를 경찰이 군홃발로 반복해서 짓밟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여론이 들끓은 적이 있었다. 며칠 뒤, 경찰 간부가 그 일에 대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한 기자가 그 경찰 간부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과거의 어떤…노조들의 전투적 집회도 아닌데 왜 폭력으로 진압한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기자의 머릿속에는 ‘노동자들의 집회는 폭력으로 진압해도 괜찮다’는 전제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는 얘기가.

한국처럼 ‘노동자’란 단어조차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는 찾아보기 어렵다. 학원 교사 일을 하는 후배가 중학생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 하니?”라고 물었더니 “나중에 노동자 될까 봐요”라고 답하더라. 아파트 청소 일을 하는 아주머니가 열심히 복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닫히면서 젊은 엄마가 딸아이에게 하는 말이 들리더라. “너 공부 열심히 안하면 나중에 저렇게 노동자 된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란 단어는 그런 취급을 받는다.

심지어 경찰이 수배자를 찾는 홍보전단에 피의자 인상착의를 ‘노동자풍’이라는 표기하는 예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직장인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체교섭을 하고 파업도 벌이며 자신의 행복한 인생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권리를 노동기본권으로 보장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조합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직장인들의 유일한 조직이다. 다소 성급한 결론이지만,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제도권 교육이나 언론을 통해 그러한 지식을 쌓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 제도권 교육의 노동교육

독일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년부터 ‘모의 노사교섭’이 일상화된 특별활동으로 자리 잡혀있다. 학생들 대부분 1년 동안 여섯 차례의 모의 노사교섭에 참여한다. 기업 경영에 관한 각종 자료들이 주어지면 학생들이 스스로 경영자 대표와 노동조합 대표들을 뽑아 임금협상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교과서 목차에는 단체교섭 과정의 서명운동, 항의문건·펼침막·벽보 제작, 언론매체 인터뷰, 연설문 작성 등에 대해서까지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정한 임금인상률에 대한 고민과 단체협약으로 담보되는 노동조건이 노동자의 삶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 능력을 초등학교때부터 길러주는 것이다. 초등학생들이 모의노사교섭을 벌이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



독일 중등학교 사회과목 교과서들 중에서는 340쪽의 분량 중에 93쪽을 노동교육에 할애하고 있는 것도 있다. 청소년 실업에 관한 내용만 29쪽이나 되는 교과서도 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사실들”을 토론 주제로 다룬다.

독일 금속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임금협약, 금융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기본협약 등과 함께 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 노동문제에 대한 신문기사 등이 교과서에 수록된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를 제외하고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관계이며 민주주의와 공동결정”의 장이라고 정의한다.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시민·사회 과목 교과서에서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에 관한 내용을 3분의 1 정도의 비중으로 편성한다. 교과서 목차에 나오는 토론 주제들만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슈	핵심질문	교과
첫째 시간	노임과당 실용직사를 읽고, 역할카드를 사용들을 검토한다	자유들을 제정하고 관심사를 나누고, 자유주요한 공감을 유제하고, 자유시각에 대립한다.
둘째 시간	전략개발단계 학생들은 문헌조별로 자신들이 지한 상황 등을 복원하고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한다 • 우리끼 이해관계사로는 무엇인가? • 어떻게 이해관계사로는 실행할 것인가? • 누구와 협상할 것인가? • 어떤 논거를 사용할 것인가? • 다른 그룹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 교섭전략별로 내용 검토한다	관심한다
셋째 넷째 시간	협상단계 모든 문헌조들이 모여서 교섭을 시작한다. 문헌조들은 • 협상하고 • 동맹을 형성하고, • 협박과 보상을 제공하고, • 이해충돌을 해결하고, • 협상문제를 해결하고, • 중재자나 제3자를 만들고, • 협약을 체결하고, • 대승적제와 안다를하고, • 협상문을 작성하고	필요한 조약을 앞에서 작성하고, 이관카드를 제시한다
다섯째 시간	결정단계 문헌조들을 통하여 이해관계 사정문제를 사인하고, 이해관계) 문헌조들은 그들의 입장을 제시하고, 결정해야할 사항들을 토론한다	사유를 본다
여섯째 시간	평가단계 • 소감을 이야기하고 • 협상과정의 성공요인을 해설하고 • 여러의 결정(들)을 평가하고, • 협상을 평가했다 “당신을 해했는가?” • 자유의 협회도 이해가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 시장 유연성은 일자리를 창출해하는가? 아니면 노동자의 권리에 타격을 주는가?”

“주 35시간 노동은 과연 진보인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프랑스에서 노동조합은 항상 민주주의의 중요한 행위자였는가?”

“협상은 권리의 새로운 표현 방법인가?”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공공 분야의 파업은 가능한가?”



독일과 프랑스 예만 들었을 뿐이지, 선진국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이다. 궁금한 분들은 한국노동교육원이 발행한 400쪽이 넘는 보고서 “선진 5개국 학교노동교육 실태”를 참고하기를 권한다.

한국 학부모들로서는 학교에서 왜 그런 것까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사람이 많겠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지

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을 기회가 있었던 나라들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노동자와 그 가족인 사회에서 일찍이 제도권 교육에서부터 노동조건이 노동자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보고, 노동조건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과 ‘권력’의 관계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른바 선진국을 자처하면서 한국처럼 제도권 교육에서 노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내용의 교육을 받으면서 노동자·경영자·교사·정치인·시민이 되는 사회와, 그러한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이 노동자·경영자·교사·정치인·시민이 되는 사회에서 노동문제를 이해하는 수준은 같을 수가 없다. 산 것과 죽은 것만큼의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고등학생들을 만나 조사해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우리나라는 노동 기본권이 과도하게 보장돼 있어서 경제발전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거나,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고 배웠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것이 마치 균형 잡힌 시각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교과과정 시안개발팀에 참여한 한 교사는 “경제 과목에 노동이라는 단원을 넣자”고 제안했다가 대학교수들한테 “왜 특정 이념을 자꾸 강조하느냐?”는 힐난을 들었다고 호소한다.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이 흔히 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부터 품어보자. 그래야 진실이 보인다.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의료생협, 잘 준비되고 있나요?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을 읽고

차형석 (시사인 기자)



J형에게.

J형. 오랜만입니다. 언제 한번 술 한 잔 하자고 말만 했네요. 언어의 남발. 게으름이 넘쳐난 탓입니다. 어찌 잘 사는지요?

어떤 책을 읽다가 문득 J형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 읽어보았는지요? 출판사의 광고대로라면 100만명이 넘는 독자가 이 책을 보았다고 하네요. 이미 읽은 이

가 너무 많아 무슨 말을 엮기가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공감한 바 있어 전합니다.

지은이는 ‘시골의사’ 박경철씨입니다. 안동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올해 청춘콘서트 등으로 언론에 꽤 알려진 분입니다. 경제전문가로 유명한 분입니다. 얼마 전까지 라디오 경제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읽기가 좋았거든요. 『아름다운 동행』을 읽기 전에 그의 다른 ‘경제서’를 먼저 읽고, 그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판 편집자들이 뽑은 올해의 필자. 이런 코너였습니다. 경제 문제에 밝은 의사. 독서량도 많고, 문화와 미술에도 밝은 사람. 첫 인상은 ‘아, 이런 사람을 두고 르네상스형 인간이라고 하는구나’였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병원에서 그(혹은 그의 동료)가 겪은 일을 담고 있습니다.

병원 얘기 먼저 해볼까요? 형에게나 나에게나 병원은 낯선 곳입니다. 의사들은 불친절한 것 같고, 뭔가 물을라치면 대답도 성의가 없는 것 같고, 대개 그런 인상을 받지요. 형에게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올해 봄, 서울의 어느 종합 병원에 일주일가량 머물렀습니다.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았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비교적 초기에 발견돼 수술도 잘됐고,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그때 병원에 머물면서 이런저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토요일인가, 수납을 하는데 수납처에서 언성이 오가더군요. 한 아주머니가 와서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냐고 항의하고 가고, 그 뒤에 줄서 있던 한 아저씨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화를 내더군요. “병원은 다 도둑놈이다”라는 말로 끝맺고. 몸이 아픈 이들에게 마음의 여유가 없구나 싶기도 하고, 그 화를 온통 받아야 했던 병원 직원이 조금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병원이란 곳 일하기 참 어렵겠구나 싶었습니다.

지은이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평생 동안 경험하는 희로애락의 양은 아마도 일반인들의 만 배쯤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병원을 ‘무뚝뚝한 공간’으로 여긴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문장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별 생각 없이’ 페이지를 넘기다가 중단하기를 여러 차례. 눈시울이 붉어지는 일화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읽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눈물이 많은 이에게는.

그의 책에 나온 몇몇 풍경이 눈에 선합니다. 어느 추운 날, 한쪽 팔이 없는 40대 장애인이 생활고 때문에 그라목손이라는 제초제를 마십니다. 치명적인 독약으로 호흡곤란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에 노모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갑니다. 할머니는 당일 치료비에 대한 지불 각서를 쓰고, 한쪽 팔이 없는 40대 아들을 이끌고 병원 문을 나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지은이가 달려가 택시비라도 하시라고 돈을 건넵니다. 아들이 입은 군복 상의는 위세척을 하느라 젖었는데, 두 사람은 추운 겨울의 칼바람을 맞으며 비틀거리며 계속 걷습니다. 택시비를 드렸으니 택시를 타고 가겠거니 생각하겠죠. 지은이는 그 다음 풍경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응급실의 희

뿌연 창문 너머로 비친 그들은 택시 승강장이 아닌 병원 정문을 향해 걷고 있었다. 당연히 택시를 타고 갈 거라고 생각했던 내 예상은 그저 내 기준의 상식이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그 추운 겨울날 예정된 죽음을 앞두고서도 1킬로미터 이상이나 되는 버스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처절하리만치 고단한 삶의 한 풍경에 마음이 휘청거리게 됩니다. 때로 구름 사이로 새나온 빛 같은 장면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한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약혼자는 열성으로 간호했지만 이 환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겪어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절망감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의사를 찾아옵니다. 그 약혼자와의 결혼식 청첩장을 들고서. 지은이는 말합니다. “한쪽 다리가 절단된 아름다운 숙녀의 미니스커트. 나는 그것으로 그녀가 드디어 가혹한 운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알았다.” 이런 풍경을 글로 접하면서 “일반인보다 만 배의 희로애락을 겪는다”는 지은이의 말이 과장이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인상 깊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사고로 위급한 환자가 병원에 실려 왔습니다. 좀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지은이가 앞에 타고 뒤에는 환자의 보호자와 인턴 과정의 의사가 탔습니다. 피를 너무 흘려 위험한 상황이었고, 구급차에는 피가 난 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의 의사가 당황해서인지 수혈을 해야 하는데 수액을 팔에 꽂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은이는 구급차를 세우고 본인이 직접 수혈을 하고 병원에 도착합니다.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나서 지은이는 “인턴 선생이 당황해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 병원의 후배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 의사가 당황하며 그 인턴 의사가 수혈을 거부하는 특정 종교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화가 무척 났습니다. 그 다음 상황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그리고 얼마 후 꼬마 아이가 병원에 실려 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환자의 부모가 수혈을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역시 그 종교를 믿는 이들이었습니

다. 어린 환자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의사들은 보호자 몰래 수혈을 하고, 아이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수혈한 사실을 알고,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알아본즉 앞에 말한 인턴 의사가 환자의 보호자에게 수혈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지은이가 인턴 의사를 불렀습니다. 인턴 과정을 그만두게 하고, 의사 자격까지도 박탈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집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어린 자식의 운명까지 부모의 신념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너는 왜 의사가 되었나?” 정당한 질문이지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교파에는 의사가 거의 없다. 우리도 대수술을 받으면 무섭고 두렵다. 만약 내가 아파 선생님 같은 분이 담당 의사가 돼 내가 원하지 않는 수혈을 받게 된다면 나는 정신적 불구자가 되거나, 수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죽게 될 것이다.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긴다면 수혈을 거부하는 우리들의 목숨도 중요하지 않은가. 백만명 중에 한명이 앓고 있는 희귀병 치료에는 일류 의사들이 매달리면서, 백만명이 넘는 우리들의 문제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수혈을 받지 않고도 최대한 생존율을 높여줄 수 있는 연구와 배려를 해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지 않겠는가. 이것이 내가 의사가 된 이유다.”

지은이는 그녀의 오류를 덮기로 했습니다. 내과나 외과처럼 수혈 문제로 인해 타인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공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요. 그 의사는 진단 방사선과 전문의가 되었고, 혈액학회 회원으로 대체수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도 알다시피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말하자면 기독교를 믿지도 않고, 앞에서 말한 그 종교에 대해서도 별다른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지은이의 태도입니다. 가치관이 서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태도. 환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은이는 시골에서 의사를 하면서 병원을 찾는 이와 오래 대화를 합니다. 환자의 사연을 들으면서 진료실에서 함께 우는 의사. 의사와 환자가 서로 아름답게 교류하게 되

는 심리적 기제를 프랑스로 ‘라뽀’라고 한다고 하지요. 그 ‘라뽀’가 눈물겹고, 따뜻합니다.

J형. 형이 서울 마포에서 의료생협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형은 사람이 사람을 연민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의료생협을 만들고 싶다고 했지요. 이 책을 읽으면서 형에게 편지를 띄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은이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양심을 지키며 살아왔는가. 그 양심의 가치는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싶어서 자신과 동료, 선후배가 경험한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 질문은 형이나 나에게도 유효한 듯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각자의 ‘어진 마음’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라뽀’의 경험을 우리 일상에서 많이 목격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J형. ‘언제’라는 말 대신에 ‘올해가 가기 전에’ 연락하겠습니다. 형이 고민하는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병원’에 대한 이야기도 그 자리에서 듣도록 하지요. 그때까지 우리 모두 양심을 위해 건투! 

지금 해외에서는

김영미 (아이쿱생협연합회 국제협력팀)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유익한 사업모델인 협동조합 운동에 세계를 주목하게 한 UN 세계협동조합의 해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폴린 그린(Dame Pauline Green)회장의 말에 따르면 세계협동조합의 해는 협동조합 모델을 주식회사 모델과 동등한 위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협동조합 사업 모델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납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폴린 그린 회장은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뉴욕 UN 총회에서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협동조합 운동의 장점을 전세계에 알려내는 모든 협동조합의 단합된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동조합의 규모를 최적화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협동조합은 공공정책과 규정 속에서 협동조합 만의 독특하고 유일한 법적, 재정적 체계가 충분히 반영되길 요구합니다”라고 폴린 그린 회장은 설명하며 지금까지 협동조합이 합당한 인정을 받지 못해왔음을 강조하였다.

폴린 그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종 ‘Global 300’을 발표하였고 ‘The Global Development Co-operative(협동조합개발지원기금)’를 공식 선언하였다. 이틀간의 공식 행사와 토론회의 최우선 주제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명도를 높여 협동조합 진영의 활동 범위를 다른 사업 모델과 동등하게 넓힘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전세계 대중 인식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것이었다.

새로운 방식의 협동조합 지원 기금 등장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협동조합은 2012년부터 새로운 개발 기금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세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대출을 위해 5천만 US달러 모금을 목표로 Global Development Co-operative(GDC)가 추진되고 있다.

폴린 그린 ICA 회장은 이 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작은 ‘협동조합의 자조’라는 운동의 기본 원칙 중 하나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기금은 개발도상국 내 수천의 협동조합인들을 돕는, 세계협동조합의 해의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유산으로 남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조합원 소유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사회를 전 세계에 자리잡게 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도록 GDC를 기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IYC를 계기로 공동행동에 나서고 있는 협동조합 진영

코퍼레이티브 그룹(영국 Co-operative Group)의 사무총장 피터 막스(Peter Marks)는 세계 경제 체제에서 정당한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협동조합운동 진영이 코퍼레이티브 그룹과 영국 협동조합 운동 방식들을 참고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10억 US달러 매출, 6백만 조합원을 기반으로 시장 우위를 점함으로써 2000년대의 부진으로부터 탈출하며 코퍼레이티브 그룹의 이례적인 변화를 이뤘던 피터 막스는 사업 변화의 시점은 협동조합 내 합병을 통해 경영, 운영을 현대화하고 더 나은 공급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고 설명하였다.

협동조합 간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해지는 이 때 국제협력이 원활히 이루어

지려면 의사결정의 집중화, 경영 질서, 효율적인 엄격한 관리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서로 다른 나라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 브랜드와 명확한 공동 목표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험난한 경제상황 속에서 국제협력이라는 도전을 성공시키려면 무엇보다 협동조합 정신이 그 중심 뿌리가 되어야 한다고 피터 막스는 강조했다.

데잘딩의 르루, “협동조합 진영은 자신의 발전가능성을 꼭 움켜쥐어야 한다.”

2012년 UN 세계협동조합의 해 선포식이 열린 뉴욕에서 세계협동조합, 은행 리더들에게 연설하게 된 데잘딩 그룹(Desjardins)의 대표이자 최고경영자인 모니크 르루(Monique Leroux)는 협동조합이 세계 공동체가 직면한 주요한 시련들- 경제적 도전, 사회적 도전, 환경적 도전-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이라고 주장하였다.

르루는 특히 국제규제위원회들이 협동조합이 보여주고 있는 효율적인 대안 체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실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미국만큼이나 국가부채 문제로 국가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제 위기에 처한 유럽 또한 더 많은 협동조합적 거버넌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지도자들, 공공기업 그리고 협동조합들 간의 더 많은 협동을 통한 다양한 경제체제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사회적 경제 간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러한 협력 체계가 없다면 경제, 금융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은 언제나 세계금융위기를 기회로 성장해왔다고 르루는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정부가 기존 기업 모델과 협동조합의 차이점에 대한 부족한 인식에서 탈피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 변화는 많은 협동조합들이 이루어낸 주목할만한 성장과 새로운 협동조합들

의 발전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금융환경 속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 기업에 비해 협동조합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U, 경제성장을 실현시키는 모델로 협동조합을 인정하다

협동조합을 위한 2012년이 도래함과 동시에 EU는 협동조합을 경제성장을 보증하는 필수적이고 긍정적인 사업모델로서 인정하였다.

협동조합 사업 모델의 승인은 EU의 “혁신 의제”의 일환으로 이 의제에서는 개발원조에 대한 계획 개요를 서술하고 있다. EU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공적 개발원조 연합기구로 2012년에는 538억 US달러, 즉 전세계 원조의 반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제 발전은 적합한 사업환경을 필요로 한다. EU는 지역 제도 및 사업 가능성을 끌어올리고,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촉진하여 경쟁적인 지역 민간부문의 발전을 지지하여야 한다”라고 의제에 표명되어 있다.

유럽 협동조합(Cooperatives Europe)의 클라우스 니더랜더(Klaus Niederländer) 이사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공적개발원조 기구의 전략 문서에서 지역사업에 관여하는 주요 기관으로 직접 언급된 것은 협동조합의 큰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EU정책 안에서도 ‘협동조합은 전세계 곳곳에서 경제사회 발전의 주역이다’ 와 같은 인식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2012년 ICA의 주요일정>

2012년 UN 국제협동조합의 해		
1월	20일	협동조합 국제회의(에티오피아)
5월		ICA유럽지역총회
10월	8~11일	2012세계협동조합 정상회의(캐나다)
11월	25~30일	ICA-AP지역총회, 고베(일본)
미정		ICA미주지역총회
미정		ICA아프리카지역총회 및 제 10회 ICA아프리카각료회의, 키갈리(르완다)
10월 31일~11월 2일		제3회 ICA엑스포, 맨체스터(영국)

(출처: ICA Digest 73호 및 ICA eDigest 창간호(5월))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에서 시작한 식품안전 운동이 자연스럽게 농업 지킴이로 이어졌으며, 농업 지킴은 곧 환경 지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비 기준을 바꾸는 활동과 사업, iCOOP생협은 ‘윤리적 소비’를 실천합니다.

조합원이 되는 방법

1. 매월 일정액의 조합비를 내고 생협 조합원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가는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들이 물품 유통마진이 거의 없이 이용하는 가격으로, 일반가에 비해 평균 20%가량 저렴합니다. (사)아이쿱(iCOOP)생협연대는 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 회비(조합비)를 내는 대신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여 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물류효율을 높여 소비자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확대를 통해 생산자는 생산안정이 가능하게 한 우리 생협의 제도입니다.

전화가입 : 1577-0014

인터넷 가입 : <http://www.icoop.or.kr>로 접속하여 상단의 [조합원가입신청]을 누르시거나 <http://www.icoop.or.kr/coopmall>로 접속 후 이용안내 → [조합원 가입신청]을 누르세요.

2. 매월 조합비를 내지 않고 생협일반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범매장 제외)

우리 생협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물품을 보고 구입하지 못하는 점이 있고, 생협물품에 익숙하지 못해 조합비를 내고 이용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합비를 내지 않고 일반가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가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은 높지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협물품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인터넷 주문과 가정에 직접 공급하는 물류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를 내고 이용하는 조합원께서 일시적으로 조합비를 낼 수 없을 경우 일반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쿱(iCOOP)생협은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아이쿱(iCOOP)생협 가입 및 상담 전화 : 1577-0014

자연드림 전국 매장 안내 : 1577-6009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CO-OPERATIVES JOURNAL vol.5 Winter 2011

The Journal of the iCOOP KOREA Cooperative Institute

Sustainable local communities and cooperatives :

Sustainable local communities and cooperatives

KIM, Chanho

'Dure' co-op's contribution to local communities and its significance

KWON, Sunsil

Korea Women Link Cooperative's co-welfare business

PARK, Jeseon

Sharing and Cooperation lead to healthy life: Health Cooperative

CHO, Byeongmin

Hansalim Co-op's 'Revival movement of the local communities'

JEONG, Gyuho

iCOOP KOREA collaborates with local communities

KIM, Daehoon

Japanese coop's contribution to local communities

Kitakawa Taichi

Round-table :

Cooperatives' sharing movement from some local-activists' perspective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서울시 구로구 함동 1-1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2호

TEL 02) 2060-1373 FAX 02) 2060-1374

E-Mail icoop-institute@hanmail.net

www.icoop.re.kr

재생종이로 만든 책

